

발간등록 번호	운영지원팀 2021-12-31-02
------------	------------------------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개발 연구

2021. 12.



인천광역시활센터
Incheon Metropolitan Self-sufficiency Center

【최종성과품】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개발 연구

2021. 12.

발주기관 : 인천광역자활센터

수행기관 :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연구진

- 연구책임자 : 도지완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수정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
 - 연구보조원 : 전찬경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근로·복지 연계 제도로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 구축이 필수적임
- 인천시의 경우 그간 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의지가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음(인천복지재단, 2020)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천형 자활 일자리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있음
 - 이는 기존의 인천 자활환경 및 자활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선행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지점으로, 자활센터 실무자의 견해는 물론, 자활사업단 참여자, 자활기업대표를 모집하여 각자의 특성에 따른 경험을 생생히 녹여내고자 함
- 동시에 인천시 자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과업을 이어, 현재까지 제시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천의 자활환경 진단과 자활사업 발전 방향 및 개별 자활사업을 제시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재진단 및 점검하는 것임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됨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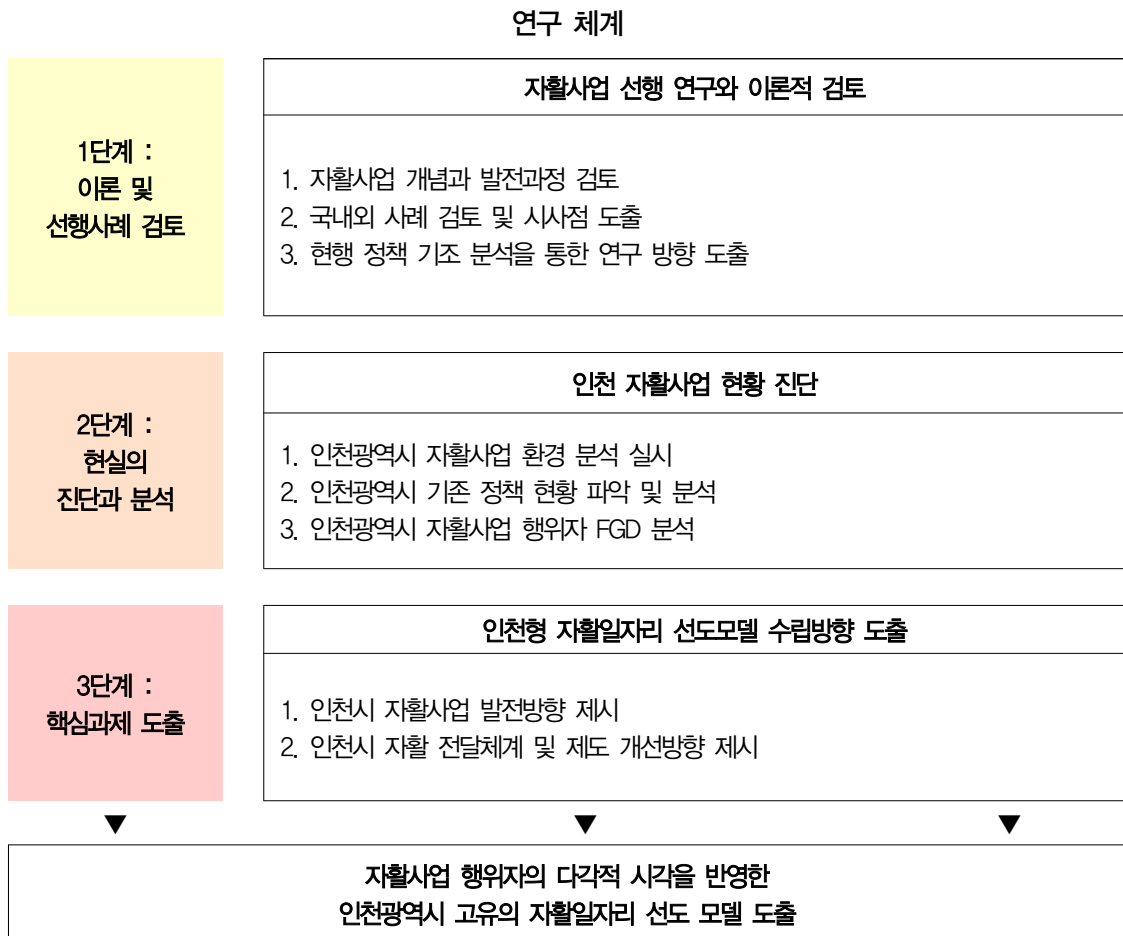
시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도 : 2021년 ▪ 중기계획 : 2022년~2024년
공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일대 (9개 구군, 11개 지역자활센터)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자활사업 및 정책 현황 분석 ▪ 해외 사례 및 정책 분석(근로 연계형 복지 정책·서비스) ▪ 국내 타 지자체 조례 분석 및 자활사업 선행 사례 분석 ▪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및 자원 SWOT 분석을 통한 인천 자활 환경 진단 ▪ 자활사업 FGD 실시, 인천 자활사업 개선방향 논의 ▪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수립을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본 연구의 방법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FGD를 통해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인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기업 대표, 자활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는 점임
- 그 이유는 우선, 자활사업은 그 특성상 행위자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제도로, 특정 측면에 치우친 견해가 아닌 다각적인 시각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또 다른 이유는 FGD(또는 FGI)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개별 면담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과 토론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참여자 담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보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제3절 연구의 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체계에 따름



제2장 자활사업 이론적 논의와 정책동향

제2절 자활사업 개념과 정책 현황

1 자활사업의 개념 및 특성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지제도를 벗어나게 설계된 근로연계복지정책(류만희, 2007)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즉,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도입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시행과 함께 제도화되면서 그 성격이 다소 변모함
-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접목 가능성’을 실험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힘
 - 자활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제시하였던 생산적복지의 대표 상품 중 하나로서 제시되어,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에 부딪히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 결과 우리사회의 근로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다양한 모형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노대명, 2010)
- 자활사업의 그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여전히 한계가 잔존한다는 부정적 평가 역시 병존
 - 자활사업이 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보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관리하고 복지제도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보완적 기능만을 강화하도록 요구받아 왔던 것으로 평가(노대명, 2010)
 - 제도화 이전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성격이 강했던 초기 자활사업의 현장구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책으로서 제도화된 자활사업정책은 그 목적과 목표가 상이하어 제도화 시기부터 현재까지 20여년 간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야 했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장 실무와 정책

목표 및 성과관리의 상이함 등의 비판이 잔존

-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모호한 개념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조건부 수급’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탈빈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빈곤화를 제어하는 장치이자 빈곤화를 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비판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정수남, 2019)
 - 즉, 특히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한계로서 지목되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수급’의 장치로서 자활사업이 활용될 뿐, 실질적인 탈빈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2 | 자활사업 정책 및 전달체계 현황

- 기본적인 자활 인프라 및 전달체계에 대해 인천복지재단(2020)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를 제시한 바 있음
 - 첫째, 자활사업 인프라의 양적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전달체계 주체간 불분명한 역할 분배 및 기능적 구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둘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간 모호한 역할구분 및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적 분화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기능재편 필요성을 제시함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자활사업 참여자수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참여자)	88,839	87,226	83,368	96,659	98,980	101,626	99,574	97,512
보건복지부	86,399	79,311	69,958	81,651	80,990	75,532	69,925	71,600
고용노동부	2,440	7,915	13,410	15,008	17,990	26,094	29,649	25,912

주 : 1) ‘보건복지부(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출처: 박은희, 박은선(2019). 일·복지 연계 자활사업 효과를 높이자!, 대구경북연구원

- 자활기업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1,176개의 자활기업이 있으며, 지역 자활기업이 1,136개(96.6%), 광역자활기업 37개(3.1%), 전국자활기업은 3개(0.3%)임

자활기업 현황(2019년 말)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기업수	1,136	37	3(서울2, 전북1)	1,176
참여자수(명)	6,636	1,160	6,165	13,961*

* 지역과 광역-전국자활기업 중복참여인원 2,663명 제외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 자활기업 지원제도는 주로 창업자금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기금 활용으로 구성됨

- 창업자금 지원은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매출적립금 지원 시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 가능
- 한시적 인건비 지원의 경우, 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
- 신규 창업(인정) 자활기업의 수급자 채용 유도 및 초기 안정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있음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별 구분표

구분	수급자	비수급자	비수급자
지원금액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 (주차·월차 수당, 실비) 최대 5년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 (주차·월차 수당, 실비) 최대 6개월 (3개월) 100% (3개월) 50%	월 250만원 이내 (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
지원기간	최대 5년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최대 6개월 (3개월) 100% (3개월) 50%	최대 5년
재원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기금
신청기간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	인정과 동시 신청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

자료: 보건복지부(2021)

제3절 국내·외 자활사업 사례 및 벤치마킹

1 해외 근로연계복지 사업 벤치마킹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와 유사한 개념
 -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을 제공한다고하는 부분은 ‘근로 연결 모델’의 특성에 해당하고, 자활사업의 제반 사업으로 주로 제시되는 직업기술 교육·훈련 및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노동 역량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모델’에 해당함

1) 북미권: 미국 및 캐나다

■ BAYCAT¹⁾

- BAYCAT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예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영화 제작, TV 프로그램 제작, 애니메이션, 그래픽 및 웹 디자인 등의 기술, 교육, 인성교육, 고용까지 이어주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씨티뱅크, 야후 같은 회사들을 위해 비디오 광고 등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정부나 개인, 기업 재단의 기부금 역시 활용하고 있음.
- 청소년들의 교육-고용의 선순환 유지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후원금이나 정부의 복지재원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탈수급 및 자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접목이 요구·시도된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되는 자활기업들에 적용 가능한 사례

■ Rubicon program ²⁾

- Rubicon program은 전과자, 장애인,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루비콘 조정서비스, 루비콘 베이커리 등을 통해 수익창출과 함께 일자리 훈련 및 직접고용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임
- 루비콘은 수급자들의 직업교육 체계화를 시도하였으며, 지속적인 직업 교육을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대학에의 진학 지원, 지원받은 인력이 루비콘의

1) <http://www.baycat.org/>

2) <http://www.rubiconprograms.org/>

교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직업 교육 결과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음

■ Juma Ventures³⁾

- Juma Ventures는 미국의 15-29세의 저소득 청소년들 중 특히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임
-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금융지원, 직업 탐방, 1대1 멘토링 및 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Juma Ventures의 도움이 받은 바 있는 선배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선순환이 가능한 모델’로서 주목할만한 사례임

■ Pioneer human services⁴⁾

- Pioneer human services는 판금제조 및 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63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시작되어 약물중독자, 노숙인, 출소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한 최초의 사회적기업임
- Pioneer human services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과 취업자 복무관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홍보 등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아웃소싱을 하는 등 전문적인 경영을 운영한다는 것과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 Room to Read⁵⁾

- Room to Read는 전세계 빈민 지역 어린이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 가난한 지역에 학교와 도서관을 짓고 학습 교재를 개발, 교사를 트레이닝하며, 각 국가 교육부와 협력해 시스템을 바꾸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음
- 골든만삭스, 크레딧스위스, 힐튼, 오리클, 스와로브스키 재단 등 굴지의 기업·

3) <https://www.juma.org/>

4) <https://pioneerhumanservices.org/>

5) <https://www.roomtoread.org/>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Room to Read의 간접비는 17%로 행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의 유·무상 자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특징임

■ Roca⁶⁾

- Roca는 1998년 메사추세츠 주정부의 'Teen Challenge Fund'로부터 13만 4천 달러를 지원받아 10대 임신부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어 Roca는 켈스, 리베르 등 여러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출소자 혹은 미성년 부모 등에게 교육, 고용,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Roca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 및 청소년의 사회재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참고할만한 사례

■ John's Bakery⁷⁾

- John's Bakery는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위기청소년과 홈리스 청소년에게 제빵을 통한 직업훈련과 학습기회를 제공함
- John's Bakery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최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이를 차별화전략으로 세워 성공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전통적인 프랑스 방식으로 유기농 이스트 빵과 수제 과자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인증된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공급자들에게서 최고의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곳의 근로자들은 교육과 훈련을 이수함에 있어 개인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봉사 활동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봉사 혜택을 얻게 됨
- 마케팅 전략 및 체계적 훈련 방식,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인력 수급 방식에서 참고할만한 사례

6) <https://rocainc.org/>

7) <https://stjohnrestaurant.com/>

2) 유럽 및 스페인

■ Fifteen⁸⁾

- Fifteen은 피프틴 재단에서 운영하며, 피프틴 재단은 요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확보한 이윤을 불우한 청소년들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음
- Fifteen은 직업 역량 강화 교육과 정서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직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Fifteen은 레스토랑 내에 전문 상담사를 두고 청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함

■ Fageda⁹⁾

- La Fageda는 정신장애인의 노동력을 통해 낙농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이들은 스페인에서 업계 내 낙농업 제품 3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정신 장애인이 만든 유제품이라는 고객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젖소에서 원유를 얻는 모습부터제품의 생산까지의 전 공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생산되는 치즈, 요거트, 우유 등 각 상품마다 생산에 참여한 직원들의 얼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창의적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음
 -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선 행위로서가 아니라 맛이 좋아서 La Fageda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윤리적 소비를 장려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과업이지만 그보다도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시사함

8) <http://www.fifteen.net/>

9) <http://www.fageda.com/>

2 | 국내 자활사업 벤치마킹

■ 타 지자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체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함

- 분석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 혹은 아이템이 자활 근로자의 취업 및 창업에 있어 역량향상을 가능케 하는가?
 - 둘째, 사업의 운영 방식 혹은 홍보 전략이 효과적인가?
 - 셋째, 지역사회가 자활사업단 혹은 자활기업에 대한 후원, 구매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한가?

1) 경기도 광역 자활기업 ‘핸디아’

■ ‘핸디아’는 목공상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자활기업임

■ 특징 및 강점

- 목공생산 및 가공업을 주 내용으로 함으로써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 자활 근로자의 기능 향상이 가능함
- 숙련된 기술을 가져야만 하는 목공예품 생산뿐만 아니라, 키트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목공기술이 덜 숙련된 자활근로자도 단순 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일반소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생활목공자격과정을 운영하여 목공기술자를 훈련, 양성하고 해당 기업 인력으로 재투입 할 수 있어 기업 내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임

2) 경상북도 광역 자활 쇼핑몰 ‘스물세그루’

■ ‘스물세그루’는 경상북도 자활생산품 인터넷 쇼핑몰임

■ 특징 및 강점

- 도내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내 상품들 중 우수제품을 선정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자활생산품의 경쟁력 확보

- 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

3) 부산 자활기업(협동조합) ‘자유자재은행’

■ ‘자유자재은행’은 목공상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자활기업임

■ 특징 및 강점

- 공동구매 및 건축자재은행의 체계적 운영으로 원가절감 및 자원 절약
- 공동구입 과정에서 자재구매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된 자재사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자활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및 추가 고용창출 역량 제고
- 건축·집수리 자활기업은 대부분 소규모로 재사용가능한 자재 보관 및 관리가 어려워 많은 자재가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 및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건축 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잔여자재의 효과적인 재사용시스템을 마련

4)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인 꿈지, 하루숲, 그담과 직영사업단인 나무살림을 ‘생활속’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생산한 자활상품을 판매·유통하는 주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① 그담

- ‘그담’은 도자기 페인팅 공방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자활기업임
- 생산 물품은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스토어 ‘생활속’ 외에도 국내 최대 인터넷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를 활용하여 판매함

■ 특징 및 강점

- 다양한 판매망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많은 종류의 디자인 상품을 출시함
-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홍보와 자활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려함

② 하루숲

- ‘하루숲’은 천연EM비누제품의 기술교육을 통해 자활참여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함
- 손빨래비누, 천연물비누, 편백물비누, 샴푸, 주방세제 등 다양한 천연비누제품의 생산 및 연구와 유통 및 판매를 시행함

■ 특징 및 강점

- 네이버 ‘해피빈’에서 시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판매처를 확보함
-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품을 생산함
- 깔끔한 포장을 통한 선물세트를 제작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력을 상승

- 해외 사례 중 근로연계 복지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지향점 및 인천광역시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구축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과 업종을 초월한 적극적인 연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홍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Room to Read의 대기업 연계전략
 - John's Bakery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인력 수급방식
 - 둘째,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이전에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임. 이는 단순히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의 zero sum 논의가 아니라, 품질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할 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외시 될 수 없는 지점임
 - Fageda의 사례 및 John's Bakery의 사례
 - 셋째, 체계적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임. 즉, 단순히 사회적 약자 그룹의 고용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또 진출한 선배그룹이 후배그룹을 멘토링 하는 등의 선순환구조를 가능하게 함
 - Fifteen 재단의 사례
 - Roca의 사례
- 상기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인천시 자활센터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음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자활일자리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전략
 - 둘째,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분야를 초월한 연계전략
 - 셋째, 진정한 탈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 훈련전략

제3장 인천 자활사업 진단

제1절 인천 자활인프라 현황

1 인천광역시 기본 현황

1) 기초자료 분석 결과

■ 인구 변동 및 지역 인구 특징

-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021년 기준 2,948,37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여성 100명당 남성인구 100.3명)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5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성비 격차에 해당함
-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2020년 이전까지는 유일하게 지속적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0.60% 감소
- 노령화지수¹⁰⁾를 살펴보면, 8대 광역·특별자치시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증감비율로 보았을 경우에는 세 번째로, 타시도에 비해 완만한 증가폭을 보임
- 군·구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는 미추홀구(16,853명/km²) 및 부평구(16,436명/km²)이며 가장 밀집도가 낮은 구는 용진구(120명/km²)임

■ 인천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소득과 소비 실태 중 인천시 주민의 1인당 총소득¹¹⁾은 2020년(추산¹²⁾)

10) 유소년 인구(0세-14세) 100명당 노인 인구 비율로, 높을수록 유소년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음을 의미함(산식: {고령인구(65세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11) 총처분가능소득을 지역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소득으로, 지역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 각 측면이나 경제주체간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냄(산식: 1인당 지역총소득=전체(사용)총처분가능소득÷추계 인구)

12) 2019년 5월 공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임

기준 1인당 32,318천원으로, 전국 8대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 및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광역시에 해당함

- 인천광역시 주민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국 8대 시도 중 두 번째이며 이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치임(2020년 기준은 4.6%으로 서울시와 동일)
 - 다만, 2021년에는 전년대비 상당한 하락세를 보임(전년대비 -0.6%)
- 청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2021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17년 이래로 인천광역시의 고용률은 꾸준히 40%대를 기록하며 상위 순위에 머무르고 있음
 - 타 광역시의 변동폭과 비교하면 인천시의 그래프는 완만한 편으로,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임
-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실업율을 나타냄(2021년 7.9%)
 - 연도별 변동폭으로 보면 인천시의 그래프는 변화의 폭이 완만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실업률 변동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동시에 2017년 이래로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인천시 산업별 현황 및 사업체 분석

- 인천시 산업별 현황 및 사업체 분석의 경우, 『인천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인천복지재단, 2020)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¹³⁾
- 취업인구 변화
 - 인천광역시의 취업률(5.2%)은 서울특별시 1.4%, 부산광역시 2.4%, 경기도 2.9%로 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취업률 증가를 보임
 - 인천광역시의 여성 취업인구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 취업인구 자체는 타 광역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서울 1.9%, 부산 3.8%→인천

13)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최신의 자료가 2019년 자료이며, 이러한 경우 2020년 인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인천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연구와 동일한 분석결과가 산출되기 때문

9.5%), 전체 취업인구 내 여성 비율의 경우에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게 나타남
(서울 3.5%, 부산 4.2% → 인천 3.0%)

■ 세대별 취업인구 변화

- 세대별 취업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취업률 증가폭이 넓은 세대는 60대 이상의 노령인구임(인구 증감율 29.5%, 취업률 21.8%)
- 20-30대 취업률 증가를 서울, 부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천시의 취업률의 경우 증가 비율은 약간 높고 감소비율은 약간 적게 나타남. 이는 앞서 청년 취업률을 광역시도별로 비교한 지표와 일치하는 결과임

■ 사업체 · 종사자 수 변화 및 현황

-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인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882개, 증가 폭 26.9%)과 부동산 임대업(8,175개, 증가 폭 21.5%) 및 출판 및 영상업(1,023개, 증가 폭 20.5%)임
- 2018년 기준 인천광역시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제조업(247,361명, 비중 23.11%), 도매 및 소매 업(146,626명, 비중 13.70%), 숙박 및 음식점업(111,297명, 비중 10.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1,680명, 비중 9.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업체 및 일자리 생존율

- 인천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14년 사업체 개수는 183,595 개, 종사자 수는 931,822명에서, 2018년 사업체 202,493개, 종사자 수는 1,070,454명으로 증가하였음. 아울러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5.08명에서 5.29명으로 증가함
- 사업체 생존율과 일자리 생존율을 살펴보면, 생존사업체들은 평균적으로 1.11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평균 4.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1명이 넘는 고용증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음

■ 산업별 사업체 생존율 및 일자리 생존

- 산업별 생존율 및 일자리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인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72.8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62.12%), 금융보험업(61.95%)임

- 일자리 생존율의 경우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6.12%), 금융보험업(88.78%), 교육서비스업(83.19%), 제조업(78.34%) 순으로 높았음

■ 군구별 사업체 생존율 및 일자리 생존율

- 창업사업체 수가 한해 1,000개 미만인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하고, 사업체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57.57%), 남동구(53.92%), 서구(51.17%) 순이었음
- 일자리 생존율을 살펴보면, 동구(75.71%), 연수구(73.01%), 서구(71.53%) 순이었음. 일자리 확장성을 살펴보면, 중구(2.08개), 연수구(1.96개), 서구(1.45개) 순이었음.
- 이상의 지역들의 경우, 사업체 및 일자리 변동에서 긍정적인 양태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의 확장성이 1개 미만이거나,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함. 이렇게 사업체 창업률 및 생존률의 지역별 간극이 큰 점은 도농 복합 도시로서 인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

■ 산업별 군구별 사업체 생존율 및 일자리 생존율

- 군 구별 격차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이라 할 수 있음. 해당 업종들의 비중은 작게는 9% 이상에서 많게는 50%까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구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4개 업종 중 모든 군구에서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뿐임

3) 인천 광역시 자활인프라(인구 및 산업·경제) 경향

■ 인천광역시 내 자활인프라인 인구변동 및 취업률 변동, 산업별 사업체 생존률 및 일자리 생존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드러남

- 인천광역시의 기본적인 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의 축소보다는 증가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타시도에 비해 성비격차가 상당히 적고 노령화 지수는 타시도에 비해 완만한 증가폭을 보이는 특징을 보임
- 인천광역시 주민의 실업률은 서울시 제외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다만, 여성

취업률의 경우 이전보다 상승세에 있으나 전체 취업비중 중 여성의 비중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고용률은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고 실업률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율의 변화추이 및 실업율의 변화추이가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도시로 각각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특징임
- 사업체 및 일자리 생존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거나 그만큼 3년 이내 비생존율 또한 높은 상태
- 산업체별 일자리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순이며 군 구별 격차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의 경우에 군구별 차이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년간 모든 군·구에서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이 유일함

제2절 인천 자활사업 진단

- 전반적인 인천시의 자활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의 다양성 및 수익성을 확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임

1) 인천광역자활센터 자원 및 사업 진단

-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전국 유일의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로서 충분한 이점이 있으나 그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인천광역자활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진단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9개 분야 사업 중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은 실행하고 있지 않으며, 홍보사업이나 협력사업의 경우 내용적 다양성 및 충실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자활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음

- 셋째, 교육사업의 경우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 참여자들의 수요에 따른 보다 다양한 직무 및 근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인 직무소양 교육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탈수급 이후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분야를 선정, 각각에 해당하는 교육을 세미나 형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홍보사업의 경우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광역자활센터의 주 업무 목표 중 하나를 지역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업의 홍보로 선정하고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업무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외협력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사기업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여타 광역센터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실제 협력 기관이 다양하거나 많지 않음. 광역자활센터의 주요 역할로 공공 및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를 상정하고, 시도지청은 물론 유관기관 민·관 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기업 및 소규모 업체들과의 탄탄한 연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진단됨
- 특히 강조할 지점은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현재의 행정·관리적 성격만을 띤 업무 구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및 참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무엇보다 민·관·학 사업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 권고됨
- 더불어 지역 자활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아래로부터의 사업추진’이 추가적으로 제시됨

2) 인천시 지역자활센터 자원 및 사업 진단

■ 인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경향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지역 내 자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세차 및 청소, 집수리, 임가공, 택배 이외 공공영역 연계가 가능한 사업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수익성 확장이 가능한 사업분야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외식업 및 제조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겠음
- 더불어, 지역센터의 사업들이 각각의 센터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천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그리고 광역자활센터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인천시의 지역자활센터는 수적으로 보았을 때 활발하게 사업단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홍보성 및 다양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진함

■ 인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사업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첫째, 지속적인 매출유지가 가능한 공공연계 사업 이외에 일반 시장 및 지역 소비자를 통해 수익성 확장이 가능한 사업분야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임가공 등 단순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근로역량 및 탈수급 의지를 촉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따라서 임가공 및 부품조립 등 단순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사업을 배치하되, 관련 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업무역량의 실질적인 향상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음
- 셋째, 관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 및 세탁, 택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관련 자재 구입이나 홍보의 측면에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홈페이지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생성하는 것을 추천함
- 넷째, 홍보 및 마케팅 측면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다시 말해, 관을 통한 홍보 및 자체 홍보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경로를 통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이때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협회의 홍보업무의 주력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지역자활센터 협회의 추진 및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참여자를 포함한 자활센터 내 인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인천시 내 대학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봉사센터 등이 있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제3절 인천시 자활 현황 SWOT 분석

■ 인천시의 인구 변동 및 산업·경제 분석을 포함한 인천시 기본인프라 현황과 자활유관기관 현황 및 인천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인천시 자활 현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함

■ SWOT분석을 통한 4가지 전략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SO전략(강점강화 기회포착)전략

- 전 연령 의 높은 취업률 증가세에 편승, 자활참여자의 적극적 취업연계를 추진
- 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활용, 보다 많은 자원 연계 및 지원 추진
- 시의 튼튼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충분한 관내 홍보 추진
- 인천시 시민의 높은 구매력을 활용, 매력적인 제조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자활사업의 수익성 향상

② ST전략(강점강화 위협회피)전략

- 풍부한 민·관·학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아이템을 활발히 공모, 공공자원 연계 외 민간의 소비 창출이 가능한 사업분야를 발굴함
- 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활기업 창업 후 탈락 방지 및 사업체 유지를 위해 적극적 홍보 및 지원을 추진함
- 기술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자활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여 청년 참여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함

③ WO전략(약점보완 기회포착)전략

- 타시도에 비해 지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인천시민의 소비 촉진을 시도하기 위해 자활상품의 지역화폐 구매를 가능하게 함
-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 인천시 특색 상품 및 굿즈 등을 개발하여 자활상품으로 활용
-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충분한 발굴을 통해 여성 취업률을 고취함

- 부족한 교통자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 및 예약 플랫폼을 통해 자활상품의 접근성을 증진함

④ WT전략(약점보완 위협회피)전략

- 자활기업 확장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관광산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
- 지역주민의 다양한 후원경로를 탐색, 후원상품을 개발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함

제4장 인천 자활사업 발전 방향 논의

제1절 자활근로 참여자 FGD

조사결과

- 자활참여자들은 주로 ‘재충전의 시간’, ‘계도기간’, 혹은 ‘역량 강화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자활사업을 정의하고 있었음
- 참여자들은 자활근로 자체가 보장하는 근로여건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몇가지 제도의 미비한 점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새로운 사업단의 증설보다는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둘째, 자활근로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셋째, 청년들이 참여할 만한 사업분야가 증대되어야 하며, 청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넷째, 자활참여자들의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별도의 학습지원이 필요함
- 종합하면,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사업은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자활’이 가능하도록 매출보다는 참여자의 역량강화에 높은 목적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조사결과

- 자활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이하 대표)들은 자활기업 제도의 전반적인 영역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자활기업 대표들은 자활기업을 ‘좋은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활기업 대표들은 자활기업을 운영·종사하며 느끼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활기업을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정의는 자활기업 혹은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활기업 특성 1: 기업보다는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성격
 - 자활기업 특성 2: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완전 자립상태
 - 자활사업 특성 3: ‘탈수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급탈락 가능성’
 - 자활기업 특성 4: 자활사업단에 비해 센 업무강도
- 결국 자활기업은 앞서 언급한 자활기업의 특성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어려워 지원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 둘째,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들로 인해 모순점이 존재하며 이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셋째, 자활센터와의 유기적 관계가 아닌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 반면에 상기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강점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로는, 일반 시장의 기업과 비교하여 신뢰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임
 -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며 이에 대한 근

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임

- 세 번째, 수급자인 대상자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점
-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공의 지원과 안정적인 매출처의 존재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만한 매력적 자원이라는 점

■ **자활기업의 자립가능성을 고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음**

- 첫째, 자활기업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활기금 사용에 보다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활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활기업과 자활센터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대상자의 탈수급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몇 년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혹은 자활센터 내 사업단 경유 후 자활기업으로 이어지게끔 단계별 사업 전환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언급됨

제3절 자활사업 실무자 FGD

조사결과

- 자활센터 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을 조건부 수급자인 참여자의 관점에서 ‘유예된 시간’,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 특성을 보임
 -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은 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크다는 점과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특성 역시 함께 언급됨
 - 더불어 수급자가 느끼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역시 특성으로서 언급됨
- 실무자 FGD의 경우, 앞선 두 그룹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기업대표’ 그룹에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해석하고 이에 대해 개선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 앞선 두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 이슈는 크게 세가지로, 첫 번째는 참여자들의 자립 저해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자활정책의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 및 참여자 특성과 맞는 사업분야에 대한 제안임
-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함
 -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수급자들의 탈수급 기피현상을 제도가 자활참여자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한다는 점이 언급됨
 - 두번째로는 자활에 유입되는 참여자들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이미 한번 탈락이 되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재진입이 어려운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 세 번째로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의 5년간의 기간을 통해 될 수 있는 한 수급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안정성’을 추구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며, 이러한 안정성은 수급자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임

- 지역센터의 대부분은 자활근로단 사업의 개시과 근로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음
 -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임대료 혹은 초기 비용의 경우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언급됨
 -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의 사업들이 참여자들의 욕구조사에 기초한 것이 보다는 센터장의 제안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점
 - 세 번째는 시도하는 사업의 분야가 ‘공공의 이익’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매출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라는 것임
 - 네 번째는 주로 제안된 사업분야가 타 지자체 센터에서 성공한 사업 아이템에 해당하는데 이는 인천시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임
 - 다섯 번째로는 실무자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우선,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상담 계열 전공으로, 자활사업이 추진하는 업무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언급됨
 - 더불어 참여자들이 근로를 불이행 하는 상황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투입되거나 그로 인한 민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 역시 제한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됨

- 결국 자활사업단 혹은 자활근로의 경우 센터 실무자는 물론 참여자, 그리고 매출의 부분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만 하는 과제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참여자의 근로여건 조정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역센터마다 내부 지침이 달라 근로여건 조정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강화, 즉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센터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인천 시 내 자활센터의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해당 부분은 참여자와 실무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우선 실무자의 경우,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복지부의 자활수급이 분리되어 적용됨으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및 실제로 노동시장에 연계되기 어려운 참여자들이 자활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음. 참여자들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게 되면 근로를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수급비로 자격증만 취득해야하고 이러한 점이 실제 생활비가 모자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함.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조건부 수급기간에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자활사업 참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임

- 실무자들은 또한 센터 사업단이 매출에 의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속적으로 한 분야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역시 참여자들의 자활참여를 통한 역량강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된다고 하였음. 동시에 센터가 충족시켜야 하는 기관 평가의 부분이나 참고해야하는 지침의 제약이 있고, 거기에 매출에 대한 압력까지 더해져 참여자들의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함

■ 매출에 대한 고려

- 참여자와 실무자, 기업대표 모두 자활사업의 목적 자체를 영리성 추구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조건부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혹은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매출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자활사업에서 사업단 매출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실적이나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적 목적 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활사업 제도적 개선 방안

- 실무자들이 제시한 첫 번째 제도적 개선 방안은 자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매출위주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탈수급을 지향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두 번째로 실무자들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 거론된 부분은 실무자들이 동일한 업무 내용을 수행함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가 다르다는 점임. 또한 자활센터 실무자들의 경우 재원이 다른 점으로 인해 호봉제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 따라서 실무자의 근로여건개선에서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할 부분은 승급제도와 호봉제도의 안정화라 할 수 있겠음
 - 더불어 매출이나 업무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지만 그 기준이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센터 내 종사자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약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정한 배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인천시에서는 임의에 의한 업무 지시 및 상여금 지급이 아닌 일관된 기준에 따른 평가 및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실무자들은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도 업무소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함
- 실무자들의 업무상 소진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 및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자활분야가 아닌 여타 분야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고저와 상관없이 기준의 일관성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임. 급여가 제공되는 재원이 다를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하고, 기금 등 다른 재원으로 미충족된 부분을 채움으로써 기준을 동일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
- 무엇보다 지역자활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실무자의 급여체계가 일관되지 않은 점이나, 참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또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실무자들은 중앙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지침의 경우에도 명확히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과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소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실무자들은 자활센터의 업무 자체가 돈과 연관된 것이고 수급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음

■ 각 참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지침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결과를 자활지원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자활지침에 상세히 표기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실무자들의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두 번째,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탈수급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자활참여자 및 대표, 실무자 모두 자활사업의 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탈수급 기피현상’을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부여 가능한 탈수급 인센티브로는 탈수급 이후 일정 기간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혹은 수급 탈락의 상황에서 생계탈락 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급여까지 모든 부문의 맞춤형여가 동시 박탈되는 상황을 막아 탈수급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음
- 세 번째, 수급자의 실제 근로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청년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근로역량 향상과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단의 업무내용을 기술 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창설·개선하는 것임. 동시에 이는 매출상승 효과가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할 것임
- 네 번째, 실무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현재 자활센터의 재원이 다양한 점 및 자활사업과 실무자 임금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인해 실무자간 임금 및 근로여건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센터장이나 특정 센터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기준에 의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본 연구의 FGD담화를 통해 발견된 바 있음. 자활센터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감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실무자간 임금재원이 다른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불균등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활센터 실무자의 잦은

이직은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참여자들에게 향상된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소하여야 할 현상임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2절 세부 사업 제언

2 신규 사업 제언

- 인천광역시 산업환경 및 자활사업 주 행위자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분야 제시
 - 인천광역시의 산업 중 고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으며, 성장세가 높거나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임
 -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경우 근로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의 기술 습득 및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추진될 만한 가치가 있음
 - 자활사업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기여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 사업에서 제시된 제안 사업 중 현재 인천시에서 현실성 있게 추구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 함께 제시하고자 함
- 다만 참여자의 복지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자활사업의 본연의 목적 역시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근로역량이 낮으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가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공자원연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근로역량이 높은 참여자 및 청년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능 향상 및 기술 습득이 가능한 사업을 연계

1) 주요 사업 제언

- 신규 사업은 (1) 공공성 확장형, (2) 수익성 확장형의 두가지 모델로 제시됨
 - 공공성 확장형은 임대주택관리사업 등과 같이 공공연계에 적합한 기존 사업들과 함께, 인천시복지재단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및 친환경,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같이 사회적 이익 및 기여를 확장할 수 있는 분야를 포함

- 수익성 모델의 경우 앞서 제시한 매출과 직업훈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라는 세가지의 직관적 목적에 집중한 사업

(1) 공공성 확장형

■ 공공성 확장형 사업은 주로 공공재정 및 공공자원 연계에 적합한 모델로, 수익성보다는 복지 및 사회적 기여 측면의 목적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현행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자활사업 역시 공공재원의 연계 혹은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5대 중점사업' 중심의 자활사업들임

- 기존 제시된 사업은 공공재원의 연계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의 협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렵다는 특성 또한 병존
- 따라서 상기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천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매출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단 유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됨

■ 『인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및 친환경, 커뮤니티케어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아래 각각의 사업에 대해 지역 및 분야·대상 측면에서의 확장 가능성 및 수익성 창출 가능성을 토대로 재평가하고 홍보나 연계성 측면에서의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

- 자활참여자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연계 및 협조 보장이 가능한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임
-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 부평의 임대사회주택 관리 및 마을관리사무소 사업은 각각의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공성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각개 군·구로 확장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마을관리사무소의 경우, 지역사회주민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홍보와 노력봉사 모집 등 후

원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 해당 사업만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인천시 내 보완이 필요한 시설, 가령 지하철 내 시설 개보수 및 보도블럭 재건설 등 인천시 전체 규모로 사업 대상 규모를 확장함은 물론 도시재생 분야 추가적인 시민 공모를 추진하여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음

■ 친환경 사업

- 친환경 사업의 경우,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 정당성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나, 매출 유지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 다시 말해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참여자의 다방면의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사업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임
- 해당 사업들에 대해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수익성 확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가령, 다회용 식기 렌탈 서비스의 경우 충남에서는 지역 장례식장이나 의료원, 영화관 등으로 확대전략을 구축하는 바, 인천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분야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협회 및 SNS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다회용 식기 이용 촉진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확장 추진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의 경우, 주 참여자인 아이스팩 소비자들의 편리한 아이스팩 제출이 관건인 바, 해당 사업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아이스팩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마트, 은행, 공동주택(아파트) 내 아이스팩 수거 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소비자의 수거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겠음

■ 커뮤니티케어

-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경향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동행업무를 추진함은 사업의 사회적 기여 및 현재 보건복지 사업 확장세에 따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며 따라서 인천시 내 전 영역으로 확장할만한 가치가 있겠음
- 학교 밖 아이 도시락 제공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다 수익성 확장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음. 즉, 사업 대상을 확장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학교 밖 아이 뿐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원 및 병원 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당뇨환자 및 신장식을 섭취해야 하는 고령환자들에 대한 도시락 키트 사업으로 확장해 볼 수 있음. 각 병원 시설 내 의료사회복지 팀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소개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의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건강 취약자들의 유·무상 도시락 제공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작업장 마련

- 공동작업장 마련사업의 경우 자활사업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광역 자활에 제안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임대료 등의 비용이 소모되는 소비성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활 사업으로 전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임

■ 자활촉진자 지원사업

- 자활촉진자 지원사업의 경우 자활센터 내의 참여자 조직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업임. 따라서 참여자 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조직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익성 확장형

■ 인천광역시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역시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익성 확장형 사업을 제시함

- 첫째, 안정적인 사업단의 유지 및 자립을 위해 수익성 창출 및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둘째, 참여자들의 기능 향상 또는 기술 습득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셋째, 일반 주민의 구매 및 후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경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 쇼핑몰 운영 및 청년 마케팅 동아리

- 사업내용

- 인천시 내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생산품을 손쉬운 경로로 지역주민이 구매가능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네이버 페이 가능한 쇼핑몰)
- 청년 마케팅 동아리를 운영, 소속 참여자들이 쇼핑몰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게 함

- **목표**

- 청년 참여자가 기능 습득이 가능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생산품의 매출 향상

- **주요 방법**

-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네이버 페이 가능한 쇼핑몰)
- 청년 자활근로자들의 홍보전문가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 주로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여 쇼핑몰 운영 및 외부 쇼핑몰 입점 관리 등 마케팅 전반을 기획, 운영, 관리하도록 채용

- **중점 추진 사항**

- 지역 내 자활센터의 생산물품을 홈페이지 내에서 구매하기 쉽도록 구성하여야 함. 즉, 카탈로그 정도의 홈페이지 구성이 아닌, 실제 네이버페이 쇼핑몰로서 인터넷 구매가 즉시 가능한 정도로 유통경로 개척 필요함
- 네일아트 등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네이버예약 등을 활용
- 유사사례는 시흥시의 사례(‘생활씩’, ‘그담’ 등)를 참고

■ 청년 홍보전문가 양성사업

- **사업 내용**

- 주로 청년 대상 참여자를 모집,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생산 물품 및 서비스 홍보에 활용
- 영상 제작기술, 그래픽디자인 기술 습득 과정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 지원

- **목표**

- 청년 참여자의 근로의욕 및 자신감 고취
-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참여자의 자활근로 종료 후 관련 분야 취직을 용이하게 함
-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쇼핑몰 운영, youtube 운영시 인력을 활용하고 홍보 및 후원 연계에 용이하게 함

- 연차별 계획

- 1차 년도(1년): 청년 사업자의 욕구 파악 및 기술 습득 지원(내일배움카드 등 활용), 이때 자활근로(자활쇼핑몰 운영 사업 근로와 병행 권장)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학습 및 근로계획 수립이 필수적
- 2차 년도(1~3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통합 쇼핑몰 관리 및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자활센터 홍보와 마케팅 사업 분야 근로
- 3차 년도(1년):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후기 마케팅 동아리 참여자 모집시 멘토로 활동

■ 네일 아트점 운영 및 네일아트 전문가 양성

- 사업 내용

- 참여자의 네일아트 기술취득 및 근로역량 향상
- 만족할만한 네일아트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수익성 고취
- 네일아트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 목표

- 질 좋은 네일아트 서비스를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자활근로자의 네일아트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자립의지 고취

- 추진전략

1. 네일아트 자격증 반을 운영함으로써 네일아트 기술자를 양성함
2. 네일아트점을 개소하여 네일아트 자격을 취득한 참여자를 근로할 수 있게 함
3. 일정 요건 이상 목표를 달성한 네일아트 기술자를 대상으로 네일아트점을 창업(자활기업-협동조합 형태 등)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 계획

- 1차년도(1년):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동아리 운영·지원
- 2~4차년도(1~2년): 본격적인 자활사업단 운영시기,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네일아트점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함
- 5차년도(2년): 참여자의 취직 및 창업(자활기업 진출 등) 지원

■ 피부관리샵 운영 및 피부관리사 양성 사업

- 사업 내용
 - 자활근로자의 피부관리사 자격 취득 및 기술 습득을 지원
 - 피부관리샵을 운영, 지역주민에게 가격과 품질면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
- 목표
 - 자활근로자의 피부관리사 자격 취득 및 기술 습득
 - 수익성이 높은 업종인 피부관리샵을 운영, 자활센터의 매출 향상
- 추진 전략
 - 청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근로역량 고취에 중점을 둠
 - 피부관리 서비스 비용은 지역 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하여 가격 경쟁력 달성
 - 관내 사회복지사 협회와 연계하거나 자활센터 후원 및 물품 구매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여 마케팅 전략의 최적화
 - 네이버 예약 등의 접근성 좋은 예약 경로를 개척하여 활용하여야 함
- 훈련 계획
 - 1차 년도(1~2년): 피부관리사 자격취득 과정 운영·지원
 - 2차 년도(2~3년): 자활센터 운영·지원하는 피부관리샵에 취직하여 근로 기술 향상
 - 3차 년도(1년): 취·창업 지원, 자활기업으로의 개척 권장

■ 목공&라탄 공방

- 사업 내용
 - 소규모 목공 상품 제작 및 유통
 - 목공 기술자 및 라탄 제작 기술자 양성
- 목표
 - 자활근로 참여자의 제작 기술 습득
 - 양질의 물품을 제작, 유통
 - 쇼핑몰 운영 및 외부 쇼핑몰 입점
- 추진 전략
 - ‘그담’ 사례를 참고
 - 네이버쇼핑, 아이디어스 등 구매자 접근성 좋은 경로를 통해 판매

- 원데이클래스를 운영,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하고 수익성 향상
-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순환이 가능하게 함
- 셀프키트 판매를 병행하여 자활참여자의 단순 임가공 참여도 가능하게 함

- **훈련 계획**

- 1차 년도(1년): 제작 기술 습득 과정
- 2차 년도(2~3년):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참여자가 소가구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 이때 자격증 취득 지원
- 3차년도(1년): 창업 지원 및 자활기업으로의 진출

■ **힐링팜 주말 농장&어린이 텃밭체험학습 센터**

- **사업 내용**

- 친환경 놀이인 텃밭체험을 지역 어린이에게 제공함
- 주말농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후원을 활성화

- **주요 전략**

- 지역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운영(유료)
- 유료 주말농장을 개방, 지역주민이 직접 기여하고 생산물을 일정부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및 후원 활성화
- 지역 방송, SNS 등을 통해 홍보

- **인력 구성**

1. 텃밭 체험 인력: 자활근로 참여자
2. 주말 농장 인력: 자활근로 참여자(대체근로자) 혹은 봉사활동 인력 모집
3. 홍보 담당자: 마케팅 동아리 및 청년 홍보전문가와 연계

- **훈련 계획**

- 텃밭 체험 인력: 광역자활 혹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모집, 매주 1회, 3개월 교육과정을 진행 후 인력으로 투입. 참여자 역량 및 의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과정을 지원하여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함
- 주말 농장 인력: 자활근로자의 대체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봉사인력을 섭외하여 체계적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혹은 지역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 가능함

■ **자재은행 운영**

- **사업 내용**

- 건축, 집수리, 청소, 주거복지 분야 필요 자재를 공동구매 및 유통
-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일반주민의 구매 및 후원이 가능하게 함
- 남는 자재의 경우 중고판매 및 나눔 가능한 파트(일반 주민 참여 가능)를 구성

● **주요 목표 및 전략**

- 인천시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청소, 주거복지관련 자재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비용 절감 추구
- 남는 자재를 중고 판매 및 나눔 가능하므로 자재 절약 및 환경 보호의 효과 추구
- 공동구매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구매편의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구매 및 후원을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수익성 향상 및 사업의 신뢰성 향상, 홍보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함
- 공동구매 사이트의 운영은 앞서 제시한 청년 홍보 전문가 인력 활용

2) 신규 사업 추진 전략 및 홍보 방안

■ 직관적인 목적에 집중

- 수익성과 참여자의 근로역량 강화라는 단순한 목적 하 사업단을 운영하되, 제시한 사업 외 기존 공공영역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이익부분에 집중
-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부분에 최적화된 근로 인력과 복지부분에 최적화된 근로 인력을 two track으로 구성하여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

■ 지역사회 참여를 최대화

- 홍보와 마케팅 방향을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수립
- 홍보와 마케팅 부분에서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의 이점을 살려, 각종 공공기관 내 영상 홍보 및 지면 홍보를 최대화 하여야 함
- 구매 외에도 별도의 후원경로를 개척하고, 후원 상품을 개발, 손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지역 자활센터 내 후원 파트를 신설·강화하여야 함
 - 세이브더칠드런의 ‘모자뜨기 키트 판매’등은 좋은 예시가 됨

- 텀블벅, 해피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활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마케팅 동아리 등)

■ 자활 센터 내·외의 연계를 최대화

-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연계를 최대화 하여야 함. 이때 연계 작업 및 연계시 인력 모집과 육성은 광역자활에서 전담하여 수행
- 특히 강사를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광역자활에서 강사 모집을 전담하고 지역 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원하여 센터의 인력 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제3절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 법률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조정 필요

- 광역자활센터의 지침상 기본적인 9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이 중에서 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홍보사업을 더욱 확장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수익성 보장 및 참여자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홍보 및 연계사업 역시 자체사업으로서 확장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지역자활센터에서 시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광역자활 자체 사업으로서 우선 시범사업화하여 추진

■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로의 이점을 강화하고 위협을 기피하여야 함

-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라는 점은 명확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 가령, 강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로 지속적인 시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과, 공공자원의 신속한 연계 및 공공자원을 활용한 홍보를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점임.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은 시의 광역센터에 대한 행정적 요청 및 성과 강요 등은 광역센터의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시 직영 센터로서의 광역자활센터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다양한 민·관·학 협력을 연계하기 위해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관련 부처로의 적극적인 홍보와 부처간 연계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사업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다만 광역자활센터의 창의성 및 자발성을 최대로 촉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리 분야에서의 과도한 요청 및 점검을 지양하여야 함

■ 종사자 임금의 일원화 및 근속 인센티브 강화

- 재원에 따른 구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직렬에 따른 호봉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함. 호봉제 적용을 통해 장기 근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력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준이나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시에서 전담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과 저촉되지 않게끔 명목상의 지침과 실제 적용 지침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근로기준법 우수 준수 센터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주민 참여강화 사업의 추진

-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성 사업으로서 위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음
- 매출에 대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사회적 이익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역시 함께 고려하는 사업 분야의 창의적 추진이 필요하며 사행성이나 지역주민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질적성장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홍보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활사업 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구매 뿐 아니라 후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경로를 발굴,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창의적인 후원상품의 개발과 함께 지역주민을 통한 공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봉사단체들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목 차

제1장	서 론	0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3절 연구의 체계	9
제2장	자활사업 이론적 논의와 정책동향	11
	제1절 지역 사회복지와 자활사업	13
	제2절 자활사업 개념과 정책 현황	15
	제3절 국내·외 자활사업 사례 및 동향	33
	제4절 소결: 자활사업 지향점 논의	47
제3장	인천 자활사업 진단	49
	제1절 인천 자활인프라 현황	51
	제2절 인천시 자활사업 진단	79
	제3절 인천 자활사업 SWOT분석	95

목 차

제4장	제4장 인천 자활사업 발전방향 논의	97
	제1절 자활근로 참여자 FGD	99
	제2절 자활기업 대표 FGD	110
	제3절 자활사업 실무자 FGD	126
	제4절 소결: 인천 자활사업 발전방향 논의.....	146
제5장	결론 및 제언	151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153
	제2절 세부 사업 제안.....	158
	제3절 정책 개선 논의.....	169
부록	참고문헌	175

표 · 그림 목차

표 목차

[표 1] 연구범위	7
[표 2] 연구체계	9
[표 3] 초기(1996~1997년) 자활 지원센터 주요 사업 현황	18
[표 4] 자활사업의 사업별 분류	27
[표 5] 자활사업 참여자수	28
[표 6] 자활기업 현황(2019년 말)	28
[표 7]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비교	30
[표 8]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별 구분표	32
[표 9] 시도별 인구증감률(2016-2020년)	51
[표 10]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군·구별)	53
[표 11]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군·구별)	54
[표 12]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광역시)	55
[표 13] 시도별 실업률(광역시)	56
[표 14] 광역시 청년 고용율	57
[표 15] 광역시 청년 실업률	58
[표 16]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인구 변화 2015-2019	59
[표 17] 인천광역시 취업인구 변화 2015-2019	61
[표 18] 인천광역시 세대별 취업인구 변화 2015-2019	63
[표 19] 인천광역시 교육수준별 취업인구 변화 2015-2019	63
[표 20]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 변화 2015-2018	65
[표 21] 인천광역시 종사자 수 변화 2015-2018	66
[표 22] 사업체 및 종사자 연도별 증가추이	68
[표 23] 2015년 창업사업체의 2018년 기준 사업체 생존율과 일자리 생존율	69
[표 24] 인천광역시 사업체 창업 및 생존 2015-2018	70
[표 25] 산업별 사업체 창업 및 생존 2015-2018	72
[표 26] 구군별 사업체 창업 및 생존 2015-2018	73
[표 27] 2015년 창업 사업체 기준 구군별 산업 종 비중	74
[표 28] 2018년 생존 사업체 현황	75

표 · 그림 목차

표 목차

[표 29] 2015년-2018년 창업사업체의 산업종비중 증감 추이	76
[표 30] 인천시 자활사업 분야별 현황	78
[표 31] 인천광역자활센터 주요사업 추진 총괄표	81
[표 32] 사회복지기금활용사업 추진 총괄표	83
[표 33] 위탁·연계협력·외부용역 주요사업 추진 총괄표	84
[표 34]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분야별 현황	87
[표 35] 지역자활센터 사업 다양성 분류	89
[표 36] 인천 자활 현황 SWOT 분석	11
[표 37] 자활근로 참여자 FGD그룹 현황	11
[표 38] 자활센터 실무자 FGD그룹 현황	11
[표 39] 인천복지재단 제시 사업	11

그림 목차

[그림 1] 자활사업 추진체계	25
[그림 2] 추진주체별 역할	26
[그림 3] 시도별 남녀 성비 격차	51
[그림 4] 시도별 노령화지수 변화(2012년-2021년)	52
[그림 5] 인천시 군·구별 인구밀집도	54
[그림 6]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광역시)	55
[그림 7] 시도별 실업률(광역시)	56
[그림 8] 광역시 청년 고용율	57
[그림 9] 광역시 청년 실업률	58
[그림 10] 인천광역자활센터 조직도	8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1 연구배경

-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근로·복지 연계 제도로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 구축이 필수적임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을 위해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복지 연계 정책임(보건복지부, 2016)
 - 무엇보다 자활사업은 단순히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탈빈곤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김영미, 2002; 노대명, 2008)
-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하 최근의 복지 패러다임의 기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을 권장하는 바, 자활사업의 다양성 및 타당성 역시 지자체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최근 부상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패러다임은 지역기반의 복지모델을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복지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자율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제도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 할 수 있음
 - 특히 자활사업은 지역의 저소득층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적 구조와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자활사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커뮤니티케어의 패러다임에서 특히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인천시의 경우 그간 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의지가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음(인천복지재단, 2020)

- 특히 인천시는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립정책과를 신설하고 인천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2020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공표함으로써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음
- 더불어, 2012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9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천의 자활환경에 대한 진단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형 자활사업 성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역시(인천발전연구원, 2012; 인천광역자활센터, 2016; 인천발전연구원, 2021; 인천복지재단, 2020) 인천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임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뤄 온 성과와는 별개로, 인천시 자활사업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인적 특성과 실제 경험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바, 주체들의 각 측면에 따른 경험을 생생히 녹여내는 연구가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내실 있는 인천형 자활사업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다소 간과되어 온 각 주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를 보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2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천형 자활 일자리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있음
 - 이는 기존의 인천 자활환경 및 자활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선행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지점으로, 자활센터 실무자의 견해는 물론, 자활사업단 참여자, 자활기업대표를 모집하여 각자의 특성에 따른 경험을 생생히 녹여내고자 함
- 동시에 인천시 자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과업을 이어, 현재까지 제시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즉, 2012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9년간 네 차례에 걸쳐 인천의 자활환경 진단과 자활사업 발전 방향 및 개별 자활사업을 제시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재진단 및 점검하는 것임
- 본 연구의 목적 및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첫째, 국내 자활사업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함
 - 자활정책의 발전과정 및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기본적 성격을 파악함
 - 둘째, 해외 사례 및 정책 중 근로연계형 공공부조 제도 및 재취업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혹은 제도를 검토하고 현행 국내 자활사업의 특성을 도출함
 - 셋째, 지자체 조례를 포함, 타 지자체 선행사례를 분석함
 - 넷째, 현행 또는 기존에 제안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및 자원 SWOT 분석을 통해 수요자 중심에서 인천시의 자활 환경을 진단함
 - 다섯째, 인천광역시 내 다양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기업 대표, 그리고 자활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그룹을 모집, FGD¹⁴⁾를 실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인지하는 자활사업 개선방향을 논의함


14) FGD: Focus Group Discussion, 초점집단토의

- 마지막으로, 상기한 내용의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
도모델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과 인천시 자활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됨

[표 1] 연구 범위

<p>시간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도 : 2021년 ▪ 중기계획 : 2022년~2024년 	
<p>공간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일대 (9개 구군, 11개 지역자활센터) 	
<p>내용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자활사업 및 정책 현황 분석 ▪ 해외 사례 및 정책 분석(근로 연계형 복지 정책·서비스) ▪ 국내 타 지자체 조례 분석 및 자활사업 선행 사례 분석 ▪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및 자원 SWOT 분석을 통한 인천 자활 환경 진단 ▪ 자활사업의 다차원 참여자(참여자, 자활기업, 사회복지사) FGD 실시, 인천 자활사업 개선방향 논의 ▪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수립을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본 연구의 방법적 특성은 이론적 검토는 물론, 질적·양적 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자료분석을 통해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것임

- 첫째, 국내 자활사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하는 이론적 검토작업과 함께, 해외 근로연계 사회사업 및 국내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중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을 사례 분석하여, 인천시 자활사업이 추구할 전략 및 방향에 대해 제시함
- 둘째, FGD를 통해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인 자활근로 참여자, 자

활기업대표, 자활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는 점임

- 그 이유는 우선, 자활사업은 그 특성상 행위자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제도로, 특정 측면에 치우친 견해가 아닌 다각적인 시각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또 다른 이유는 FGD(또는 FGI)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개별 면담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과 토론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참여자담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보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 셋째, 인천시 자활인프라 진단을 위해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자활환경의 SWOT 분석을 실시, 인천시 자활일자리선도모델 구축에 필요한 전략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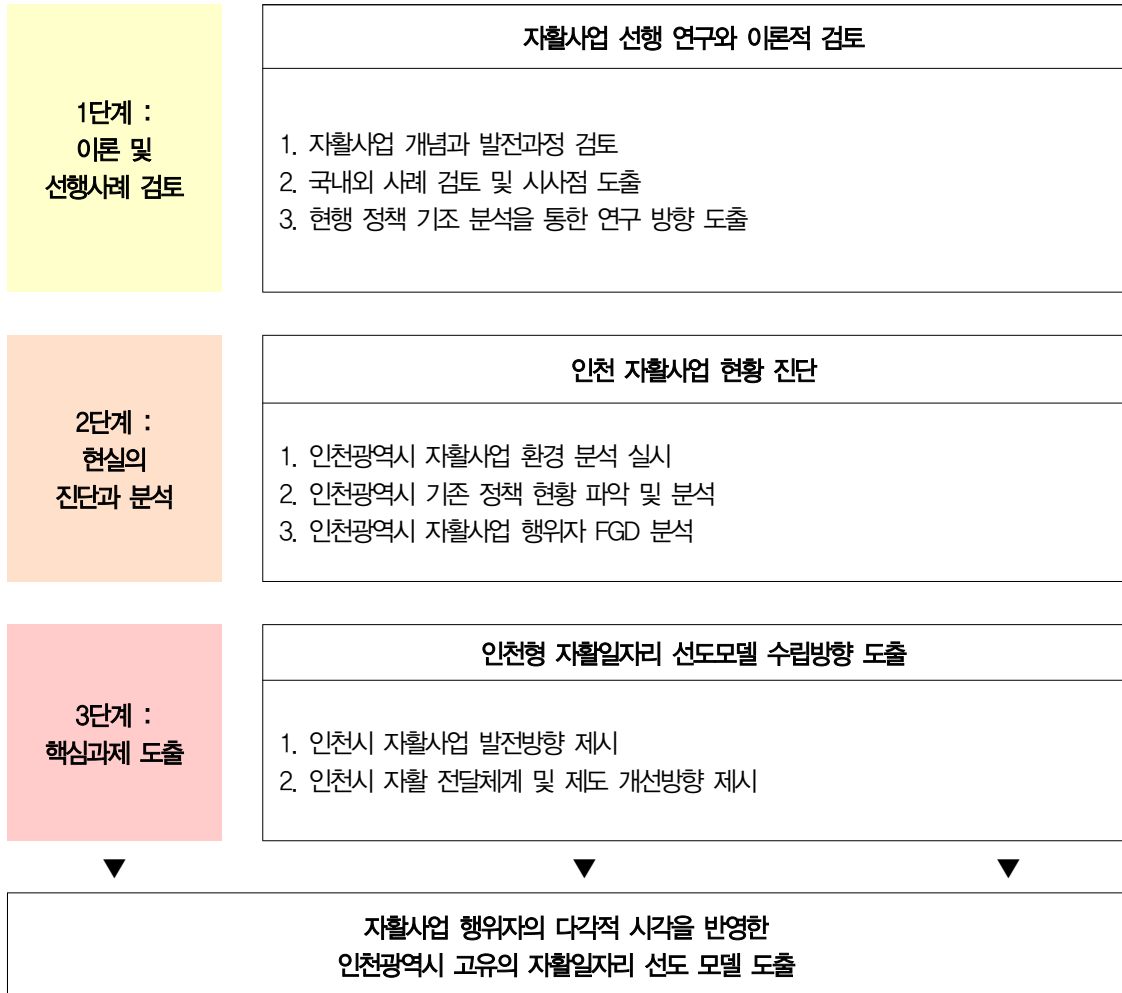
● 넷째, 인천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 현황을 비교·종합분석하여 사업의 내용적 다양성, 분류체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도출된 방향을 토대로 결론을 통해 신규사업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제3절 연구의 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체계에 따름

[표 2] 연구 체계



제2장 자활사업 이론적 논의와 정책동향

제1절 지역 사회복지와 자활사업

제2절 자활사업 개념과 정책 현황

제3절 국내·외 정책 동향

제4절 소결: 자활사업 지향점 논의

-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근로·복지 연계 제도로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 구축이 필수적임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을 위해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복지 연계 정책임(보건복지부, 2016)
 - 무엇보다 자활사업은 단순히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탈빈곤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김영미, 2002; 노대명, 2008)

-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하 최근의 복지 패러다임의 기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을 권장하는 바, 자활사업의 다양성 및 타당성 역시 지자체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최근 부상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패러다임은 지역기반의 복지모델을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복지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자율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 제도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 할 수 있음
 - 특히 자활사업은 지역의 저소득층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적 구조와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자활사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커뮤니티케어의 패러다임에서 특히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인천시의 경우 그간 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의지가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음(인천복지재단, 2020)
 - 특히 인천시는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립정책과를 신설하고 인천 자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2020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공표함으로써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음

- 더불어, 2012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9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천의 자활환경에 대한 진단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형 자활사업 성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역시(인천발전연구원, 2012; 인천광역자활센터, 2016; 인천발전연구원, 2021; 인천복지재단, 2020) 인천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임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뤄 온 성과와는 별개로, 인천시 자활사업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인적 특성과 실제 경험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바, 주체들의 각 측면에 따른 경험을 생생히 녹여내는 연구가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내실 있는 인천형 자활사업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다소 간과되어 온 각 주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를 보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1 자활사업의 개념 및 특성

1) 자활사업 개념 및 발전과정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지제도를 벗어나게 설계된 근로연계복지정책(류만희, 2007)
- 자활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변화과정을 총 4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자활사업의 변화과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분류로서 분석되고 있음을 참고
- 태동기(1995년 이전)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을 위한 도약기로, 빈곤에 대한 정책은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 평가됨. 즉, 생활보호법은 1961년부터 시행되어 1982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극심한 빈곤계층을 보호해주는 빈약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였음. 다만 이 시기에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빈곤율은 현재보다 나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이태진외, 2007). 우루과이라운드(UR)로 인한 세계화는 한국 산업구조를 변화시켰으며,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자본자유화와 함께 기존의 1차 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공장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의 결과로 이어짐
 - 이러한 배경은 일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나 일을 통한 소득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던 시대가 지나고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빈곤층의 자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정책적인 의제로 제기되는 구조적 배경이 됨
 - 도시빈민의 증가라는 지점 역시 자활사업의 태동과 함께 주로 거론되는 역사

적 과정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으로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국력의 급속한 팽창으로 도시빈민인구가 밀집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고 판자촌 또는 달동네와 산동네로 불린 곳이 이들의 중심생활터전이었으며 이는 동시에 빈민들이 사는 곳이라는 오명과 함께 이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어려운 처지의 이웃끼리 돌보며 사는 공동체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음

- 1980년대 초에는 이러한 빈민들의 밀집지역이 서울시내에 100여 곳 이상 있었으며 이러한 빈민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100만 명이 추산될 정도로 상당수였으나 1983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의 합동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빈민밀집지역의 주민들의 자발적 능력으로는 자발적인 입주거의 불가능했고 이들은 생존권쟁취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철거반대운동이 대대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됨
- 이러한 희생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해결책으로서 1990년부터 정부가 재개발지역 입주주민들에게 임대주택입주를 약속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완화, 이후 빈민지역에서 주민운동에 깊이 관계하던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과 시민운동가들은 철거반대운동을 넘어 빈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하게 됨
- 이때 건설업 외 공동작업장과 생산공동체가 추진되면서 처음으로 1991년 서울 월곡동에서는 지역활동가 유미옥 등이 중심이 되어 화장수를 생산하는 여성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1992년 상계동 성공회 나눔의 집 김홍일 신부가 중심이 되어 봉제생산 공동체인 '실과 바늘'을 설립, 1995년에는 구로지역의 여성봉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한백'이 결성됨(이문국, 2009)
- 이러한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이런 활동을 확산시키고 객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KDI의 권순원 등은 1993년 '빈곤대책의 재조명: 협동조합을 통한 탈 빈곤운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2호)라는 원고를 통해 일꾼 두레, 실과 바늘, 나섬건설, 마포건축 등의 사례를 거명하고 또 김성오·김규태는 일꾼 두레, 실과 바늘 등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함(김성오 외, 1993).
-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철 등은 1995년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라는 문서를 통해 자활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유형을 제시하였고 제도화된 자활지원시범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계기가 됨

■ 전환기(1996년~2000년)

- 199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시작된 특정 지역의 생산공동체 모델이 빈민지역 운동의 새로운 빈곤극복 운동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나 처음의 기대와 희망만큼 활동적이거나 이를 제도적으로 승화시킬만큼 성공적이지 못했고 특히 수입원으로서의 생산품에 대한 일반의 평가가 호의적이 못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 협동조합을 이어가지 못하고 침체하게 만든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술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들의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의 실패 이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됨(김수현, 2001).
- 이러한 적극적 대안의 모색과 함께 생산공동체 활동이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구상’과 결합되며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받게 됨
- KDI의 권순원은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 구성과 함께 실시된 공청회에서 생산적·예방적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업종을 면밀히 살펴보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이고 저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당시 민간 중심의 자활지원단체를 후원하는 제도가 시작된 점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와 지원의 규모, 지원 방식의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게 됨
- 이후 1996년부터 빈민지역에서 생산 공동체 운동을 벌여왔던 성공회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자활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지정, 정부지원액은 개소 당 연 1억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상근자를 4~7명까지 자율적으로 채용하였고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2000년 10월 1일 이전까지 총 20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지정됨으로서 자활지원센터 제도가 시작되게 되었음
-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은 초기에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던 생산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청소용역업, 봉제, 도배, 건설업, 간병인, 공동부업장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이었음

- 1996년 지정된 자활지원센터들의 활동으로 취업알선과 주민교육을 포함시켰으며 1997년부터 추가로 지정된 자활지원센터들도 먼저 만들어진 센터들의 유형을 따라 비슷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확장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까지의 자활사업의 5대 표준화사업이 제시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겠음
- 다만 당시로는 이러한 업종 외에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대기업중심의 경제 구조 하 적은 자본으로 틈새시장을 찾아야 하는 태생적인 고충이 있었기 때문임
- 당시 초기 자활 지원센터의 주요 업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초기(1996~1997년) 자활 지원센터 주요 사업 현황

센터명		주요 사업 현황
1차 년도 지정 (1996)	서울관악	공동부업장, 푸른환경 코리아(청소용역협동조합), 비전(건설일용직협동조합), 나눔물산(봉제협동조합), 생업자금공자, 취업알선 등
	서울노원	실과비늘, 우리품새(봉제협동조합), 늘푸른 사람들(청소용역협동조합), 생업자금공자, 지역조사, 주민교육, 취업알선 등
	서울마포	마포푸른환경(청소용역공동체), 그림같은 집(건축공동체), 아름다운센타나라(공동작업장), 또사라미(봉제공동체), 약손엄마회(간병공동체), 주민교육, 취업알선 등
	인천동구	풀비(도배용역), 다산건설(건설사업단), 공동작업장, 부업사업, 창업지도, 기술교육(산후조리임, 텔레마케터, 디자인 등) 취업알선 등
	대전동구	청소하기 좋은 날(청소용역공동체), 성원건축(건설공동체), 간병인공동체, 공동작업장 및 부업장, 생업자금공자, 고용지원, 지역공동체 사업 등
2차 년도 지정 (1997)	서울성북	두레건축(건설일용협동조합), 늘푸른 사람들(청소용역협동조합),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실업자 한마당,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
	부산사상	다솔용역(청소용역협동조합), 창조하는 사람들(집수리 건축팀), 공동부업장, 주민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생업자금공자 등
	대구북구	녹색마을(건설용역 공동체), 풀비(도배용역 공동체), 공동부업장, 공동작업장 등
	광주남구	두리드리(건설일용협동조합), 창업지원, 공동작업장(두부공장), 생업자금공자, 직업교육(간병인, 컴퓨터 수리, 요리교육), 신용협동조합,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
	경기광명	참사랑간병인회(용역사업), 세상꾸미기(도배사업단), 베이비시터(아동보육), 공동부업장, 창업지원, 고용지원사업 등

자료: 김승오(2009)

-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맛본 활동가들은 1998년 초 자활지원센터협회 준비위원회에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취로사업을 제안하는데, 이는 생산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의 도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직업능력개발,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기간의 임금지원을 통해 기초자금을 확보하고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의 자활기업제도의 제도적 기틀을 갖춘 전신이라 할 수 있음
- 이후 발생한 외환위기는 자활공동체사업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건강하고 기능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심각한 실업난에 고통받게 되자 공익적으로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제 3섹터에 대한 담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계기가 됨
- 이에 따라 자활지원센터는 특별 취로 사업을 이용하여 무료 청소도배사업이나 도시락 제공 등 영세민에 대한 간병 서비스를 이전보다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즉 이전의 노동집약적인 면이 근간을 이루지만 다양한 분야의 확장과 이에 따른 인력의 수급은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생산공동체의 정신을 살리는 활력소로 작용하게 됨
- 보편적으로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기까지 약 5년간은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내적 열기가 가장 충실했던 때라고 할 수 있음. 그동안 철거민운동을 통해 발전해 온 빈곤극복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노동 종사자간의 생산협동조합의 가치공유, 빈민지역에 뿌리내리려는 활동가 집단의 헌신성이 결합되어 빈곤층의 자활지원사업으로 결집되었음(김수현, 2000)
- 특히 이 시기의 자활사업 변화 과정은 자활사업이 시민으로부터 태동된 ‘풀뿌리 운동’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 즉, 국가주도의 대형 공공근로사업들이 자활 지원센터 사업 경험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과를 가시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됨. 특히, 비자발적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자활공동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적 관점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자활공동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 민간시장과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보호된 시장논의의 필요성과 보호된 시장으로 인식 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정도만 인정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빈곤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일정기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됨

- 이와 더불어 빈민지역에서 활동해 온 초기자활활동가들과 복지부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협력을 시작한 시기로, 민관협력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역사적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더불어 자활지원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공동체의 참여는 물론 사회적 연대와 구성원들의 합의가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함

■ 확장기(2000년~2007년)

- 2000년 10월 1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의 복지정책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 시기로, 외환위기 당시 법률적으로 유효했던 생활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공공부조만 가능했기 때문에 일할 의지도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빈곤상황에 놓인 이들 새로운 빈곤층에게는 거의 도움이 될 수 없었으므로 법률적 전면 개정을 요하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제를 제한하였던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서는데 이는 첫째, 공공부조는 사회가 제공하는 ‘시혜’라는 점을 탈피하고자 하였고, 둘째,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빈곤층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명문화하였던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정책의 수급은 ‘사회권적 권리’라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다만, 상대적인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최저생계보호와 근로참여를 전제하는 제도로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는 수급자에 대한 낙인우려와 함께 제도적 불완전성 및 태생적 모순점을 품게 되었음
- 즉,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일차적인 사회보장체제가 우선 성립되고 그것을 다시 축소재편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근로연계복지가 나타났던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는 기초적인 사회부조 제도를 도입하면서 결가지에 노동의무를 끼어 넣은 것’이라는 점과(신명호, 2007) 이미 권리로 명시된 최저생활 보장제도에 조건을 부과하는 점은 모순적으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헌법적 명시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시됨(이문국, 2000)
- 이에 따라 이전부터 중시되었던 자발성과 공동체 중시, 사회적 연대에 기본바

탕을 두고 시작한 자활지원 사업은 강제성이 가미된 조건 부과 방법으로 그 성격이 변함으로써 자활지원 사업은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전환되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활지원사업의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을 파악하고 근로능력을 통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지원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내세운 것이며, 여기에 자활지원사업 참가자의 취약한 인적자원(Human Capital) 수준을 감안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사업·취업'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자활경로 개념'(노대명, 2009)이 도입되며 참여자들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 자활경로 개념의 도입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의 자활지원센터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근로능력이나 기능수준이 낮은 조건부수급자를 전담하게 되고, 고기능 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조건부과를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음(보건복지부 2005)
- 또한 1999년까지 20개의 시범사업단계로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자활지원센터는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명칭 역시 지역자활센터로 바꾸어 전국적으로 모두 242개가 지정되었음.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많은 지자체는 2개 이상의 기관이 지정되기도 함.

■ 제도화기(2007년~현재)

-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확립기이며 4기는 13년 정도의 기간으로 자활사업의 본격적 제도화와 사업을 확장한 '확장기'로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200개 이상의 지역자활센터의 인증과 15개의 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자활연수원의 설립 등 자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기임
- 더불어 규모별 예산 확대와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을 시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음

2) 자활사업 특성 및 제도적 평가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즉,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도입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시행과 함께 제도화되면서 그 성격이 다소 변모함
 - 초기 자활사업은 자율성과 사회적 경제로의 지향성이 강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 이후 제도화시기를 거치며 점차 타율성과 근로연계복지로의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노대명, 2009)
 - 법적 토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활지원사업의 대상 확대는 한국 빈곤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전략에 기초한 빈곤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서구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개념적·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으나, 도입시기 및 제도화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른 특성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서구의 경우에는 일차적인 사회보장체제가 먼저 성립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축소·재편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사회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근로능력자에 대한 수급조건으로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이(신명호, 2007)
 - 더불어 제도의 발전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고용전략에 기초한 빈곤정책은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후에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구체화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제도화됨으로써 빈곤계층의 복지의존성 문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홍경준, 2002)
-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접목 가능성’을 실험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힘
 -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 그로 인해 우려되는 복지의존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보장제도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안전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자활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제시하였던 생산적복지의 대표 상품 중 하나로서 제시되어,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에 부딪히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 결과 우리사회의 근로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다양한 모형을 탄생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노대명, 2010)

■ 자활사업의 그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여전히 한계가 잔존한다는 부정적 평가 역시 병존

- 자활사업이 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보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관리하고 복지제도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보완적 기능만을 강화하도록 요구받아 왔던 것으로 평가(노대명, 2010)
-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빈곤계층이 자활사업의 주된 대상임에 따라 공동창업 중심의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약했다는 평가(엄태영, 2012)
- 복지와 노동의 결합이라는 ‘근로연계복지’의 근본적 성격으로부터 비롯한 영리성, 급여성, 정책대상, 종사자 정체성과 관련한 딜레마(김수영, 2012)
-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이라는 역할을 통한 탈수급 의미 보다는 근로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보장기관의 의무에 급급하여 이루어져 왔고, 자활사업의 시장성이나 수급자의 자활이라는 성과에 대하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활 지원프로그램 성과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평가(조향희, 2015)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 하 ‘주저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 또는 참여자 특성, 현장의 활동, 대상의 변화와 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간의 부정합은 낮은 성과, 참여자들의 욕구를 간과하고 단기적 경제적 실적만을 강조하는 목적 전치 현상, 탈자활한 참여자들이 다시 자활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 등의 비판적 사례들에 대한 보고(최상미, 2021)

■ 특히, 시행 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제도화 이전의 초기 자활사업과 제도화 이후 후기 자활사업이 성격을 달리하는 점은 현재 자활사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야기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함(최상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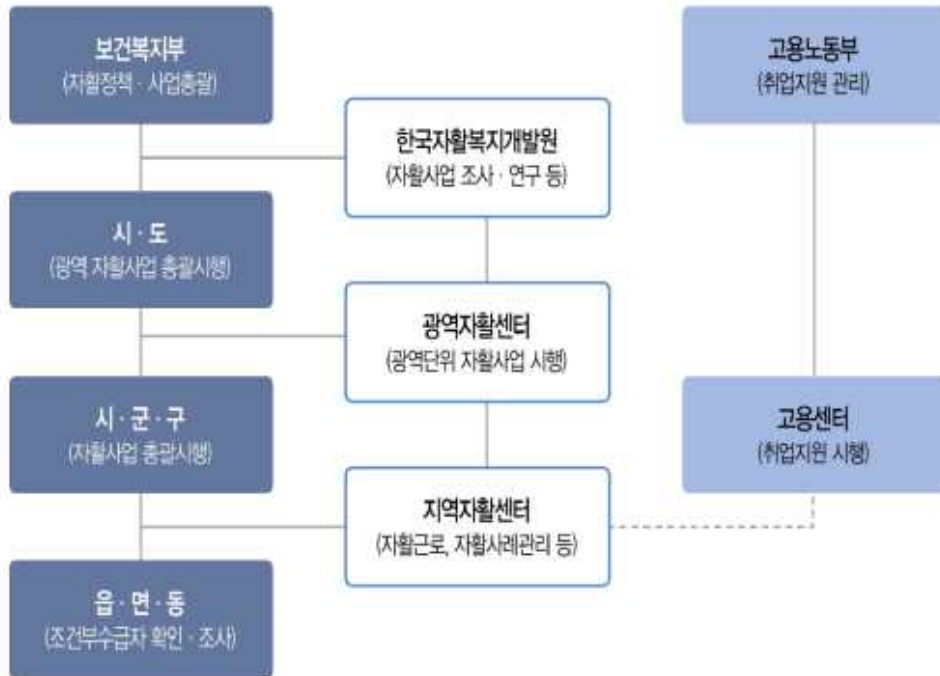
- 근로연계복지에 이념적·개념적 뿌리를 두고 있는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복지-노동간의 마찰을 노출시켜 집행과정에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김수영, 2012)

- 제도화 이전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성격이 강했던 초기 자활사업의 현장구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책으로서 제도화된 자활사업정책은 그 목적과 목표가 상이하여 제도화 시기부터 현재까지 20여년 간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야 했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장 실무와 정책 목표 및 성과관리의 상이함 등의 비판이 잔존
-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모호한 개념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조건부 수급’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탈빈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빈곤화를 제어하는 장치이자 빈곤화를 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비판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정수남, 2019)
 - 즉, 특히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한계로서 지목되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수급’의 장치로서 자활사업이 활용될 뿐, 실질적인 탈빈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자활사례관리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반 제도들이 도입, 실시되었고 노동부 실업지원 제도와 대상자의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는 참여 수급자의 전반적인 양적·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

2 | 자활사업 정책 및 전달체계 현황

-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이며, 기본적인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있고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가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지역자활센터에서 개별적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제도의 경우 지역센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되고 있는 체계를 띄고 있음

[그림 1] 자활사업 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 자활사업안내」

■ 자활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보건복지부가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를 수행하며, 시도,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을 총괄시행
- 읍면동은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전담기구가 자활사업을 수행

[그림 2] 추진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 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종지여부 결정 -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자신조사 제외) 	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 광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자활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취업지원관리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 자활사업안내」

■ 기본적인 자활 인프라 및 전달체계에 대해 인천복지재단(2020)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를 제시한 바 있음

- 첫째, 자활사업 인프라의 양적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전달체계 주체간 불분명한 역할 분배 및 기능적 구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둘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간 모호한 역할구분 및 광역자활센

터와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적 분화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기능재편 필요성을 제시함

■ 자활사업은 현재 게이트웨이 과정,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기업, 자활근로 4가지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음

- 사업 종류는 5대 전국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표 4] 자활사업의 사업별 분류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게이트웨이 과정		■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
	희망리본프로젝트		■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으로 1:1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자활기업		■ 저소득층의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의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 활 근 로	시장 진입형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인턴 도우미	■ 지자체, 사활센터 등에서 자활인턴형태로 일을 하면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사회 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용이한 사업
근로 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7년 기준 97,521명으로 집계
- 보건복지부 참여자는 71,600명이며, 고용노동부 참여자는 25,912명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창업과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다양화
 - 전국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2010년 88,839명에서 2017년 97,512명으로 증가
 - 예산은 2016년 국비 4,579억 원에서 2017년 4,347억 원으로 5.5% 상승(취업성공패키지 제외)
- 보다 구체적인 자활참여자들의 항목별, 연도별 변화 추이에 관해서는 인천복지재단(2020) 연구를 참고

[표 5] 자활사업 참여자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참여자)	88,839	87,226	83,368	96,659	98,980	101,626	99,574	97,512
보건복지부	86,399	79,311	69,958	81,651	80,990	75,532	69,925	71,600
고용노동부	2,440	7,915	13,410	15,008	17,990	26,094	29,649	25,912

주 : 1) '보건복지부(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출처: 박은희, 박은선(2019), 일·복지 연계 자활사업 효과를 높이자!, 대구경북연구원

- 자활기업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1,176개의 자활기업이 있으며, 지역 자활기업이 1,136개(96.6%), 광역자활기업 37개(3.1%), 전국자활기업은 3개(0.3%)임
 - 참여자수는 자활기업 6,636명(47.5%), 전국자활기업 6,165명(44.2%), 광역자활기업 1,160명(8.3%)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표 6] 자활기업 현황(2019년 말)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기업수	1,136	37	3(서울2, 전북1)	1,176
참여자수(명)	6,636	1,160	6,165	13,961*

* 지역과 광역-전국자활기업 중복참여인원 2,663명 제외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 광역자활의 경우 총 37개 기업 중 부산, 대구, 전북이 5개, 서울과 경기도가 각 4개, 인천 3개, 강원, 경북, 경남, 충남이 각각 2개, 대전, 전남, 충북이 각각 1개 기업이 존재
- 지역자활의 경우 경기 182개, 서울 140개, 전북 102개, 경북 100개, 4개 지역이 100개 이상의 자활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전남 83개, 강원 75개, 부산 69개, 경남 68개, 광주 60개, 충북 56개, 충남 53개, 대구 42개, 인천 39개, 제주 21개, 대전과 울산이 18개, 세종 10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을 의미

- 설립요건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 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 요건임
- 자활기업은 크게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표 8]를 참고

[표 7]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비교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간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간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그 외 지원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 자활기업 지원제도는 주로 창업자금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기금 활용으로 구성됨

- 창업자금 지원은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매출적립금 지원 시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 가능
 - 단, 지원된 시설 및 장비는 자활기업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자활기업인정서 반납 및 회수, 휴·폐업 등 자활기업 종료 시 잔여재산 반납 또는 매각 후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 드로 반납
- 한시적 인건비 지원의 경우, 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자활기업에서 인력지원 형태로 자활근로참여자를 같은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기업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음. 즉,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최대한 많은 수급자가 자활기업 구성원으로 포함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 신규 창업(인정) 자활기업의 수급자 채용 유도 및 초기 안정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 특례자),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있음
- 또한 자활기업은 자활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융자 및 전세점포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한편 창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또는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컨설팅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개발비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자활기금을 활용하고 광역자활센터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함

[표 8]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별 구분표

구분	수급자	비수급자	비수급자
지원금액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 (주차·월차 수당, 실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 (주차·월차 수당, 실비)	월 250만원 이내 (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
지원기간	최대 5년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최대 6개월 (3개월) 100% (3개월) 50%	최대 5년
재원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기금
신청기간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	인정과 동시 신청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

자료: 보건복지부(2021)

1 해외 근로연계 사회사업 벤치마킹

1)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 개념 및 특성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와 유사한 개념
 - 근로연계형 복지는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표로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에 취업을 유인하는 정책목표(근로연결모델)와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노동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에 이르도록 하는 정책목표(인적자원개발모델)의 두 가지 측면에 목표를 두고 있음(신원식·김현주, 2009)
 - 즉, 근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법 제9조 제5항)하는 제도의 특성은 서구에서 복지의존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연계복지의 도입 목적과 유사한 성격
 -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을 제공한다고하는 부분은 ‘근로 연결 모델’의 특성에 해당하고, 자활사업의 제반 사업으로 주로 제시되는 직업기술 교육·훈련 및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노동 역량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모델’에 해당함

2) 국가별 세부 사업 사례

(1) 북미권(미국 및 캐나다)

■ BAYCAT¹⁵⁾

- 미국의 BAYCAT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취약 계층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 여성청소년 대상 사업으로 특화 중에 있음. 초기 이 단체는 비영리

15) <http://www.baycat.org/>

단체였으나, 자활 및 취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BAYCAT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예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영화 제작, TV 프로그램 제작, 애니메이션, 그래픽 및 웹 디자인 등의 기술, 교육, 인성교육, 고용까지 이어주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500여 명의 청소년이 미디어 교육을 받았고, 이 가운데 90%가 빈곤 지역의 청소년임
 - 씨티뱅크, 야후 같은 회사들을 위해 비디오 광고 등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정부나 개인, 기업 재단의 기부금 역시 활용하고 있음. 외부에서 요청받은 미디어 제작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의 캠페인 광고물 등을 만들어 교육받는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의 이슈에 대해 느끼고 체험하고 스스로 작가, 배우가 되어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의 내용임
- 특히 베이캣은 18세 이상의 교육생을 주로 고용하며,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생계를 위해 일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있음
 - 11~17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는 6개월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여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은 보호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 수업시간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취약계층 청소년이 인턴으로 고용되면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6개월간 자신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며, 인턴 과정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이면 나중에 성인이 된 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 주요 시사점은 교육과 고용으로의 연계라는 지속적 관점을 강조하였다는 점과, 비영리단체로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에서 사업모델로 진화하였다는 점임
 - 이는 후원기업의 필요로 하는 광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후원과 자선의 측면에 머물던 것을 광고주와 광고제작자의 거래관계로 치환시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진화하였음을 의미
- 청소년들의 교육-고용의 선순환 유지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후원금이나 정부의 복지재원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탈수급 및 자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접목이 요구·시도된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되는 자활기업들에 적용 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Rubicon program¹⁶⁾

- Rubicon program은 전과자, 장애인,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루비콘 조정서비스, 루비콘 베이커리 등을 통해 수익창출과 함께 일자리 훈련 및 직접고용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임
- Rubicon program은 2006년~2007년 사이 1024명에게 근로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중 350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냈으며, 또한 929명에게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238명이 영구 거주지나 임시 거주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 특히 Rubicon program은 섭식, 정신 건강, 주택, 법률 등 자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서비스(Workforce Services), 주택 및 사례관리(Housing and Case Management), 정신 건강 치료(Mental Health),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임
- Rubicon program의 성공은 16년간 루비콘의 주력사업이었던 Rubicon 베이커리에서 기인함에도 Rubicon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베이커리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후 루비콘은 서민금융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자활자 대상의 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 루비콘은 수급자들의 직업교육 체계화를 시도하였으며, 지속적인 직업 교육을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대학에의 진학 지원, 지원받은 인력이 루비콘의 교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직업 교육 결과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음

■ Juma Ventures¹⁷⁾

- Juma Ventures는 미국의 15-29세의 저소득 청소년들 중 특히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임
- 초기에는 JUMA였으며 이는 1993년 상업적인 프랜차이즈인 Ben & Jerry를 소유하며 운영하는 최초의 비영리기관으로 출발, 당시 연간 25명 정도의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 및 직업 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

16) <http://www.rubiconprograms.org/>

17) <https://www.juma.org/>

었으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 단체 LSYC(Larkin Street Youth Center)가 청소년 노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996년 “Juma Ventures”라는 사회적기업으로 독립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Juma Ventures는 진학 서비스, 재정교육, 직업능력 개발 등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400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주고 있음
- Juma Ventures는 설립 이래 발전을 거듭하며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오클랜드, 샌디에이고, 워싱턴 D.C까지 진출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청년 사회적기업의 대표 모델로서 자리매김함
 - 현재도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금융지원, 직업 탐방, 1대1 멘토링 및 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Juma Ventures의 도움이 받은 바 있는 선배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임

■ Pioneer human services¹⁸⁾

- Pioneer human services는 1963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시작됐으며, 약물중독자, 노숙인, 출소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최초의 사회적기업임
- Pioneer human services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 개입 및 부모와 청소년 상담 등을 시행하는 유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이들은 초기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매출성과를 올렸으며 연간 12,000명이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음
- Pioneer human services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과 취업자 복무관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홍보 등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아웃소싱을 하는 등 전문적인 경영을 운영한다는 것과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 Pioneer human services는 운영 초기 보잉사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하청업체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스타벅스와도 계약을 맺어 카

18) <https://pioneerhumanservices.org/>

폐 및 외식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 외에도 집수리, 식품도매상 등을 하며 사업을 확장 시켰으며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2016년만에도 10,645명의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

- 특히 출소자들의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에 동화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Pioneer human services에서는 스스로를 범죄자로 낙인찍지 않고 동료, 친구,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음

■ Room to Read¹⁹⁾

- Room to Read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이었던 존 우드(John wood)가 1999년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네팔의 오지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워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말 330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모은 저력 있는 기관으로 지구촌 곳곳의 빈민 지역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함
- 그 결과 2017년 11월에는 인도에서 2만 번째 도서관이 개장하였고 전 세계 15개국 1,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얻고 있음
- Room to Read는 전세계 빈민 지역 어린이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가난한 지역에 학교와 도서관을 짓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를 트레이닝하며, 각 국가 교육부와 협력해 시스템을 바꾸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음
-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2004년부터는 24개 현지어로 된 아동 도서를 직접 출판하기도 함
- 현재 Room to Read 경영진 대부분은 기업 출신이며, CEO는 골든만삭스, CDO는 테크 스타트업 출신임
- Room to Read는 한 해 현금 기부로 4530만달러(2017년 기준), 현물 기부로 420만달러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30%는 기업 기부금, 나머지 30%는 기업 대표나 임원의 개인 기부임
- 골든만삭스, 크레딧스위스, 힐튼, 오라클, 스와로브스키 재단 등 굴지의 기업·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Room to Read의 간접비는 17%로 행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의 유·무상 자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특징임

19) <https://www.roomtoread.org/>

- Room to Read가 사업을 시작한 첫 6년간 스타벅스는 500개의 매장을 오픈하였지만, Room to Read는 3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설립하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NGO이자 자선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최근에는 특히 빈곤지역의 여아들의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 건립 이외에도 절대적으로 다양한 책들을 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Roca²⁰⁾

- Roca는 1998년 메사추세츠 주정부의 'Teen Challenge Fund'로부터 13만 4천 달러를 지원받아 10대 임신부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어 Roca는 켈스, 리베르 등 여러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출소자 혹은 미성년 부모들에게 교육, 고용,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Roca의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별 맞춤형으로 문제를 풀어낸 후, 대안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 2년간 보조금이 지급되는 인턴십 연계 고용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직업현장에 고용되어 실제 일을 하면서 배우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간당 8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됨
- Roca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Children Trust Fund'와 보스턴의 아동 단체가 지원하는 '건강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약 150명의 10대와 처음 부모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음
- Roca는 비영리금융, 고위험군, 청소년 업무, 지역사회 조직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1명의 풀타임 직원과 20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팀을 이루고 있음
- Roca의 총매출은 개인보조금과 기부금이 67%, 정부지원금이 28%를 차지하고, Roca는 청소년 출소자들이 고용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정서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있음

20) <https://rocainc.org/>

■ John's Bakery²¹⁾

- John's Bakery는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재능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위기 청소년과 홀리스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John's Bakery는 빵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 마케팅 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최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이를 차별화전략으로 세워 성공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전통적인 프랑스 방식으로 유기농 이스트 빵과 수제 과자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인증된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공급자들에게서 최고의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빵은 하루에 1,200여개 정도를 생산하고 아침에 판매하고 난 후에는 50%로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상승을 유인하고자 함
- 이곳의 근로자들은 교육과 훈련을 이수함에 있어 개인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봉사 활동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봉사 혜택을 얻게 됨
- 이들의 사례는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시장진입에 성공한 이후에도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Furniture Bank²²⁾

- Furniture Bank는 지역사회의 중고가구나 가정용품 등을 수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편모가정, 이민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숙자, 실향민 등 빈민계층을 고용하고 있음
- 1988년에 시작한 이래로, 70,071명의 개인과 28,854 가정에 도움을 주었고, 2012년에 오타와, 몬트리올, Mississauga 등의 도심가에 널리 있는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약 6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음
- Furniture Bank는 무료로 가구를 보급하는 대신 운송비용을 청구하며, 중고가구의 경우 침대나 소파에 곰팡이나 집진드기로 인해 오염이 되어있을 수 있

21) <https://stjohnrestaurant.com/>

22) <https://www.furniturebank.org/>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곰팡이 자국, 얼룩, 낙서 등을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서 고객들이 가구를 고를 수 있는 쇼룸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함

- 운송의 경우 트럭과 직원을 동원한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고 약 26,000 평방피트의 쇼룸에 대한 임대료 지불 등 적절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 쇼룸에서는 빈대 냄새에 훈련된 개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임
- Furniture Bank는 매년 정부에게 일정금액을 지원받아 안정적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해 필요시 자원봉사자가 없는 등의 위급상황을 예방하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등 서비스공급에 있어 사기업 못지않은 인력을 채용,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고용창출의 측면 외에도, 캐나다 환경보전의 의의와 더불어 쓰레기 소각 비용,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노숙자 및 실항민들에게 적은 금액으로도 적절한 가구를 비치할 수 있게 하여 존엄성과 안전성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유럽 및 스페인

■ Fifteen²³⁾

- Fifteen은 피프틴 재단에서 운영하며, 피프틴 재단은 요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확보한 이윤을 불우한 청소년들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음
- 현재 암스테르담, 콘월, 멜버른, 런던 등 4개 곳에서 운영 중이며 18~24세 사이의 젊은 셰프들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 Fifteen은 16~24세 사이의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교육, 훈련을 시키고 이 과정을 마친 청년들은 Fifteen은 물론 유럽 각지의 레스토랑에서 요리사 또는 매니저로 일하거나 직접 창업하게 됨

23) <http://www.fifteen.net/>

- 이들 훈련생의 취업률은 평균 65%임
- Fifteen은 16~24세 사이의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가출 청소년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레스토랑 내에 전문 상담사를 두고 청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함
- Fifteen은 직업 역량 강화 교육과 정서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직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더불어, 인턴십이나 일용직 등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창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할 경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원(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연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지원제도는 대부분 인턴십 과정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에 비교하면, Fifteen의 창업장려 제도는 대상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로동기를 강화하며 빠른 정착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지점임

■ Hill Holt Wood²⁴⁾

- Hill Holt Wood는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에서 배제되었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거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Hill Holt Wood는 숲을 기반으로 특화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으로부터 나오는 소재에 친환경 콘셉트를 부여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임
- 현재 Hill Holt Wood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삼림 보존, 원예, 파머컬처, 철공, 목공, 그린 목공, 동물 보호와 양육, 산림 관리 기술, 예술과 공예, 커뮤니티 경영 등으로 다양함
 - 장인적 기술을 보유한 Hill Holt Wood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숲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 제작과 판매로 이어지며, 수려한 장식이 새겨진 전기 톱, 기계로 등글게 다듬는 맷시 있는 술잔과 접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중세식 테이블, 퇴비를 사용한 유기물 화장실 등이 대표적인 성공 상품 사례로 볼 수 있음
- Hill Holt Woo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청소년 고용 및 직업 훈련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숲을 활용

24) <http://www.hillholtwood.co.uk/>

한 신상품을 계속 개발하여 판매 비중도 늘려 나가는 한편, 미디어, 인터넷, 출판 등을 통해 사업 철학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주목받기도 하였음

- 현재는 정부, 자선단체, 의회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

- Hill Holt Wood는 청소년에게 숲과 공동체가 주는 전인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청소년 직업 훈련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들의 성공요인은 수급 대상인 청소년을 위한 직업 교육의 강화 외에 지역 내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한 점과, ‘숲’을 컨셉으로 하는 다양한 직무의 개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홍보한 점임

■ Fageda²⁵⁾

- La Fageda는 정신질환이라는 태생적 혹은 후천적 장애를 안게 된 이들과 함께 값진 노동력을 통해 정상인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건강한 제품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페인의 사회적 기업임
- 이들은 스페인에서 업계 내 낙농업 제품 3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정신질환자가 만든 유제품이라는 고객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젖소에서 원유를 얻는 모습부터 제품의 생산까지의 전 공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생산되는 치즈, 요거트, 우유 등 각 상품마다 생산에 참여한 직원들의 얼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창의적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음
-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선 행위로서가 아니라 맛이 좋아서 La Fageda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즉, 소비자들이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기업 성장의 주요 과업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핵심임을 시사하는 사례임

25) <http://www.fageda.com/>

2 | 국내 자활사업 벤치마킹

■ 타 지자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체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함

- 분석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 혹은 아이템이 자활 근로자의 취업 및 창업에 있어 역량향상을 가능케 하는가?
 - 둘째, 사업의 운영 방식 혹은 홍보 전략이 효과적인가?
 - 셋째, 지역사회가 자활사업단 혹은 자활기업에 대한 후원, 구매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한가?

1) 경기도 광역 자활기업 ‘핸디아’

■ ‘핸디아’는 목공상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자활기업임

- 목공생산 및 가공업을 주 내용으로 함
- 경기도 내 구리, 시흥, 안양, 수원, 평택, 용인점을 운영하고 있음
- 목공 상품 뿐 아니라 키트상품, 원데이 클래스, 생활목공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특징 및 강점

- 목공생산 및 가공업을 주 내용으로 함으로써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 자활 근로자의 기능 향상이 가능함
- 숙련된 기술을 가져야만 하는 목공예품 생산뿐만 아니라, 키트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목공기술이 덜 숙련된 자활근로자도 단순 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일반소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생활목공자격과정을 운영하여 목공기술자를 훈련, 양성하고 해당 기업 인력으로 재투입 할 수 있어 기업 내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임

2) 경상북도 광역 자활 쇼핑몰 ‘스물세그루’

■ ‘스물세그루’는 경상북도 자활생산품 인터넷 쇼핑몰임

- 경상북도 내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하나의 쇼핑몰로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식품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등의 도내 우수 자활생산품을 선정하여 홍보 및 판매함

■ 특징 및 강점

- 도내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내 상품들 중 우수제품을 선정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자활생산품의 경쟁력 확보
- 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

3) 부산 자활기업(협동조합) ‘자유자재은행’

■ ‘자유자재은행’는 목공상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자활기업임

- 부산 내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임
- 부산자활기업들의 경쟁력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구매와 교육, 홍보, 상호부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자재은행을 설치하여 남은 자재들을 수집하여 필요한 업체에 할인 판매 등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특징 및 강점

- 공동구매 및 건축자재은행의 체계적 운영으로 원가절감 및 자원 절약
- 공동구입 과정에서 자재구매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된 자재사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자활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및 추가 고용창출 역량 제고

- 건축·집수리 자활기업은 대부분 소규모로 재사용가능한 자재 보관 및 관리가 어려워 많은 자재가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 및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건축 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잔여자재의 효과적인 재사용시스템을 마련

4)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 경기시흥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인 꿈지, 하루숲, 그담과 직영사업단인 나무살림을 ‘생활속’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생산한 자활상품을 판매·유통하는 주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① 그담

- ‘그담’은 도자기 페인팅 공방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자활기업임
- ‘그담’은 도자기공예 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생산물 제조 및 판매경영과 사업운영에서의 능력향상을 꾀함
- 생산 물품은 경기시흥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스토어 ‘생활속’외에도 국내 최대 인터넷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를 활용하여 판매함

■ 특징 및 강점

- 다양한 판매망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많은 종류의 디자인 상품을 출시함
- 높은 상품성을 토대로 핸드메이드 플랫폼 내에서도 높은 평점과 많은 팔로워들을 확보하고 있음
-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홍보와 자활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려함

② 하루숲

- ‘하루숲’은 천연EM비누제품의 기술교육을 통해 자활참여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함
- 제품판매를 통해 경영능력 역량을 강화하여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손빨래비누, 천연물비누, 편백물비누, 샴푸, 주방세제 등 다양한 천연비누제품의 생산 및 연구와 유통 및 판매를 시행함

■ 특징 및 강점

- 네이버 ‘해피빈’에서 시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판매처를 확보함
-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품을 생산함
- 깔끔한 포장을 통한 선물세트를 제작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력을 상승

제4절 소결: 자활사업 지향점 논의

-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근로·복지 연계 제도로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 구축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접목 가능성’을 실험했던 대표적 사례이자, 우리사회의 근로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다양한 모형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노대명, 2010)
 - 다만 다양한 부정적인 평가 역시 병존하고 있는데, 주로 자활사업의 시장성이나 수급자의 자활이라는 성과에 대하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활지원프로그램 성과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평가(조향희, 2015) 및 제도화 이전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성격이 강했던 초기 자활사업의 현장기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책으로서 제도화된 자활사업정책은 그 목적과 목표가 상이하여 제도화 시기부터 현재까지 20여년 간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야 했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장 실무와 정책 목표 및 성과관리의 상이함 등의 비판 등임
 - 즉, 특히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한계로서 지목되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수급’의 장치로서 자활사업이 활용될 뿐, 실질적인 탈빈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해외 사례 중 근로연계 복지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지향점 및 인천광역시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구축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과 업종을 초월한 적극적인 연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홍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Room to Read의 대기업 연계전략
 - John's Bakery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인력 수급방식
 - 둘째,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이전에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임. 이는 단순히 수익성이나 공공성이냐의 zero sum 논의가 아니라, 품질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할 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외시 될 수 없는 지점임

- Fageda의 사례 및 John's Bakery의 사례

- 셋째, 체계적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임. 즉, 단순히 사회적 약자 그룹의 고용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또 진출한 선배그룹이 후배그룹을 멘토링 하는 등의 선순환구조를 가능하게 함

- Fifteen 재단의 사례

- Roca의 사례

■ **상기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인천시 자활센터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음**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자활일자리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전략
- 둘째,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분야를 초월한 연계전략
- 셋째, 진정한 탈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 훈련전략

제3장 인천 자활사업 진단

제1절 인천 자활인프라 현황

제2절 인천시 자활사업 진단

제3절 인천시 자활 환경 및 사업 SWOT분석

제4절 소결: 인천 자활사업 개선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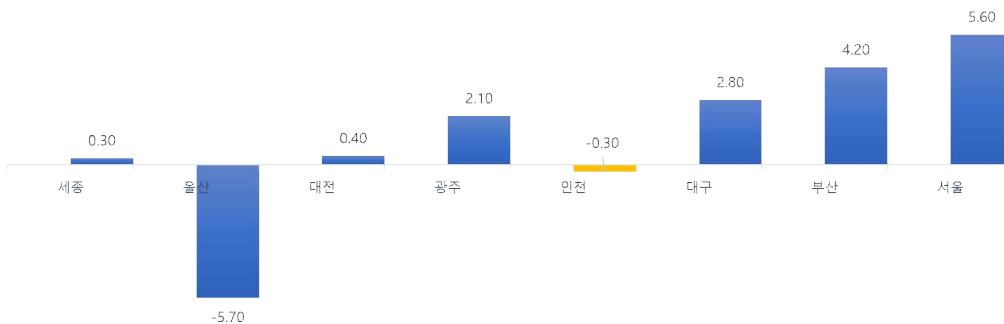
1 | 인천광역시 기본 현황

1) 기초자료 분석 결과

■ 인구 변동 및 지역 인구 특징

-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021년 기준 2,948,37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여성 100명당 남성인구 100.3명)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5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성비 격차에 해당함

[그림 3] 시도별 남녀 성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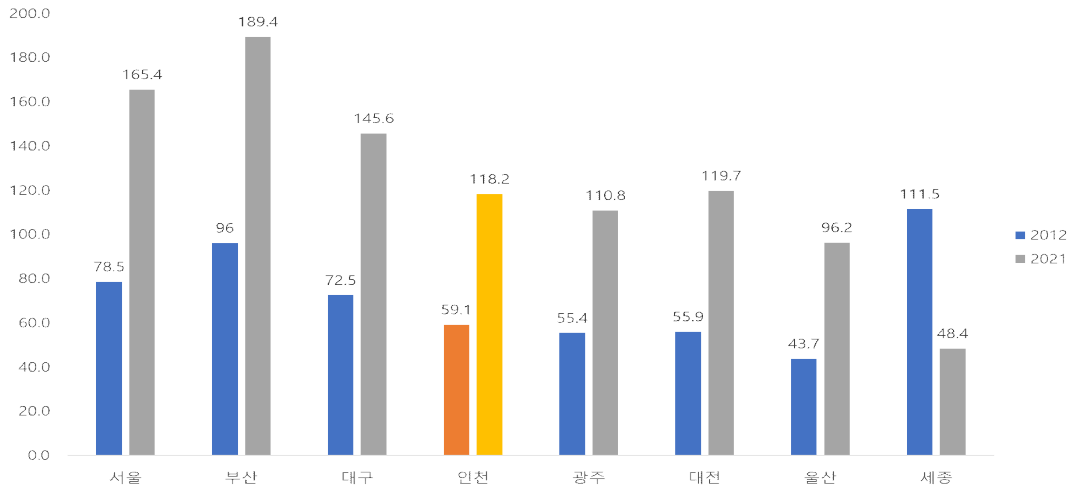
-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2020년 이전까지는 유일하게 지속적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0.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시도별 인구증감률(2016-2020년)

행정구역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특별시	-0.90	-0.78	-0.74	-0.38	-1.00
부산광역시	-0.38	-0.76	-0.75	-0.78	-0.80
대구광역시	-0.12	-0.37	-0.47	-0.87	-0.89
인천광역시	0.63	0.30	0.38	0.22	-0.62
광주광역시	-0.10	-0.27	-0.20	-0.13	-0.60
대전광역시	-0.25	-0.77	-0.76	-0.94	-0.88
울산광역시	-0.33	-0.85	-0.85	-0.61	-1.25

- 노령화지수²⁶⁾를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인천시의 노령화지수는 100명당 118.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8대 광역·특별자치시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증감비율로 보았을 경우에는 세 번째로 타시도에 비해 완만한 증가폭을 보인다 할 수 있음

[그림 4] 시도별 노령화지수 변화(2012년-2021년)



- 군·구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는 미추홀구(16,853명/km²) 및 부평구(16,436명/km²)이며 가장 밀집도가 낮은 구는 용진군입(120명/km²)임

[그림 5] 인천시 군·구별 인구밀집도

(단위: 명/km²)



26) 유소년 인구(0세-14세) 100명당 노인 인구 비율로, 높을수록 유소년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음을 의미함(산식: {고령인구(65세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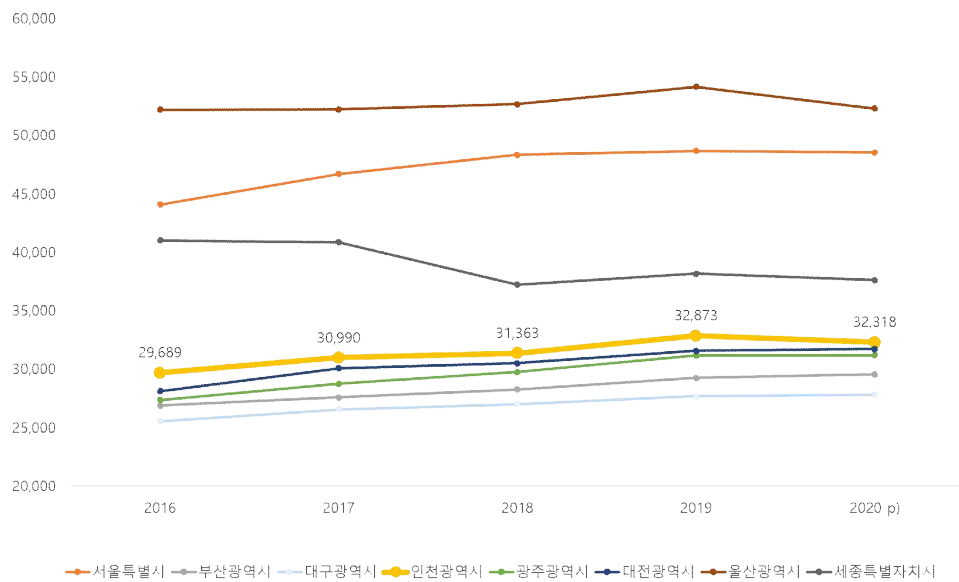
[표 10]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군·구별)

연도	세 대1)	등록인구 Registered Population(명)			세대당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평균 연령	인구 밀도 (명/km ²)	
		합 계	남	여				인구밀도	면적(km ²)
2015	1,154,004	2,983,484	1,503,639	1,479,845	2.59	324,255	39.3	2,847	1,047.87
2016	1,171,399	3,002,172	1,512,065	1,490,107	2.56	324,255	39.9	2,789	1,076.40
2017	1,188,917	3,011,138	1,515,950	1,495,188	2.53	345,024	40.4	2,832	1,063.09
2018	1,213,201	3,022,511	1,521,044	1,501,467	2.49	362,675	41.0	2,843	1,063.27
2019	1,238,641	3,029,285	1,523,404	1,505,881	2.45	384,548	41.5	2,849	1,063.26
중 구	65,002	139,385	72,223	67,162	2.14	19,076	41.2	994	140.29
동 구	28,739	65,362	33,064	32,298	2.27	13,751	46.0	9,091	7.19
미추홀구	184,872	418,494	210,990	207,504	2.26	65,642	43.0	16,853	24.83
연수구	140,700	379,727	189,197	190,530	2.70	34,346	38.6	6,910	54.95
남동구	221,455	545,131	273,219	271,912	2.46	66,423	41.3	9,560	57.02
부평구	211,851	526,126	260,859	265,267	2.48	69,549	42.5	16,436	32.01
계양구	123,283	306,817	153,075	153,742	2.49	35,043	42.2	6,733	45.57
서 구	217,887	557,415	283,696	273,719	2.56	53,691	39.6	4,761	117.09
강화군	33,163	70,037	35,238	34,799	2.11	21,902	52.2	170	411.43
옹진군	11,689	20,791	11,843	8,948	1.78	5,125	48.9	120	172.88

■ 인천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소득과 소비 실태 중 인천시 주민의 1인당 총소득²⁷⁾은 2020년(추산²⁸⁾) 기준 1인당 32,318천원으로, 전국 8대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 및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광역시에 해당함

[그림 5]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광역시)



[표 11]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군·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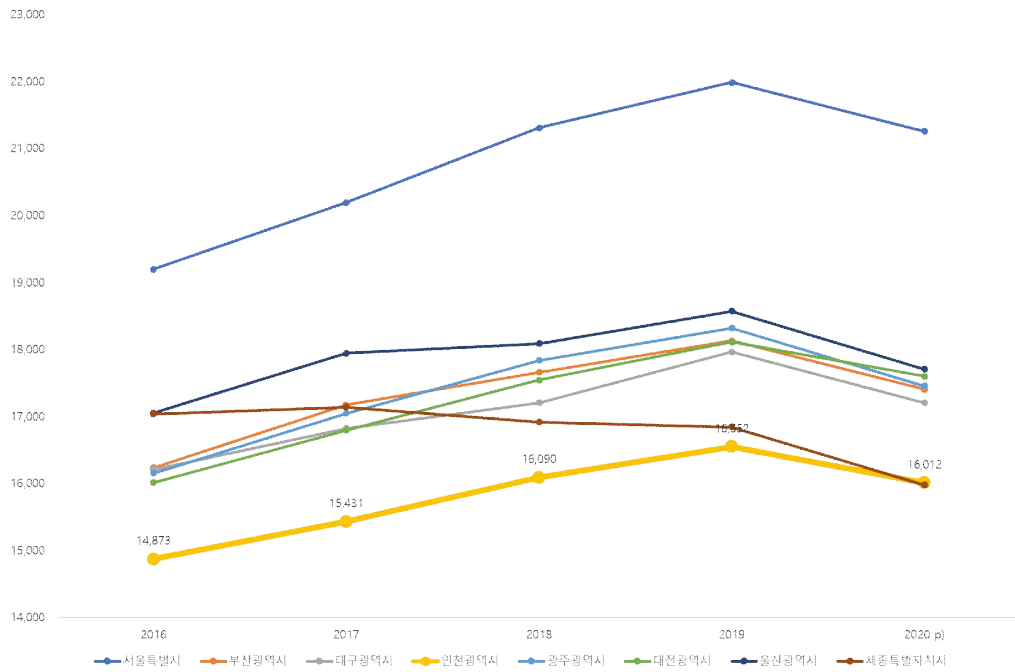
시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p)
전국	34,167	35,977	37,014	37,596	37,677
서울특별시	44,111	46,715	48,362	48,693	48,552
부산광역시	26,883	27,592	28,287	29,259	29,565
대구광역시	25,551	26,561	27,004	27,700	27,825
인천광역시	29,689	30,990	31,363	32,873	32,318
광주광역시	27,373	28,759	29,759	31,186	31,197
대전광역시	28,124	30,102	30,529	31,566	31,733
울산광역시	52,205	52,237	52,694	54,190	52,317
세종특별자치시	41,018	40,876	37,243	38,186	37,623

27) 총처분가능소득을 지역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소득으로, 지역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 각 측면이나 경제주체간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냄(산식: 1인당 지역총소득=전체(사용)총처분가능소득÷추계 인구)

28) 2019년 5월 공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임

- 소비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시 주민은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²⁹⁾이 가장 낮은 시에 해당하며(2020년 추산 기준 16,012천원) 201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옴

[그림 6]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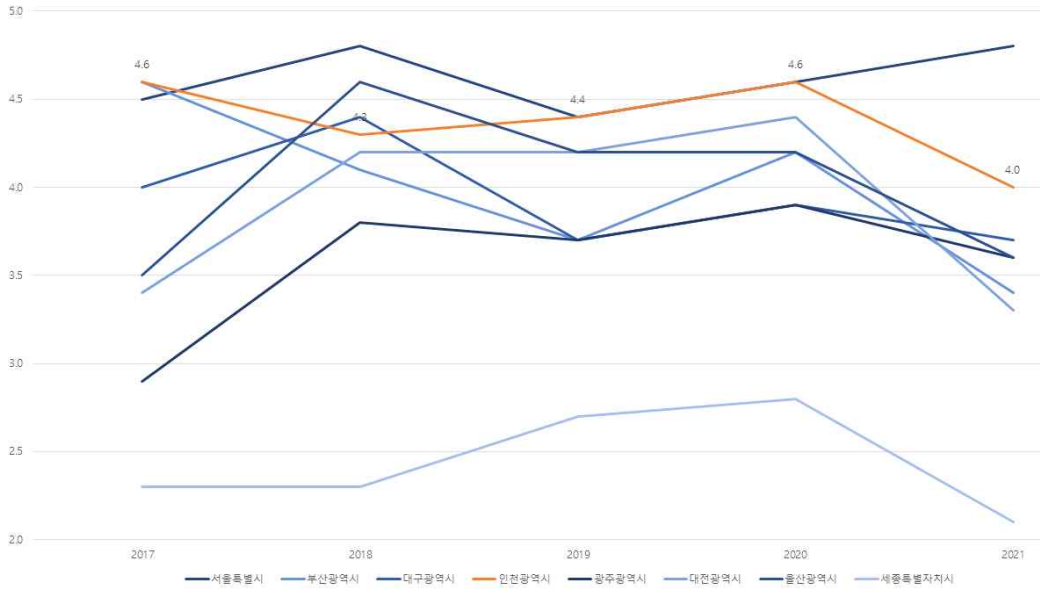
[표 12]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광역시)

시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p)
서울특별시	19,203	20,197	21,314	21,991	21,263
부산광역시	16,242	17,176	17,664	18,134	17,410
대구광역시	16,214	16,826	17,209	17,964	17,209
인천광역시	14,873	15,431	16,090	16,552	16,012
광주광역시	16,155	17,049	17,841	18,326	17,459
대전광역시	16,020	16,798	17,546	18,115	17,602
울산광역시	17,056	17,946	18,090	18,574	17,708
세종특별자치시	17,040	17,141	16,921	16,845	15,980

29) 국내총생산에 대한 민간부문의 연간 소비지출을 국민1인당 평균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의 소비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 인천광역시 주민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국 8대 시도 중 두 번째이며 이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치임(2020년 기준은 4.6%으로 서울시와 동일)
 - 다만, 2021년에는 전년대비 상당한 하락세를 보임(전년대비 -0.6%)

[그림 7] 시도별 실업률(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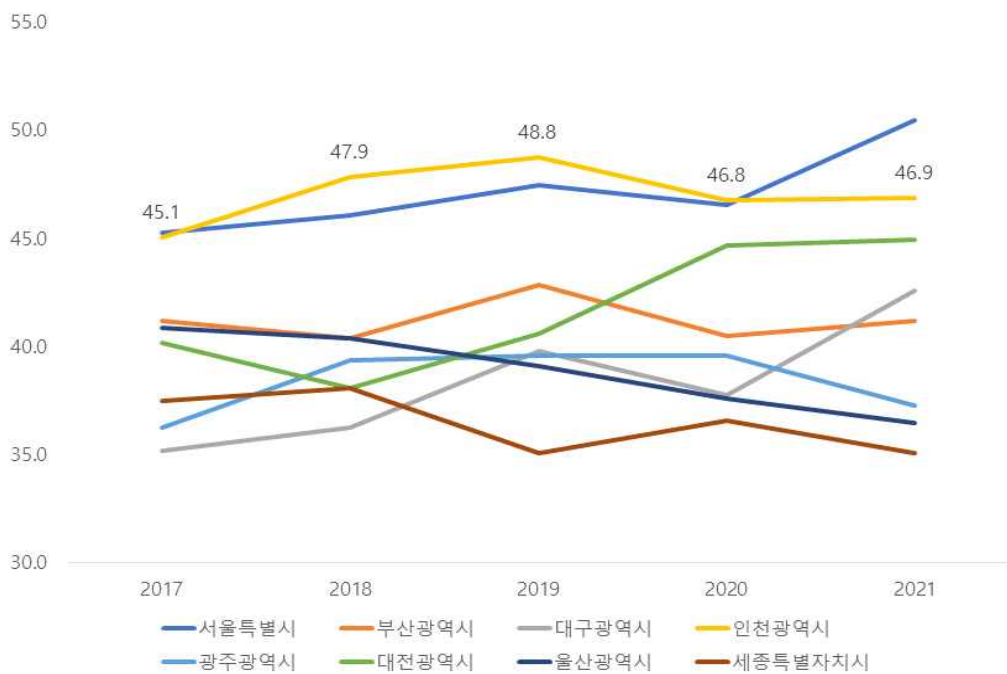


[표 13] 시도별 실업률(광역시)

시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6	3.7	3.7	3.8	3.8	4.0	3.7
서울특별시	4.2	4.2	4.5	4.8	4.4	4.6	4.8
부산광역시	4.1	3.9	4.6	4.1	3.7	4.2	3.4
대구광역시	3.5	4.1	4.0	4.4	3.7	3.9	3.7
인천광역시	5.0	4.9	4.6	4.3	4.4	4.6	4.0
광주광역시	2.9	3.1	2.9	3.8	3.7	3.9	3.6
대전광역시	3.4	3.2	3.4	4.2	4.2	4.4	3.3
울산광역시	2.9	3.8	3.5	4.6	4.2	4.2	3.6
세종특별자치시	-	-	2.3	2.3	2.7	2.8	2.1

- 청년 고용율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2021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고용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17년 이래로 인천광역시의 고용률은 꾸준히 40%대를 기록하며 상위 순위에 머무르고 있음
 - 타 광역시의 변동폭과 비교하면 인천시의 그래프는 완만한 편으로,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임

[그림 8] 광역시 청년 고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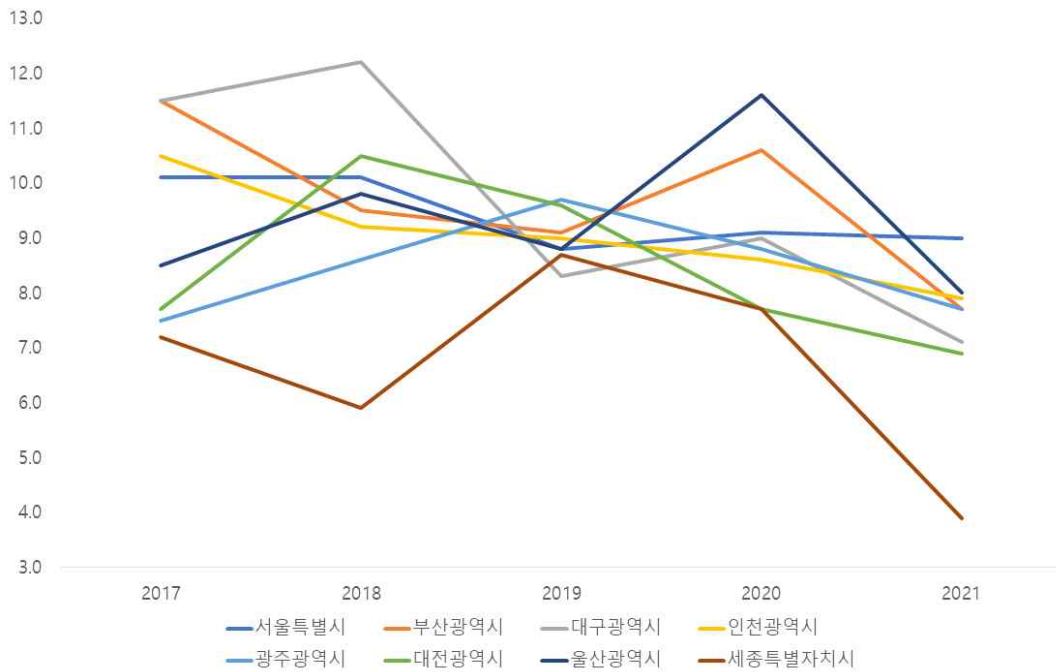


[표 14] 광역시 청년 고용율

시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특별시	45.3	46.1	47.5	46.6	50.5
부산광역시	41.2	40.4	42.9	40.5	41.2
대구광역시	35.2	36.3	39.8	37.8	42.6
인천광역시	45.1	47.9	48.8	46.8	46.9
광주광역시	36.3	39.4	39.6	39.6	37.3
대전광역시	40.2	38.1	40.6	44.7	45.0
울산광역시	40.9	40.4	39.1	37.6	36.5
세종특별자치시	37.5	38.1	35.1	36.6	35.1

-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실업율을 나타냄(2021년 7.9%)
 - 연도별 변동폭으로 보면 인천시의 그래프는 변화의 폭이 완만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실업률 변동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동시에 2017년 이래로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9] 광역시 청년 실업률



[표 15] 광역시 청년 실업률

행정구역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특별시	10.1	10.1	8.8	9.1	9.0
부산광역시	11.5	9.5	9.1	10.6	7.7
대구광역시	11.5	12.2	8.3	9.0	7.1
인천광역시	10.5	9.2	9.0	8.6	7.9
광주광역시	7.5	8.6	9.7	8.8	7.7
대전광역시	7.7	10.5	9.6	7.7	6.9
울산광역시	8.5	9.8	8.8	11.6	8.0
세종특별자치시	7.2	5.9	8.7	7.7	3.9

2) 인천시 산업별 현황 및 사업체 분석

■ 인천시 산업별 현황 및 사업체 분석의 경우, 『인천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인천복지재단, 2020)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³⁰⁾

■ 경제활동인구 변화

-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5년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인구는 156만 7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65만 3천 명으로 5.20%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91만 2천 명에서 94만 명으로 2.98% 증가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65만 4천 명에서 71만 3천 명으로 8.27% 증가함.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감률은 경기도가 8.86%S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8.27%로 서울특별시(1.91%)와 부산광역시(3.34%)에 비해 증가 폭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16]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인구 변화 2015-2019

(단위: 천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15-19
		활동인구	참가비율	활동인구	참가비율	활동인구	참가비율	활동인구	참가비율	활동인구	참가비율	
인천	계	1,567	64.4	1,598	64.9	1,607	64.7	1,645	65.7	1,653	65.4	5.20
	남	912	75.9	932	76.7	937	76.4	943	76.3	940	75.2	2.98
	여	654	53.1	667	53.5	670	53.3	702	55.4	713	55.7	8.27
서울	계	5,391	62.6	5,372	62.6	5,396	63.1	5,335	62.6	5,319	62.7	-1.35
	남	3,025	73.2	2,998	72.8	2,988	72.9	2,928	71.9	2,907	71.9	-4.06
	여	2,366	52.8	2,374	53.2	2,408	54.0	2,407	54.1	2,412	54.4	1.91
부산	계	1,756	58.7	1,754	58.5	1,766	59.0	1,729	58.1	1,741	58.8	-0.86
	남	1,004	69.6	999	69.0	1,005	69.8	979	68.4	963	67.7	-4.26
	여	752	48.5	756	48.6	760	49.0	750	48.6	778	50.6	3.34
경기	계	6,653	64.2	6,767	64.2	6,953	64.6	7,058	64.4	7,226	64.3	7.93
	남	3,917	76.2	3,976	76.1	4,088	76.6	4,148	76.2	4,224	75.5	7.27
	여	2,736	52.4	2,791	52.4	2,865	52.8	2,910	52.7	3,002	53.3	8.8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19(통계청)

30)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최신의 자료가 2019년 자료이며, 이러한 경우 2020년 인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인천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연구와 동일한 분석결과가 산출되기 때문

■ 취업인구 변화

- 인천광역시의 취업률(5.2%)은 서울특별시 1.4%, 부산광역시 2.4%, 경기도 2.9%로 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취업률 증가를 보임
- 인천광역시의 여성 취업인구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 취업인구 자체는 타 광역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서울 1.9%, 부산 3.8%→인천 9.5%), 전체 취업인구 내 여성 비율의 경우에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게 나타남(서울 3.5%, 부산 4.2% → 인천 3.0%)

[표 17] 인천광역시 취업인구 변화 2015-2019

(단위: 천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15-19
인천	계	1,488	1,520	1,533	1,575	1,581	6.2
	취업률	50.85	51.65	51.98	53.30	53.47	5.2
	남	865	883	888	902	899	3.9
	남자 %	58.13	58.09	58.09	57.93	57.27	-2.2
	여	623	637	645	672	682	9.5
	여자 %	41.87	41.91	42.07	42.67	43.14	3.0
서울	계	5,165	5,146	5,152	5,080	5,086	-1.5
	취업률	51.54	51.82	52.27	52.02	52.28	1.4
	남	2,896	2,872	2,849	2,786	2,774	-4.2
	남자 %	56.07	55.81	55.30	54.84	54.54	-2.7
	여	2,269	2,274	2,304	2,295	2,313	1.9
	여자 %	43.93	44.19	44.72	45.18	45.48	3.5
부산	계	1,684	1,686	1,685	1,657	1,676	-0.5
	취업률	47.92	48.19	48.55	48.15	49.09	2.4
	남	962	957	961	935	927	-3.6
	남자 %	57.13	56.76	57.03	56.43	55.31	-2.1
	여자	722	729	724	722	749	3.7
	여자 %	42.87	43.24	42.97	43.57	44.96	4.2
경기	계	6,393	6,504	6,685	6,790	6,952	8.7
	취업률	51.05	51.14	51.93	51.92	52.51	2.9
	남	3,764	3,826	3,927	3,989	4,057	7.8
	남자 %	58.88	58.83	58.74	58.75	58.36	-0.9
	여	2,629	2,678	2,758	2,802	2,895	10.1
	여자 %	41.12	41.17	41.26	41.27	41.64	1.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19(통계청)

■ 세대별 취업인구 변화

- 세대별 취업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취업률 증가폭이 넓은 세대는 60대 이상의 노령인구임(인구 증감율 29.5%, 취업률 21.8%)
- 20-30대 취업률 증가를 서울, 부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천시의 취업률의 경우 증가 비율은 약간 높고 감소비율은 약간 적게 나타남. 이는 앞서 청년 취업률을 광역시도별로 비교한 지표와 일치하는 결과임

[표 18] 인천광역시 세대별 취업인구 변화 2015-2019

(단위: 천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15-19
인천	20대 이하 취업인구	15	13	14	14	14	-6.7
	20대 이하 취업률	1.01	0.86	0.91	0.89	0.89	-11.9
	20대 취업인구	212	224	225	237	238	12.3
	20대 취업률	14.25	14.74	14.68	15.05	15.05	5.6
	30대 취업인구	339	340	335	336	340	0.3
	30대 취업률	22.78	22.37	21.85	21.33	21.51	-5.6
	40대 취업인구	400	404	394	392	378	-5.5
	40대 취업률	26.88	26.58	25.70	24.89	23.91	-11.0
	50대 취업인구	350	363	373	388	387	10.6
	50대 취업률	23.52	23.88	24.33	24.63	24.48	4.1
	60대 이상 취업인구	173	177	191	209	224	29.5
	60대 이상 취업률	11.63	11.64	12.46	13.27	14.17	21.8
서울	20대 이하 취업인구	45	45	48	32	33	-26.7
	20대 이하 취업률	0.87	0.87	0.93	0.63	0.65	-52.3
	20대 취업인구	798	805	804	821	836	4.8
	20대 취업률	15.45	14.64	15.61	16.16	16.44	6.4
	30대 취업인구	1,252	1,220	1,227	1,193	1,178	-5.9
	30대 취업률	24.24	23.71	23.82	23.48	23.16	-4.5
	40대 취업인구	1,273	1,275	1,230	1,218	1,163	-8.6
	40대 취업률	24.65	24.78	23.87	23.98	22.87	-7.2
	50대 취업인구	1,168	1,144	1,143	1,110	1,106	-5.3
	50대 취업률	22.61	22.23	22.19	21.85	21.75	-3.8
	60대 이상 취업인구	629	657	701	707	770	22.4
	60대 이상 취업률	12.18	12.77	13.61	13.92	15.14	24.3

부산	20대 이하 취업인구	15	12	17	9	9	-40.0
	20대 이하 취업률	0.89	0.71	1.01	0.54	0.54	-39.3
	20대 취업인구	227	237	232	229	237	4.4
	20대 취업률	13.48	14.06	13.77	13.82	14.14	4.9
	30대 취업인구	351	351	350	331	325	-7.4
	30대 취업률	20.84	20.82	20.77	19.98	19.39	-7.0
	40대 취업인구	415	402	400	395	389	-6.3
	40대 취업률	24.64	23.84	23.74	23.84	23.21	-5.8
	50대 취업인구	425	410	400	392	404	-4.9
	50대 취업률	25.24	24.32	23.74	23.66	24.11	-4.5
	60대 이상 취업인구	251	274	286	301	312	24.3
	60대 이상 취업률	14.90	16.25	16.97	18.17	18.62	25.0
경기	20대 이하 취업인구	69	72	80	70	63	-8.7
	20대 이하 취업률	1.08	1.11	1.20	1.03	0.91	-15.7
	20대 취업인구	940	942	958	979	993	5.6
	20대 취업률	14.70	14.48	14.33	14.42	14.28	-2.9
	30대 취업인구	1,482	1,502	1,491	1,513	1,513	2.1
	30대 취업률	23.18	23.09	22.30	22.28	21.76	-6.1
	40대 취업인구	1,829	1,816	1,832	1,792	1,773	-3.1
	40대 취업률	28.61	27.92	27.40	26.39	25.50	-10.9
	50대 취업인구	1,416	1,465	1,565	1,613	1,667	17.7
	50대 취업률	22.15	22.52	23.41	23.76	23.98	8.3
	60대 이상 취업인구	657	707	759	824	942	43.4
	60대 이상 취업률	10.28	10.87	11.35	12.14	13.55	31.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19(통계청)

■ 교육수준별 취업인구 변화

- 인천광역시의 대졸 이상 취업인구는 2015 년 대비 20.7%로 여타 지역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의 취업률 또한 1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반면, 초졸 이하 취업인구의 증감은 -24.4%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감소세를 보임

[표 19] 인천광역시 교육수준별 취업인구 변화 2015-2019

(단위: 천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15-19
인천	초졸 이하 취업인구	90	90	78	71	68	-24.4
	초졸 이하 취업률	6.05	5.92	5.09	4.51	4.3	-28.9
	중졸 취업인구	116	125	119	118	114	-1.7
	중졸 취업률	7.8	8.22	7.76	7.49	7.21	-7.6
	고졸 취업인구	714	722	718	733	172	-0.3
	고졸 취업률	47.98	47.5	46.84	46.54	45.03	-6.1
	대졸 취업인구	569	583	618	653	687	20.7
	대졸 취업률	38.24	38.36	40.31	41.46	43.45	13.6
서울	초졸 이하 취업인구	249	229	226	207	210	-15.7
	초졸 이하 취업률	4.82	4.45	4.39	4.07	4.13	-14.3
	중졸 취업인구	371	343	332	317	310	-16.4
	중졸 취업률	7.18	6.67	6.44	6.24	6.1	-15.0
	고졸 취업인구	1,796	1,792	1,757	1,662	1,600	-10.9
	고졸 취업률	34.77	34.82	34.1	32.72	31.46	-9.5
	대졸 취업인구	2,750	2,782	2,837	2,895	2,966	7.9
	대졸 취업률	53.24	54.06	55.07	56.99	58.32	9.5
부산	초졸 이하 취업인구	131	133	123	102	95	-27.5
	초졸 이하 취업률	7.78	7.89	7.3	6.16	5.67	-27.1
	중졸 취업인구	160	151	153	152	150	-6.3
	중졸 취업률	9.5	8.96	9.08	9.17	8.95	-5.8
	고졸 취업인구	658	632	636	603	631	-4.1
	고졸 취업률	39.07	37.49	37.74	36.39	37.65	-3.6
	대졸 취업인구	735	771	773	800	800	8.8
	대졸 취업률	43.65	45.73	45.88	48.28	47.73	9.3
경기	초졸 이하 취업인구	338	303	292	286	301	-10.9

	초졸 이하 취업률	5.29	4.66	4.37	4.21	4.33	-18.1
	중졸 취업인구	452	437	442	429	431	-4.6
	중졸 취업률	7.07	6.72	6.61	6.32	6.2	-12.3
	고졸 취업인구	2,664	2,684	2,825	2,809	2,828	6.2
	고졸 취업률	41.67	41.27	42.26	41.37	40.68	-2.4
	대졸 취업인구	2,939	3,079	3,126	3,266	3,391	15.4
	대졸 취업률	45.97	47.34	46.76	48.1	48.78	6.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19(통계청)

■ 사업체 · 종사자 수 변화 및 현황

- 2018년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47,008개, 비중 23.21%), 숙박 및 음식점(36,043개, 비중 17.80%), 운수업(26,111개, 비중 12.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산업 종별 사업체 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였고 특히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인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882개, 증가 폭 26.9%) 과 부동산 임대업(8,175개, 증가 폭 21.5%) 및 출판 및 영상업(1,023개, 증가 폭 20.5%)임

[표 20]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 변화 2015-2018

(단위: 개, %)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5-18
농업, 임업 및 어업	명	27	27	33	36	33.3
	%	0.01	0.01	0.02	0.02	100.0
광업	명	36	34	35	32	-11.1
	%	0.02	0.02	0.02	0.02	0.0
제조업	명	24,742	24,738	24,826	25,235	2.0
	%	13.30	12.91	12.62	12.46	-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명	58	57	63	67	15.5
	%	0.03	0.03	0.03	0.03	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명	453	449	452	495	9.3
	%	0.24	0.23	0.23	0.24	0.0
건설업	명	5,363	5,561	5,859	6,278	17.1
	%	2.88	2.90	2.98	3.10	7.6
도매 및 소매업	명	45,055	45,898	46,705	47,008	4.3
	%	24.22	23.96	23.74	23.21	-4.2
운수업	명	23,262	24,271	24,187	26,111	12.2
	%	12.51	12.67	12.30	12.89	3.0
숙박 및 음식점업	명	33,306	34,301	35,316	36,043	8.2
	%	17.91	17.91	17.95	17.80	-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명	849	861	947	1,023	20.5
	%	0.46	0.45	0.48	0.51	10.9
금융 및 보험업	명	1,687	1,720	1,770	1,802	6.8
	%	0.91	0.90	0.90	0.89	-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명	6,726	7,274	7,729	8,175	21.5
	%	3.62	3.80	3.93	4.04	1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명	3,286	3,351	3,498	3,840	16.9
	%	1.77	1.75	1.78	1.90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명	2,753	2,788	2,919	3,029	10.0
	%	1.48	1.46	1.48	1.50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명	470	479	483	485	3.2
	%	0.25	0.25	0.25	0.24	-4.0
교육서비스업	명	7,387	7,708	8,067	8,321	12.6
	%	3.97	4.02	4.10	4.11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명	6,654	7,005	7,333	7,384	11.0
	%	3.58	3.66	3.73	3.65	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명	5,425	6,052	6,684	6,882	26.9
	%	2.92	3.16	3.40	3.40	16.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명	18,470	18,992	19,799	20,247	9.6
	%	9.93	9.91	10.07	10.00	0.7

자료: 인천복지재단(2020)을 재인용

- 2018년 인천광역시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제조업(247,361명, 비중 23.11%), 도매 및 소매업(146,626명, 비중 13.70%), 숙박 및 음식점업(111,297명, 비중 10.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1,680명, 비중 9.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 인천광역시 종사자 수 변화 2015-2018

(단위: 개, %)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5-18
농업, 임업 및 어업	명	193	264	294	201	4.1
	%	0.02	0.03	0.03	0.02	0.0
광업	명	636	639	634	549	-13.7
	%	0.06	0.06	0.06	0.05	-16.7
제조업	명	243,808	248,950	250,329	247,361	1.5
	%	24.76	24.78	24.20	23.11	-6.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명	3,702	3,557	3,799	3,726	0.6
	%	0.38	0.35	0.37	0.35	-7.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명	6,176	6,163	6,160	6,488	5.1
	%	0.63	0.61	0.60	0.61	-3.2
건설업	명	49,339	48,871	51,119	55,565	12.6

	%	5.01	4.86	4.94	5.19	3.6
도매 및 소매업	명	136,618	139,481	143,663	146,626	7.3
	%	13.88	13.88	13.89	13.70	-1.3
운수업	명	77,189	77,026	76,998	84,685	9.7
	%	7.84	7.67	7.44	7.99	0.9
숙박 및 음식점업	명	99,909	102,169	104,921	111,297	11.4
	%	10.15	10.17	10.14	10.40	2.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명	7,813	8,176	9,043	9,902	26.7
	%	0.79	0.81	0.87	0.93	17.7
금융 및 보험업	명	25,500	25,498	25,929	25,635	0.5
	%	2.90	2.54	2.51	2.39	-7.7
부동산업 및 임대업	명	19,915	20,923	21,758	23,363	17.3
	%	2.02	2.08	2.10	2.18	7.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명	28,151	28,743	27,677	30,601	8.7
	%	2.86	2.86	2.68	2.86	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명	46,369	43,398	46,653	47,082	1.5
	%	4.71	4.32	4.51	4.40	-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명	33,391	32,776	35,245	36,806	10.2
	%	3.39	3.26	3.41	3.44	1.5
교육서비스업	명	71,651	70,917	72,855	73,735	2.9
	%	7.28	7.06	7.04	6.89	-5.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명	78,240	88,357	95,218	101,680	30.0
	%	7.95	8.79	9.21	9.50	1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명	15,695	17,432	19,842	21,974	40.0
	%	1.59	1.73	1.92	2.05	2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명	40,310	41,407	42,207	43,178	7.1
	%	4.09	4.12	4.08	4.03	-1.5

자료: 인천복지재단(2020)을 재인용

■ 사업체 일자리 · 생존율 변화

- 사업체 일자리 생존율 변화 분석의 경우 지역 전반의 사업체 생멸과 그에 따른 일자리 변동은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혹은 기존 일자리 시장으로의 진출 모두를 염두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있어 중요한 고려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인천복지재단, 2020)

■ 사업체 및 일자리 생존율

- 인천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14년 사업체 개수는 183,595 개, 종사자 수는 931,822명에서, 2018년 사업체 202,493개, 종사자 수는 1,070,454명으로 증가하였음. 아울러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5.08명에서 5.29명으로 증가함

[표 22] 사업체 및 종사자 연도별 증가추이

(단위: 개, 명)

	사업체(개)	종사자(명)	사업체당 종사자(명)
2014	183,595	931,822	5.08
2015	186,011	984,652	5.29
2016	191,566	1,004,747	5.24
2017	196,705	1,034,344	5.26
2018	202,493	1,070,454	5.29

- 사업체 생존율과 일자리 생존율을 살펴보면, 인천 전체의 창업사업체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생존율은 50.56%로 3년 차에 창업사업체의 절반가량만이 생존함. 이는 기존 인천 지역 분석(인천발전연구원, 2015) 결과(36.08%)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전국 창업사업체가 4년 차에 절반 정도가 생존한다는 논의(중소기업청, 2010 ; 박재성, 201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
- 구체적으로 인천 전체지역의 창업사업체는 평균 251.18개이지만, 3년 후 생존한 사업체는 평균 129.99개임. 평균 사업체 생존율로는 50.56%임. 일자리 기준으로 보면, 창업사업체는 평균 877.0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3년

후 생존사업체로 국한하면 평균 584.72개 의 일자리가 유지되었으며 일자리 생존율은 평균 66.67%임. 이를 다시 개별 사업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업 사업체는 평균 3.49개의 일자리를 가졌지만, 생존사업체는 평균 4.6개의 일자리를 가져, 1.11개 정도의 고용증가가 있었음을 나타냄

[표 23] 2015년 창업사업체의 2018년 기준 사업체 생존율과 일자리 생존

(단위: 개, %)

	사업체			일자리		
	생존 사업체	창업 사업체	사업체 생존율	생존 사업체	창업 사업체	사업체 생존율
	개	개	%	개	개	%
전체평균	129.99	251.18	50.56	584.72	877.02	66.67
최대(동)	799	1,309	61.04	6,350	7,976	79.61
최소(동)	2	5	40.00	8	10	80.00
표준편차	102.73	197.01	52.14	813.92	1057.33	76.98
	창업 사업체 일자리평균		생존 사업체 일자리평균	일자리 확장 (창업-생존)		
	개		개	개		
전체평균	3.49		4.6	1.11		
최대(동)	6.09		7.95	1.85		
최소(동)	2		4	2		
표준편차	5.37		7.92	2.56		

- 한편 사업체 창업과 생존 및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면, 인천 지역 전체 창업사업체 생존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 한다면, 자활 사업체의 생존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움(인천복지재단, 2020)
- 결론적으로 생존사업체들은 평균적으로 1.11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평균 4.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1명이 넘는 고용증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음

[표 24] 인천광역시 사업체 창업 및 생존 2015-2018

(단위: 개, %)

	사업체			일자리			일자리 변동		
	생존 사업체	창업 사업체	사업체 생존율	생존 사업체	창업 사업체	사업 체 생존 율	창업 사업체 일자리 평균	생존 사업체 일자리 평균	일자리 확장 (창업- 생존)
	개	개	%	개	개	%	개	개	개
2015창업 2016생존	29,492	37,426	78.80	112,936	130,676	86.42	3.49	3.83	0.34
2015창업 2017생존	23,462	37,426	62.69	98,766	130,676	75.58	3.49	4.21	0.72
2015창업 2018생존	18,921	37,426	50.56	87,123	130,676	66.67	3.49	4.60	1.11
2016창업 2017생존	21,637	27,996	77.29	78,031	93,632	83.34	3.34	3.61	0.26
2016창업 2018생존	16,621	27,996	59.37	68,578	93,632	73.24	3.34	4.13	0.78
2017창업 2018생존	25,846	32,194	80.28	96,843	108,974	88.87	3.38	3.75	0.36

■ 산업별 사업체 생존율 및 일자리 생존

- 농업 및 어업, 광업, 전기수도, 가스업 등을 제외한 산업별 생존율 및 일자리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인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8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62.12%), 금융보험업(61.95%)이 그 뒤를 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기존 논의(인천발전연구원, 2015)와 유사한 형태임
 - 숙박 및 음식점업(38.9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1.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45.73%)은 생존율이 낮았음.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은 가장 많은 사업체(9,937개)가 창업했지만, 사업체의 생존율(46.45%)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
- 일자리 생존율의 경우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6.12%), 금융보험업(88.78%), 교육서비스업(83.19%), 제조업(78.34%) 순으로 높았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생존율 증가는 인구증가 및 노령인구의 확대 등의 특성을 보이는 인천광역시의 인구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고용 창출과 연동되어있는 일자리 변화에서도 금융보험업과 더불어 연도별 평균 사업체당 종사자 수인 5명에 근사한 업종 중 하나였음

[표 25] 산업별 사업체 창업 및 생존 2015-2018

(단위: 개, %)

	사업체			일자리			일자리 변동		
	생존 사업체	창업 사업체	사업체 생존율	생존 사업체 일자리	창업 사업체 일자리	사업체 일자리 생존율	창업 사업체 일자리 평균	생존 사업체 일자리 평균	일자리 확장 (창업- 생존)
	개	개	%	개	개	%	개	개	개
제조업	2,443	4,118	59.32	17,614	22,485	78.34	5.46	7.21	1.7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41	66	62.12	276	423	65.25	6.41	6.73	0.32
건설업	645	1,307	49.35	6,059	8,427	71.90	6.45	9.39	2.95
도매 및 소매업	4,616	9,937	46.45	15,502	25,412	61.00	2.56	3.36	0.8
운수업	2,992	4,828	61.97	5,306	8,275	64.12	1.71	1.77	0.06
숙박 및 음식점업	3,146	8,073	38.97	10,479	23,454	44.68	2.91	3.33	0.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4	277	41.16	814	1,267	64.25	4.57	7.14	2.57
금융 및 보험업	184	297	61.95	3,235	3,644	88.78	12.27	17.58	5.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738	1,329	55.53	2,434	4,044	60.19	3.04	3.30	0.2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65	652	55.98	1,778	2,724	65.27	4.18	4.87	0.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72	592	45.95	3,563	7,179	49.63	12.13	13.10	0.9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7	37	100.00	2,116	1,686	125.50	45.57	57.19	11.62
교육서비스업	695	1,245	55.82	3,478	4,181	83.19	3.36	5.00	1.6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559	767	72.88	8,936	8,421	106.12	10.98	15.99	5.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3	1,253	45.73	1,684	3,038	55.43	2.42	2.94	0.5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1,492	2,633	56.67	3,613	5,766	62.66	2.19	2.42	0.23

■ 군구별 사업체 생존율 및 일자리 생존율

- 지역별로 사업체 생존율과 일자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창업사업체 수가 한 해 1,000개 미만인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하고, 사업체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57.57%), 남동구(53.92%), 서구(51.17%) 순이었음
- 일자리 생존율을 살펴보면, 동구(75.71%), 연수구(73.01%), 서구(71.53%) 순이었음. 아 울러, 일자리 확장성을 살펴보면, 중구(2.08개), 연수구(1.96개), 서구(1.45개) 순이었음. 다시 말해 이상의 지역들의 경우, 사업체 및 일자리 변동에서 긍정적인 양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의 확장성이 1개 미만이거나,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였음
- 상기한 결과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인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서, 군·구간의 사업체 및 일자리 생존률의 간극이 큼을 나타냄

[표 26] 구군별 사업체 창업 및 생존 2015-2018

(단위: 개, %)

	사업체			일자리			일자리 변동		
	생존 사업체	창업 사업체	사업체 생존율	생존 사업체 일자리	창업 사업체 일자리	사업체 일자리 생존율	창업 사업체 일자리평균	생존 사업체 일자리평균	일자리 확장 (창업-생존)
	개	개	%	개	개	%	개	개	개
중구	1,271	2,525	50.34	9,318	13,262	70.26	5.25	7.33	2.08
동구	749	1,301	57.57	2,628	3,471	75.71	2.67	3.51	0.84
미추홀구	2,475	5,070	48.82	8,857	14,826	59.74	2.92	3.58	0.65
연수구	2,157	4,541	47.50	12,070	16,531	73.01	3.64	5.60	1.96
남동구	4,294	7,964	53.92	18,758	27,992	67.01	3.51	4.37	0.85
부평구	2,759	5,729	48.16	11,221	18,860	59.50	3.29	4.07	0.78
계양구	1,661	3,489	47.61	7,647	11,940	64.05	3.42	4.60	1.18
서구	2,876	5,620	51.17	14,693	20,541	71.53	3.65	5.11	1.45
강화군	498	857	58.11	1,512	2,376	63.64	2.77	3.04	0.26
옹진군	181	322	56.21	419	877	47.78	2.72	2.31	-0.41

■ 산업별 · 군구별 사업체 생존율 및 일자리 생존율

- 군 구별 격차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이라 할 수 있음. 해당 업종들의 비중은 작게는 9% 이상에서 많게는 50%까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7] 2015년 창업 사업체 기준 구군별 산업 종 비중

(단위: %)

	중구	동구	미추 홀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제조업	2.5	21.4	6.1	4.5	15.7	9.5	9.2	19.1	8.0	4.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0.2	0.6	0.0	0.1	0.2	0.1	0.1	0.3	0.1	0.0
건설업	3.9	6.3	3.5	2.5	3.3	3.3	4.1	3.3	4.1	6.5
도매 및 소매업	34.2	33.6	25.5	27.6	21.7	29.3	27.9	25.1	26.7	22.1
운수업	12.4	12.5	16.7	22.0	15.7	7.8	11.8	5.7	8.3	2.2
숙박 및 음식점업	27.6	10.8	22.3	19.1	19.6	23.0	20.5	21.4	31.5	5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	0.3	1.4	1.3	0.6	0.7	0.7	0.3	0.8	0.6
금융 및 보험업	0.5	0.1	1.0	0.5	1.0	1.3	0.5	0.4	1.8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7	2.0	3.6	4.2	3.4	3.7	2.5	3.9	4.3	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	2.0	2.4	2.1	2.0	1.5	2.1	1.0	1.2	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1.0	1.6	1.3	1.7	2.1	1.7	1.2	0.8	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3	0.2	0.1	0.1	0.1	0.1	0.1	0.1	0.4	0.0
교육서비스업	1.6	1.5	2.9	4.7	3.2	3.7	3.6	3.9	2.1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	1.7	1.6	1.8	2.3	1.7	2.4	2.7	2.6	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1.7	3.3	3.1	3.2	3.7	4.5	3.7	2.9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5.6	4.3	7.8	5.2	6.5	8.6	8.5	8.0	4.6	3.4

- 이를 다시 2018년의 생존사업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전체 산업 중에서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 10개 군구 중 최대 50%를 상회하는 상기 업종들의 강세는 생존사업체 기준으로도 유사하였음

[표 28] 2018년 생존 사업체 현황

(단위: %)

	중구	동구	미추 홀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제조업	3.1	24.4	7.8	5.4	18.2	10.8	10.6	23.3	8.9	5.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0.4	0.3	0.0	0.1	0.3	0.1	0.1	0.5	0.2	0.0
건설업	3.9	6.0	3.6	2.6	2.6	3.5	4.3	2.9	3.8	5.6
도매 및 소매업	31.6	31.5	24.0	23.7	19.4	26.8	23.2	24.6	25.6	22.8
운수업	14.6	14.8	17.1	26.5	21.5	11.5	15.2	6.5	4.4	2.8
숙박 및 음식점업	25.6	8.0	17.5	13.0	13.2	18.5	17.0	15.3	31.4	5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3	0.1	1.2	1.2	0.5	0.5	0.3	0.2	0.8	1.1
금융 및 보험업	0.7	0.1	1.4	0.7	1.1	1.5	0.5	0.5	2.4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9	1.9	4.2	4.2	3.3	3.6	2.9	4.0	5.0	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9	1.9	3.0	2.6	2.3	1.3	2.4	1.3	1.8	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1.6	1.7	1.7	1.4	2.0	1.5	1.3	1.4	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6	0.4	0.2	0.2	0.1	0.1	0.2	0.1	0.6	0.0
교육서비스업	2.2	1.3	3.5	5.7	3.3	4.1	3.7	4.1	2.2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	2.0	2.6	3.4	3.4	2.5	3.7	4.1	3.2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	1.5	3.3	3.2	2.6	3.6	4.2	3.3	3.0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6.1	4.1	8.9	5.9	6.7	9.6	10.2	8.0	5.2	2.2

- 그러나 2015년 창업사업체의 산업 중 비중과 2018년 생존사업체의 산업 중 비중을 감한 결과를 살펴보면, 4개 업종 중 모든 군구에서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뿐임

[표 29] 2015년-2018년 창업사업체의 산업종비중 증감 추이

(단위: %)

	중구	동구	미추 출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제조업	0.6	3.1	1.7	0.9	2.6	1.3	1.4	4.2	0.9	0.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0.2	-0.3	0.0	0.0	0.1	0.1	0.0	0.2	0.1	0.0
건설업	-0.1	0.3	0.1	0.1	-0.7	0.2	0.2	-0.4	-0.3	-1.0
도매 및 소매업	-2.7	-2.1	-1.5	-3.9	-2.3	-2.6	-4.7	-0.6	-1.1	0.7
운수업	2.2	2.3	0.4	4.5	5.8	3.7	3.5	0.8	-3.9	0.6
숙박 및 음식점업	-2.0	-2.8	-4.8	-6.0	-6.5	-4.5	-3.5	-6.2	-0.1	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2	-0.2	-0.2	-0.1	-0.1	-0.2	-0.4	-0.1	0.0	0.5
금융 및 보험업	0.2	0.1	0.4	0.3	0.1	0.2	0.1	0.1	0.7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	-0.1	0.5	0.1	-0.1	-0.2	0.4	0.1	0.7	-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	-0.1	0.6	0.4	0.4	0.1	0.3	0.3	0.6	-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1	0.6	0.1	0.4	-0.3	-0.1	-0.2	0.1	0.6	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3	0.3	0.1	0.1	0.0	0.1	0.1	0.1	0.3	0.0
교육서비스업	0.6	-0.2	0.7	1.0	0.1	0.4	0.1	0.2	0.1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8	0.3	1.0	1.6	1.1	0.7	1.3	1.4	0.7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6	-0.2	-0.1	0.1	-0.5	-0.1	-0.4	-0.3	0.1	-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0.5	0.2	1.1	0.7	0.2	1.0	1.7	0.1	0.7	-1.2

3) 인천 광역시 자활인프라(인구 및 산업·경제) 경향

■ 인천광역시 내 자활인프라인 인구변동 및 취업률 변동, 산업별 사업체 생존률 및 일자리 생존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드러남

- 인천광역시의 기본적인 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의 축소보다는 증가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타시도에 비해 성비격차가 상당히 적고 노령화 지수는 타시도에 비해 완만한 증가폭을 보이는 특징을 보임
- 인천광역시 주민의 실업률은 서울시 제외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다만, 여성 취업률의 경우 이전보다 상승세에 있으나 전체 취업비중 중 여성의 비중은 타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고용률은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고 실업률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율의 변화추이 및 실업율의 변화추이가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도시로 각각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특징임
- 사업체 및 일자리 생존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거나 그만큼 3년 이내 비생존율 또한 높은 상태
- 산업체별 일자리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순이며 군 구별 격차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의 경우에 군구별 차이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년간 모든 군·구에서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이 유일함

제2절 인천 자활사업 진단

1 인천시 자활사업 현황

1) 인천시 자활인프라 기본 현황

■ 인천시의 자활인프라 중 자활센터 및 협회, 자활기업 및 협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천 지역의 광역자활센터는 1개소이며 지역 자활센터는 11개소, 자활기업은 38개소, 자활사업단은 140개가 각각의 센터에 소속되어 있음
- 자활사업단이 가장 많이 형성된 구는 미추홀구이며 가장 많은 자활기업이 속한 곳은 각각 6개소로 남동구와 부평구임
 - 2019년 대비 2년간 소속 자활기업 가장 많이 증가한 구는 미추홀구(2개소)이며 부평구는 1개소가 감소함
 - 2019년 대비 2년간 자활사업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는 부평구(8개)이며, 그다음으로 서구(7개), 연수구(6개) 순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구에서 1개 이상의 사업단이 증가하였으며 수적으로 감소한 사업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소속된 자활기업은 3개소, 사업단은 0개임

[표 30] 인천시 자활사업 분야별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역
지역자활센터	11	1	1	2	1	1	2	1	1	1	-
자활기업	38	3	3	5	3	6	5	4	3	3	3
	2019 대비	-	▲1	▲2	-	-	▼1	▲1	-	-	-
자활사업단	113	11	8	32	14	10	24	15	17	9	-
	2019 대비	▲3	▲1	▲5	▲6	▼1	▲8	▲5	▲7	▲1	-

- 인천광역시에는 1개소의 지역자활센터 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1개소의 인천 자활기업협회가 있으나 독립된 협회 소는 형성되어 있지 않음

■ 기타 인프라로는 인천시청, 학술 및 복지재단, 대학기관 등이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음

- 관련 복지인프라로는 인천시청 산하 복지국 및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가 있으며, 학술 및 복지재단으로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기타 공공 및 출자출연재단으로 존재
- 대학 기관으로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인천카톨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및 가천대학교 메디컬 및 강화캠퍼스,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등이 있음

■ 전반적인 인천시의 자활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의 다양성 및 수익성을 확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인천시는 광역시로서 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져 타 광역시 또는 시도 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구체적으로 대학교 자원 및 민간 단체 자원이 여타 시에 비해서 풍부한 편이며, 광역시로서 인구 수 자체가 많고 광역 시도 중 경제적으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이점이 있겠음
- 더불어 하나의 단일한 광역시로서 상위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단일화 되어 있다는 것 역시 유리한 이점 중 하나임

2) 인천시 광역자활센터 현황 및 진단

■ 인천광역자활센터의 사업현황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바탕으로 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배분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점적으로 진행함

■ 인천광역자활센터는 2004년 6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출현,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으로 2007년 1월 선정되었고 2012년 8월 광역자활센터 법제화 이후 현재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인천광역시 자활사업지원조례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중 유일하게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상부 관할기관은 인천시청 복지정책과이며 시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천시장이 인천광역자활센터의 명예회장으로있으며 산하 센터장 이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0] 인천광역자활센터 조직도



■ 인천광역시 자활센터의 2021년(6월)기준 사업현황³¹⁾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자활센터의 전체 사업은 재원 및 주체에 따라 광역자활사업, 사회복지기금사업, 위탁연계협력사업으로 구성됨
- 광역자활센터 주요 사업인 광역자활사업의 경우 자활활성화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정책사업, 직원직무 교육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표 31]와 같음
- 사회복지기금활용사업의 경우 한마당 사업, 자활통합지원사업, 자활사업활성화지원사업, 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구분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음. 다만 다수가 주요사업과 성격이 유사하여,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보다는 재원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주로 대상자들에 대한 현물 및 현금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는 자활복지개발원과의 연계협력사업이나 외부용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표 31]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주요사업 추진 총괄표

(2021.6.30. 기준)

항목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목표대비 이행비율 (%)
총계				45.8
소계				45.5
광역 자활 성 화 사 업	자 활 활 성 화 사 업	인천형 지역특화사업	●인천형 지역특화 개발사업 -신규자활사업 설명회 -신규 사업 개발 -비법전수	33.3
		공공일자리 규모화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시장·일자리 개발 -자활사업장 개선, 사인물품 제작 지원 -공공일자리 활성화 지원	68.3
		자활근로사업단 종합 경영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종합 경영지원 -경영, 사후관리, 기획 컨설팅	20
		광역·자활기업 인정화 경영지원	●(광역)자활기업 컨설팅 - 경영, 조직운영, 사업장환경개선, 기술개발,	83.3

31) 자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1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상반기 사업보고(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상반기까지의 사업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이행횟수, 이행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이는 비교대상인 타 광역자활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업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조사연구 보고서 내 비교분석 결과(백학영 외, 2019)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음. 따라서 분석대상 자료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함을 참고

		사회적경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활기업 운영 지원 -간담회, 교육, 자원연계 	200
	자활생산물 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 생산물 유통활성화 및 판매·홍보 지원 -대외협력·연계(사회적경제, 광역간, 순회·기타), 생산물 등록·진열장 제작 등 	
	인천자활기업 활성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지역 자활기업 활성화 운영지원 -총회, 이사회, 카탈로그 제작, 기본교육, 보수교육 등 	
	사회적 경제·가치실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지원 -아카데미, 박람회 및 포럼, 자발적 역량강화교육 	20
소계			45.7
교육 사업	참여자교육	•전문자격증 취득 맞춤형 위탁교육	45
		•자활사업단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49.8
		•정보화(기초·심화·OA자격증)직무교육	-
		•심리·정서 안정 맞춤형 소양교육	70.3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경력별(신입·중견)역량강화교육	16.7
		•정보화 역량강화교육	25
•직무 역량강화교육		76.7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교육 (가계재무건전성향상, 자원관리역량)(16회, 160명) 	25	
소계			-
홍보 사업	자활사업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운영·관리 •인천자활 웹소식지 발행 •SNS 홍보(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인천지역 자활사업 및 생산물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오프라인 소식지 발행 	-
소계			-
정책 사업	민관협력사업	•자활 민·관협의기구 회의를 통한 자활사업 발전 방향모색 및 인천형 자활사업 개발	-
		인천광역시자활센터 &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상설협의체 운영	16.7
	대외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공공)기관 연계 대외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성과유도 및 안정적 자활사업 기반 구축 •신규사업 및 인프라확충을 위한 대외협력 활동 •자활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활정책사업 	-
소계			70
직원직무교육사업	직원역량 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역량강화교육 •법정의무교육 •기타공직유관단체 관련 교육 	70

[표 32] 사회복지기금활용사업 추진 총괄표

(2021.6.30. 기준)

구분	연 번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한마당	1	2021 인천자활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식, 축하공연, 어울림마당, 자활생산물 박람회 등
자활통합 지원사업	2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례관리 심화사례 컨퍼런스 •자활사례관리 실무지침 개발
	3	자격증 따GO 취업하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
	4	꿈이든 참여자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이든 사업장 참여자 특화교육 •꿈이든 사업장 참여자 문화행사 지원 •꿈이든 사업장 참여자 유니폼 제작
	5	공공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이든 사업장 관리 인력 •공공일자리 발굴사업 관리운영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사업	6	인천자활사업 조사·연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형 자활사업 연계활성화 실행방안 심화 연구
	7	자활홍보관 시그니처 상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홍보관 시그니처 상품개발 컨설팅 •자활홍보관 환경개선 지원
	8	꿈이든 브랜드 강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이든 소셜 프랜차이징 추진 사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물품제작
	9	자활홍보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자활사업 홍보활성화 •온라인 홍보 활성화
	10	지역특화 아이디어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 자활사업 아이템 •신규 자활근로 사업 개발
자활 자립기반 조성사업	11	신규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월 이후 설립되는 자활기업 육성 지원
	12	자활기업 기능보강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활기업 기계·장비구입 및 수리·설치 등 기능보강 지원
	13	광역자활기업 설립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활기업 설립 및 출범지원
	14	꿈이든 사업장 설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이든 신규사업장 설치 지원 •꿈이든 커뮤니티 센터 개소
	15	기초환경개선사업(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예방 방염설비 개선사업

[표 33] 위탁 연계협력·외부용역 주요사업 추진 총괄표

(2021.6.30. 기준)

항목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목표대비 이행비율 (%)	
총계				82.8	
위탁사업(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외 연계사업)	소계			80.9	
		가정용 소방 시설지원	•화재 취약가구 확산소화기 및 가스차단기 지원	100	
		설명절 나눔	•지역농산물 및 식료품 구매 전달	100	
		보일러 및 LED교체	•저소득 노인가구 보일러 교체 •거주시설(아동·장애인)보일러,LED교체	100	
		사랑의 집수리1차	•저소득 노인가구 주거환경개선	100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벽화 작업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벽화 보수	-	
		에너지효율 및 주거환경개선	•장애인가구 집수리 •장애인거주시설 집수리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휴게공간 등 의자/평의자 설치	100	
		천연소금지원(현물)	•천일염 지역자활센터 전달 (330포대 / 포대당 20kg)	100	
		마스크 지원(현물)	•국산 KF94마스크 사회적경제단체 전달 (9,000개)	100	
		화장품지원(현물)	•엔프라니화장품 지역자활센터 전달 (4,255개)	100	
		화장품지원(현물)	•엔프라니화장품 지역자활센터 전달 (26,000개)	100	
		사랑뽕뽕나눔(현물)	•안스베이커리 빵류 지역자활센터 전달 (4,349개)	100	
		세차장설치운영	•세차장 및 카페 시공 및 운영	-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용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	58.83	
	연계협력 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소계			102.3
			지역자활 특화개발	•미디어 플랫폼 '꿈이든 tv' 구축	-
		내일키움 일자리	•2021 내일키움 일자리사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일자리제공기관 운영 및 참여자관리	103.1	
외부용역 사업	소계			100	
		시설관리 용역	•공공시설 청소관리 자활근로사업 운영·개발지원 -공공시설 청소 운영 & 공공도서관 청소	100	

■ 타 광역지자체 사업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자활센터의 사업 비교분석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전국 유일의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로서 충분한 이점이 있으나 그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다시 말해, 시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적극적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홍보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자활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진단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9개 분야 사업 중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을 실행하고 있지 않으며, 홍보사업이나 협력사업의 경우 내용적 다양성 및 충실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자활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음
 - 현재 진행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종합경영지원 및 자활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분인 마케팅이나 홍보 등의 추가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음. 특히 실제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셋째, 교육사업의 경우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 참여자들의 수요에 따른 보다 다양한 직무 및 근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인 직무소양 교육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탈수급 이후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분야를 선정, 각각에 해당하는 교육을 세미나 형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홍보사업의 경우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광역자활센터의 주 업무 목표 중 하나를 지역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업의 홍보로 선정하고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업무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전남 및 경북, 경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타 분야보다 지역 사업단 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을 주력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더라도(2021년 6월기준) 상당히 적은 규모로 확인됨
- 다섯째, 대외협력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사기업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여타 광역센터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실제 협력 기관이 다양하거나 많지 않음. 광역자활센터의 주요 역할로 공공 및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를 상정하고, 시도지청은 물론 유관기관 민·관 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기업 및 소규모 업체들과의 탄탄한 연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진단됨
 - 현재 민관 및 대외협력사업 항목 이하 작성된 사업내용은 방법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어떠한 협력을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진단이 불가하였음
- 특히 강조할 지점은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현재의 행정·관리적 성격만을 띤 업무 구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및 참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무엇보다 민·관·학 사업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 권고됨
 -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 보면 손쉬운 지역사회 후원 및 참여 경로를 조성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자활센터 지원의 경우에도 자활센터의 경영 컨설팅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사업 아이템 발굴 등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때 필요하다면 마케팅 분야의 추가적인 용역을 통해 욕구조사 등을 동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정기적인 공모사업을 동반하는 것이 사업의 다양성 확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진단됨
- 더불어 지역 자활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아래로부터의 사업추진’이 추가적으로 제시됨

3) 인천시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진단

(1) 인천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현황

■ 인천시 지역자활센터는 11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센터마다 사업단의 분야 및 사업내용에서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남

- 사업 분야별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을 분류하면 [표 34]와 같이 나타남
- 인천광역시 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사업 중, 가장 많은 자활참여자가 활동하는 사업은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사업(474명)’이며, 가장 많은 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분야 역시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사업(22개)’이며, 사업단 수에 비해 참여자수가 많은 사업단은 ‘유통판매, 마트(4개, 112명)’, ‘청소, 시설관리(9개, 204명)’ 등임
-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사업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미추홀 지역자활센터(5개)이며, 이후 희망지역자활센터(3개) 순으로 나타남

[표 34]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분야별 현황

(단위: 개, 명)

사업 내용 분류	소속지역센터	사업단 수		참여자 수	
			계		계
간병, 가사지원, 활동지원	미추홀지역자활센터	3	5	3	15
	연수지역자활센터	1		10	
	강화지역자활센터	1		2	
공예, 핸드메이드	연수지역자활센터	2	5	20	38
	남동지역자활센터	1		7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1		1	
	계양지역자활센터	1		10	
교육, 학습지도	부평지역자활센터	1	1	14	14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제작	부평지역자활센터	1	3	25	63
	서구지역자활센터	1		27	
	강화지역자활센터	1		11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중구지역자활센터	1	22	33	474
	동구지역자활센터	2		45	
	희망지역자활센터	3		68	
	미추홀지역자활센터	5		89	
	연수지역자활센터	1		10	

	남동지역자활센터	2		32	
	부평지역자활센터	2		57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1		12	
	계양지역자활센터	1		61	
	서구지역자활센터	2		34	
	강화지역자활센터	2		33	
미디어, IT	희망지역자활센터	1	1	9	9
세차	희망지역자활센터	1	1	15	15
세탁, 빨래	중구지역자활센터	2	3	24	52
	미추홀지역자활센터	1		28	
식품제조, 조리, 급식	중구지역자활센터	2	7	29	106
	희망지역자활센터	1		13	
	미추홀지역자활센터	2		17	
	연수지역자활센터	1		35	
	계양지역자활센터	1		12	
외식, 음식점운영	동구지역자활센터	1	6	11	83
	남동지역자활센터	1		18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2		42	
	계양지역자활센터	2		12	
유통 판매(편의점, 마트)	남동지역자활센터	1	4	36	112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2		58	
	계양지역자활센터	1		18	
인력파견	서구지역자활센터	1	2	2	27
	강화지역자활센터	1		25	
자전거수리, 대여	중구지역자활센터	1	1	9	9
재활용, 재생사업	연수지역자활센터	2	4	22	50
	부평지역자활센터	1		17	
	강화지역자활센터	1		11	
정부양곡배송	강화지역자활센터	1	1	7	7
집수리, 인테리어	연수지역자활센터	1	4	10	47
	남동지역자활센터	1		13	
	부평지역자활센터	1		21	
	서구지역자활센터	1		3	
청소, 시설관리	중구지역자활센터	1	9	12	204
	동구지역자활센터	1		13	
	희망지역자활센터	2		27	
	연수지역자활센터	1		23	
	남동지역자활센터	1		15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1		47	
	서구지역자활센터	1		42	
	강화지역자활센터	1		25	
카페	동구지역자활센터	1	6	9	41
	미추홀지역자활센터	2		13	
	계양지역자활센터	2		11	
	서구지역자활센터	1		8	

택배, (카드)배송, 배달	희망지역자활센터	2	7	20	79
	미추홀지역자활센터	1		4	
	남동지역자활센터	1		14	
	계양지역자활센터	1		10	
	서구지역자활센터	2		31	
행정, 사무 인력	연수지역자활센터	1	2	10	12
	계양지역자활센터	1		2	

자료: 인천광역시자활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사업 다양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표 35]와 같이, ‘계양지역자활센터(8종류)’와 ‘연수지역자활센터(8종류)’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미추홀지역자활센터(14개)’이며, 가장 많은 사업단 참여자가 소속된 지역자활센터는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160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 지역자활센터 사업 다양성 분류

(단위: 개, 명)

소속지역센터	사업 내용 분류	사업단 수	참여자 수
강화지역자활센터	간병, 가사지원, 활동지원	1	2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제작	1	11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2	33
	인력파견	1	25
	자전거수리, 대여	1	11
	정부양곡배송	1	7
	청소, 시설관리	1	25
	7종류	8	114
계양지역자활센터	공예, 핸드메이드	1	10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1	61
	식품제조, 조리, 급식	1	12
	외식, 음식점운영	2	12
	유동 판매(편의점, 마트)	1	18
	카페	2	11
	택배, (카드)배송, 배달	1	10
	행정, 사무 인력	1	2
8종류	10	136	
남동지역자활센터	공예, 핸드메이드	1	7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2	32
	외식, 음식점운영	1	18

	유통 판매(편의점, 마트)	1	36
	집수리, 인테리어	1	13
	청소, 시설관리	1	15
	택배, (카드)배송, 배달	1	14
	7종류	8	135
동구지역자활센터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2	45
	외식, 음식점운영	1	11
	청소, 시설관리	1	13
	카페	1	9
	4종류	5	78
미추홀지역자활센터	간병, 가사지원, 활동지원	3	3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5	89
	세탁, 빨래	1	28
	식품제조, 조리, 급식	2	17
	카페	2	13
	택배, (카드)배송, 배달	1	4
	6종류	14	154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공예, 핸드메이드	1	1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1	12
	외식, 음식점운영	2	42
	유통 판매(편의점, 마트)	2	58
	청소, 시설관리	1	47
	5종류	7	160
부평지역자활센터	교육, 학습지도	1	14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제작	1	25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2	57
	자전거수리, 대여	1	17
	집수리, 인테리어	1	21
	5종류	6	134
서구지역자활센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제작	1	27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2	34
	인력파견	1	2
	집수리, 인테리어	1	3
	청소, 시설관리	1	42
	카페	1	8
	택배, (카드)배송, 배달	2	31

	7종류	9	147
연수지역자활센터	간병, 가사지원, 활동지원	1	10
	공예, 핸드메이드	2	20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1	10
	식품제조, 조리, 급식	1	35
	자전거수리, 대여	2	22
	집수리, 인테리어	1	10
	청소, 시설관리	1	23
	행정, 사무 인력	1	10
	8종류	10	140
중구지역자활센터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1	33
	세탁, 빨래	2	24
	식품제조, 조리, 급식	2	29
	자전거수리, 대여	1	9
	청소, 시설관리	1	12
	5종류	7	107
희망지역자활센터	단순 임가공, 조립, 포장	3	68
	미디어, IT	1	9
	세차	1	15
	식품제조, 조리, 급식	1	13
	청소, 시설관리	2	27
	택배, (카드)배송, 배달	2	20
	6종류	10	152

자료: 인천광역시자활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2) 인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사업 경향성 진단

■ 인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경향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지역 내 자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세차 및 청소, 집수리, 임가공, 택배 이외 공공영역 연계가 가능한 사업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수익성 확장이 가능한 사업분야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외식업 및 제조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겠음
- 더불어, 지역센터의 사업들이 각각의 센터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천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그리고 광역자활센터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인천시의 지역자활센터는 수적으로 보았을 때 활발하게 사업단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홍보성 및 다양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진함

- 특히, 여타 시도 및 광역센터에 비해 지역특화상품 자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인천시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현상일 것임. 다만, 확장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40-50대 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서의 이점을 강화한다면 사업의 홍보성 및 다양성을 확장하기에 부족함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2년간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 113개였던 것에 비해 2021년 기준 140개로 상당한 확장을 이룬 바 있음
- 다만 확장된 사업의 내용이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당면한 과제인 ‘수익성 유지’ 및 ‘참여자의 적극적 탈수급 촉진’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보임

■ 인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사업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첫째, 지속적인 매출유지가 가능한 공공연계 사업 이외에 일반 시장 및 지역 소비자를 통해 수익성 확장이 가능한 사업분야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임가공 등 단순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근로역량 및 탈수급 의지를 촉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따라서 임가공 및 부품조립 등 단순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사업을 배치하되, 관련 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업무역량의 실질적인 향상이 가

능하도록 사업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음

- 셋째, 관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 및 세탁, 택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관련 자재 구입이나 홍보의 측면에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홈페이지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생성하는 것을 추천함
- 넷째, 홍보 및 마케팅 측면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다시 말해, 관을 통한 홍보 및 자체 홍보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경로를 통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이때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협회의 홍보업무의 주력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지역자활센터 협회의 추진 및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참여자를 포함한 자활센터 내 인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인천시 내 대학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봉사센터 등이 있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제3절 인천시 자활 현황 SWOT 분석

- 인천시의 인구 변동 및 산업·경제 분석을 포함한 인천시 기본인프라 현황과 자활유관기관 현황 및 인천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인천시 자활 현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함
 - SWOT기법은 강점(S, Strength), 약점(W, Weakness), 기회(O, Opportunity), 위협(T, Threat)의 4가지 요소를 통해 특정 정책 및 사안에 대해 분석하는 기법임
 - SWOT 분석 기법에서 각각의 요소는 4가지 전략으로 도출 될 수 있으며 도출된 4가지의 전략은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전략을 도출하기에 유리한 방법임
 - SO 전략 :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
 - ST 전략 :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
 - WO 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
 - WT 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
- SWOT 분석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6] 인천 자활 현황 SWOT 분석

Strength(강점)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 및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많음 ● 서울 및 경기도에 인접한 환경으로 타 시도 및 특별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 가능함 ● 인구 증감의 측면에서 지역의 감소세보다는 지속적 확장세가 두드러짐 ●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폭이 크지 않음 ● 타 광역시에 비해 노령화 지수가 낮고 고령화의 완만한 진행 ●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본적 소득수준이 낮지 않음 ● 타 광역시에 비해 전연령 취업률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청년실업률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타 시 및 광역시에 비해 풍부한 민·관·학 자원이 있음 ● 시의 꾸준한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

Weakness(약점) 요소

- 여타 광역시(부산 및 서울)에 비해 부족한 교통인프라
- 인천시 주민의 민간소비액은 여타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편
- 관광자원 및 지역특색이 두드러지는 전통특산물이 부족함
- 취업인구 중 낮은 여성비율
- 전체 연령의 실업률이 전국 두 번째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실업률이 타 광역시에 비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30대의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증가함

Opportunity(기회) 요소

-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로서 위탁계약의 중단가능성이 적어 장기적 사업추진이 가능함
- 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군구 격차와 무관하게 제조업분야에서 일자리 및 사업체 비중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
- 인천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해 옴
- 지역자활사업의 공공연계 사업이 많아 지속적인 매출유지가 가능

Threat(위협) 요소

- 도농복합도시로서 사업체 창업률 및 생존률의 지역별 간극이 큰 편임
- 창업사업체의 3년이내 생존율 자체가 절반가량인 점
- 창업사업체의 중간 탈락비율이 높고 3년이내 고용창출 비율 1명으로 상당히 낮다는 점
- 완만하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고령화
- 자활사업의 전체적인 경향성이 공공자원에만 연계하고 있는 측면

■ SWOT분석을 통한 4가지 전략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SO전략(강점강화 기회포착)전략

- 전 연령 의 높은 취업률 증가세에 편승, 자활참여자의 적극적 취업연계를 추진
- 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활용, 보다 많은 자원 연계 및 지원 추진
- 시의 튼튼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충분한 관내 홍보 추진
- 인천시 시민의 높은 구매력을 활용하기 위해, 매력적인 아이템을 발굴함

② ST전략(강점강화 위협회피)전략

- 풍부한 민·관·학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아이템을 활발히 공모, 공공자원 연계 외 민간의 소비 창출이 가능한 사업분야를 발굴함
- 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활기업 창업 후 탈락 방지 및 사업체 유지를 위해 적극적 홍보 및 지원을 추진함
- 기술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자활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여 청년 참여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함

③ WO전략(약점보완 기회포착)전략

- 타시도에 비해 지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인천시민의 소비 촉진을 시도하기 위해 자활상품의 지역화폐 구매를 가능하게 함
-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 인천시 특색 상품 및 굿즈 등을 개발하여 자활상품으로 활용
-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충분한 발굴을 통해 여성 취업률을 고취함
- 부족한 교통자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 및 예약 플랫폼을 통해 자활상품의 접근성을 증진함

④ WT전략(약점보완 위협회피)전략

- 자활기업 확장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관광산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
- 지역주민의 다양한 후원경로를 탐색, 후원상품을 개발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함

제4장 인천 자활사업 발전 방향 논의

제1절 자활근로 참여자 FGD

제2절 자활기업 대표 FGD

제3절 자활사업 실무자 FGD

제4절 소결: 인천 자활사업 발전방향 논의

1 | 조사개요

■ 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자활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다면적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개선사항 및 참여자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FGD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자활근로 참여자의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주요 개선 요구사항 및 향후 지향점을 조사함

■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 근로 중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자활일자리 개선사항 및 참여자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음
 - 일시: 2021.01.07. 13:30
 - 장소: 인천광역시자활센터
- 다음의 지점을 고려하여 표적 집단을 표집함
 - 첫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1그룹 당 8인 이하의 소수 인원 모집
 - 둘째, 참여자의 소속 센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연령과 가족구성에 따라 분배 모집
-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에 대해서는 [표 37]과 같음

[표 37] 자활근로 참여자 FGD그룹 현황

NO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참여사업 유형 및 내용	총 참여 기간
1	남	30대	3인 가구	수리, 조립업	1년 3개월
2	여	30대	1인 가구	다회용기 세척	2년
3	남	60대	1인 가구	카페/유통 업종	2년
4	남	50대	1인 가구	청소 및 방역	3년 2개월

■ 진행순서 및 인터뷰 내용

- 총 9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토의함
 - 자기소개(10분)
 - 자활근로 참여 경험(30분)
 - 자활사업 개선점(30분)

2 | 조사결과

■ 자활참여자들은 주로 ‘재충전의 시간’, ‘계도기간’, 혹은 ‘역량 강화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자활사업을 정의하고 있었음

-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자활사업에 기대하는 점과 욕구,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임
-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역량 강화, 혹은 근로능력 유지를 위해 주어진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참여자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로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 일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따로 이제 구하기 전까지 능력을 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좀 해 주는 그런 제도 같아요.

참여자 2: 저도 앞에서 000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자활은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면 저는 재충전하는 시간. 일반적인 사회에서 하는 일보다는 사실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덜 힘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내가 뭘 딸 수 있을까? 5년이 지나면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각자가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배분해서서 이제 배운다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재충전을 하는 그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말도 맞지 않을까 싶네요.

■ 참여자들은 자활근로 자체가 보장하는 근로여건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몇가지 제도의 미비한 점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 참여자 4에 의하면, 자활근로 참여시 일반 사기업에 비해 근로여건 부분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함. 다만, 참여자 4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은 실제로 자활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음
- 즉, 자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혹은 ‘주어진 시간’으로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을 개념화하고 있으나 실제참여 경험은 개념과는 다르며, 오히려 ‘최저의 돈’을

받아가기 위해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임. 이에 참여자 3의 경우 이를 ‘진정한 자활’이 되기에는 ‘부족함’이라는 말로 자활사업을 정의하였음

참여자 4 : 저희 같은 경우는 월차나 이런 거 있을 때 쓰는 거는 자유롭구요. 아프거나 그럴 때 병가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에 그 시간 병가랑 조퇴 포함해서 23시간인가 그 이상인가 그 이상 되면은 주차나 월차가 지급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들 쓰세요.

참여자 3: 자활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어떤 재충전을 하든가 해서 창업도 내보내주고 게이트 하우스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땐 그렇게 배우는데 실제 우리가 배치돼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일하고 그냥 그 최저의 돈만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 그냥 5년 있다가 그냥 가면은 이 사람이 자활이 되나? 진정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첫째, 새로운 사업단의 증설보다는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의 FGD에서 가장 강한 공감을 얻었던 부분은 자활사업단이 매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되는 경우에 대한 것임. 참여자 1의 경우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미싱 기술을 배우던 중 3개월만에 사업단이 폐지되었고 그 다음 사업단의 경우에도 3년 정도의 사업 유지 후 매출문제로 인해 폐지되는 경험을 함. 이러한 경우 참여자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보다는 ‘매출’문제를 더욱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자활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임
-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보기에 매출로 인해 자활사업단이 없어지는 경우는 자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임. 따라서 이는 자활참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시말해, 사업단의 새로운 증설보다 지속적인 유지가 자활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참여자 1: 저희 제가 있던 사업장도 두 번 없어졌어요. 최초에 19년도에 000라고 해가지고 미신을 하는 곳이었었는데 수입이 없다고 센터장님이 하신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해 12월에 없었어요. 배치를 10월 달에 했는데 10, 11, 12 3개월 딱 하고 그만 두겠데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장으로 갔죠. 000이라는 사업장인데 딱 3년을 하고서는 12월에 또 없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도 매출이 안 컸어요. 12~13명이 하면서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물론 장소는 나라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라서 임대료는 안 나간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익 갖고는 희망이 없다. 해서 아마 접으시고 막 있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봐도 그래요.

참여자 3: 내가 뭐 바리스타에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저는 바리스타 카페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업단을 없애버리면 내가 이제 한 1년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1급을 따서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가 매점이라는 데로 가서 이 바리스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5년 뒤에 과연 창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글썄 이걸 정말 전문성을 키워서 자활로 나갈 수 있게끔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그냥 일시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참여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자활 센터가 생긴 건지 거기 어떤 종사자들 분들 봉급받기 위해서 우리 참여자들이 거기에 끼어맞혀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다라는거죠. 내가 이게 지금 자전거 하시다가 만약에 사업단 없애고 다른 데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뭘 하냐고 그게 정말 자활 센터가 맞는 건지

■ 둘째, 자활근로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탈수급’ 이후에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역량 향상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예를 들어 ‘쇼핑봉투를 접는’ 일 등의 단순 노동은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하기 위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더불어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경우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을 하기 보다는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나, 사업단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 자활사업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 참여자 4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자활사업의 사업 내용이 현재의 수급이나 근로 유지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일지는 모르나 자활근로를 통해 역량 향상을 하여 탈수급을 하기에는 실제로 역부족이라는 점을 언급함

- 참여자들의 탈수급측면에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은 요컨대, 자활 사업단이 추구할 사업 분야는 참여자들의 ‘쉬운 참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다소 힘든 노동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역량 향상’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인식은 다만, 참여자들의 성향이나 실제 근무 역량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 간담회 참여자의 의견을 일반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조사 및 정기적 간담회를 포함할 수 있음

참여자 1: 자활이라는 게 저희 보고서는 뭔가를 배워서 나가서 일을 해라 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했다는 쇼핑 봉투를 접는 거 이걸로 무슨 창업을 해요.

참여자 3 : 솔직히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간만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역량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참여자 4 : 지금 상태는 딱자활은 그러니까 내 근로 능력이나, 수급을 또 계속 받으니까, 어쨌든 일단 뭐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되는데 내가 밖에서 지금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일단은 그 상황이 그렇게 못 가니까

■ 셋째, 청년들이 참여할 만한 사업분야가 증대되어야 하며, 청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단순 임가공, 단순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청년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향상하고 근로 역량을 향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음
- 참여자 3은 특히 청년 참여자들을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발전과 다름 없다고 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쉬운 일자리는 오히려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수급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을 함. 또한 이는 곧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수급의존성을 향상시키는 ‘나쁜 복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역량향상을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임

- 참여자 2는 현재 청년으로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의 참여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하였음. 특히나 청소, 물류 포장 등의 사업의 경우 사업단의 매출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청년 자신의 이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결국 자활사업에서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역량을 향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나치게 쉽고 단순한 사업을 자활사업단에서 아이টে็ม으로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활사업 중 실제로 청년들이 참여하여 기술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집약적, 기능 향상적인 사업 분야를 최대한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음

참여자 2: 솔직히 청년들이 하기에는 자활이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청년들을 위주로 할 수 있는 자활은 솔직히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업장이든 조금 청년들이 뛰기는 어렵다라는 걸 느꼈구요.

참여자 3: 제가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저희 60 넘는 사람들이야 자활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만 젊은 후배들은 자활을 제대로 시켜줘야 정말 국가적으로도 발전이 아니냐 이 얘기죠. 좀 더 진정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게끔 어떤 그냥 형식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타성에 젖는 거예요. 나가 봤자 힘드니까 5년 있다가 1년 쉬고 다시 들어와서 또 자활 생활을 하고 이런 좀 나태함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나쁜 복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여자 2: 보면 거의 몸으로 때우는 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사업단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랑 스토어밖에 없어요. 편의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집 청소, 분양 청소, 방역, 물류 포장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나가서는 이력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시간 때우기예요.

■ 넷째, 자활참여자들의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별도의 학습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을 역량강화의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실제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외 별도의 학습시간을 인정해주기를 원하였음

- 참여자 2에 의하면, 근로 이후에 학원을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과 역량 향상 모두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참여자 3과 참여자 4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간의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진정한 자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단순 노동식의 자활근로를 참여하게 하는 것보다 국가적 이익임을 주장하였음. 이는 만약 자활사업에서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자활사업의 목적이 참여자의 역량 강화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학습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탈수급, 즉 참여자의 자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임
- 진행자가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하면 역량 향상에 집중하면서 학원에 다닐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참여자 2는 그럴 경우 수급비 이외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자활사업을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고 하였음
- 결국 청년 자활참여자들은 단순히 역량강화만을 원하거나 수급유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일을 통해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역량강화까지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별도로 역량 강화가 가능한 학습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음
- 다만, 참여자 2의 담화를 통해 살펴보면, 지역센터의 지침에 따라 학습기회 제공 여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본 FGD 참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어떤 센터의 경우 학습내용과 현재의 근로분야가 일치하여야 하는 반면, 어떤 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분야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학습시간을 증빙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등의 상당한 지침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학습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근로분야와 학습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부 조항이 있을 경우 실제로 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창업 혹은 취업분야가 현재 개설된 사업분야에는 없어 실질적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더불어 이러한 경우는 참여자 개인의 탓이 아닌 자활환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인천광역시 내 학습시간에 대한 지침을 일치하여 동일하게 적용함이 권고됨

참여자 2: 일 끝나고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같은 것도 사업장과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물류라고 그러면 제가 회계를 공부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돼요 물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관련된 일을 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솔직히 일 끝나고 개인적으로 학원 다니고 이러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3: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젊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배우고 싶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 다니는 것도 자활 시간으로 쳐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학원 간다고 그러고 알바를 뒀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진정한 사람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마냥 그런 일이나 시키면서 시간을 보내게 한다 그거는 국가적인 손해죠.

참여자 4 : 지금 옳으신 말씀이 지금 학원 같은 것도 만약에 다니면 자활의 시간으로 사실은 쳐줘도 되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회계 공부를 해서 내가 다시 자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꼭 주 40시간. 주 5일에 40시간을 거기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근데 정당하게 정말 학원에 등록이 돼 있고요 증빙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학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자활 시간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 다섯째, 탈수급 후 실제 창업 혹은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근로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적 분야의 사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자활참여자들은 단순히 ‘수급을 유지’하거나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 모두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를 통한 역량강화를 원하고 있다 할 수 있겠음. 이러한 경우 자활사업은 청년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근로를 통해 기능강화가 가능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자활사업의 분야 중 기술집약적 분야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센터의 자활환경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학습기회를 현재의 근로내용과 관계없이 제공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여 근로를 통해 역량강화가 가능한 사업분야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 예로 참여자 2는 회계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거나, 사업단들에 사무직이 필요할 경우 청년참여자들을 훈련, 고용함으로써 선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음. 참여자 4는 사회서비스형보다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진입형 사업분야를 발굴, 청년을 중심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음

참여자 2 : 솔직히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간만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역량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차라리 기업이란 연계를 해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익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의 역량을 키운다는 게 더 낫거든요 솔직히. 그런 종이접기 이런거 하는 것보다는 이 전문성을 띄우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쪽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취업까지 알선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됐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이게 자활 시스템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대로 때우기에서 바뀌어야 하죠.

참여자 1: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자활이라는 게 저희 보고서는 뭔가를 배워서 나가서 일을 해라 이 목적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했다는 쇼핑 봉투를 접는 거 이걸로 무슨 창업을 해요. 콘센트 만드는 거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젊은 청년 사업단에 계신 분이 말씀한 대로 일단 중소기업과 연계를 해준다는 거 차라리 그런 부분이 내가 자활이 끝나고 그 직장이 됐던 그와 비슷한 직장이 됐든 취업하기도 더 나을 거고 왜 기술을 익혔으니까 그런 쪽으로 차라리 가져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참여자 4 : 실질적으로 청년이든 누구든 시장 진입형을 들어가야 어찌됐건 간에 경력이 남고 뭐가 이제 좀 남을 건데 다 전부 다 지금 새로 생기는 사업자들은 다 사회 서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형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내용들이 뭐 종이기방 접기 그런 것처럼 뭐 크게 남는 게 없는 것들이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하고 이제 시간 때우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내가 경력에 남고 싶다 뭘 더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족하지 못하겠죠.

- 반면 참여자 1은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정신건강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참여자 등, 근로를 하기에는 다소 취약한 상황의 참여자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일지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활근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함. ‘수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근로의 기회’자체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임

참여자 1 : 근데 반면에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 상당히 건강해 보여요 어 왜 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데 (중략) 근로역량이 실질적으로 조금 안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활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수익이 안되어도 뭔가를 나와서 일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하는 그 자체가 제공될 필요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사람들 것도 필요하고 또 의지 있는 사람들 할만한 사람들 일도 좀 필요하고.

- 종합하면,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사업은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자활’이 가능하도록 매출보다는 참여자의 역량강화에 높은 목적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모든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거나, 종사자 및 자활기업대표 등의 의견과 대조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됨
 - 첫째, 창업이 가능하도록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즉, 다수의 이해와는 달리 적극적인 창업을 원하는 자활근로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마다 부분적으로 상이한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천시 내의 자활지원센터의 창업지원 관련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참여자의 욕구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음. 더불어 접근성이 좋은 방법으로 홍보하여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참여자들은 자활센터 외부, 즉 일반 사기업에 인력을 연계해 줄 것을 원하였으나, 실무자 그룹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자활사업 법률상 지양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자활기업에는 연계 가능하나 자활기업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참여자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더불어 이러한 점은 자활기업 취업 경로 등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보다 활발히 홍보 및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 | 조사개요

■ 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자활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다면적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개선사항 및 참여자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FGD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자활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이하 대표로 통칭)의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주요 개선 요구사항 및 향후 지향점을 조사함

■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자활기업의 대표로 재직 중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다면적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개선사항 및 참여자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음
 - 일시: 2021.12.16. 13:30
 - 장소: 인천광역자활센터
- 다음의 지점을 고려하여 표적 집단을 표집함
 - 첫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1그룹 당 8인 이하의 소수 인원 모집
 - 둘째, 자활기업 대표는 기업의 운영기간과 특성에 따라 균형 있게 모집
-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에 대해서는 [표 38]과 같음

[표 38] 자활기업 대표 FGD그룹 현황

NO	구분	성별	연령	업종 및 업무 내용	자활기업 운영기간
1	대표 1	여	60대	가정간병, 병원간병	6년 7개월
2	대표 2	여	50대	건물관리, 청소대행, 소독방역	10년 6개월
3	대표 3	여	50대	집수리, 인테리어	13년
4	대표 4	남	30대	건설업, 건축시공, 인테리어	8년 5개월
5	대표 5	여	60대	집수리, 주거복지	당사 1년

■ 진행순서 및 인터뷰 내용

- 총 9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논의함
 - 자기소개(10분)
 - 자활기업 현황 및 운영상의 어려움(30분)
 -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정책 개선점(30분)
 - 인천광역시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사업 제안(20분)

2 | 조사결과

- 자활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이하 대표)들은 자활기업 제도의 전반적인 영역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자활기업 대표들은 자활기업을 ‘좋은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업 대표들이 자활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자활기업의 이상과 목적, 가치에 대해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자활기업 대표들은 자활기업을 영리를 창출해내는 ‘기업’의 특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양산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자활기업 대표들은 자활기업을 운영·종사하며 느끼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활기업을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정의는 자활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활기업 특성 1: 기업보다는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성격
 - 우선 대표1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하는 동시에,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영리적 목적 보다는 일자리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목적이 강조되는 자활기업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자활기업의 자립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면에서도 안정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고 함. 즉, 이러한 점은 자활기업의 정체성이 ‘기업’이라는 특성보다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함

대표 1: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게 문제이다.’ 자활기업의 운영면에서도, 수급자들의 근로 유지 면에서도 안정적이지 않은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 이렇게 자활기업의 정체성이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활기업의 임금제도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로 인한 어려움 역시 대표들은 언급하였음. 즉,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 즉 업무 역량에 따른 각자의 기준을 임금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자활기업에서는 수급자의 가족구성원 숫자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최저임금을 소위 ‘조절’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 충돌을 발생시키는 지점이라는 것임. 이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배분하는 복지제도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대표 3: 이만큼 급여를 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기준 뒤에 가족 기준이 붙어요. 이 사람은 2인 가족이라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 대신 짧게 근무를 해야한다. 이 사람은 3인 가족이라 최저임금 이상을 주셔야 한다.

대표 2: 제가 올해 수급자 한분을 채용을 했어요. 1인가족이라 최저임금을 줬더니 수급자가 탈락이 되어버리셨어요. 이 수급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활기업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가 훨씬 늘어나고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제 인건비도 못 가져가요.

■ 자활기업 특성 2: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전 자립상태

- 대표 2의 경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말로 정의내렸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자활기업이 스스로 양산하는 매출을 통해 자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함. 그리고 그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자활기업 인증제로 대표되는 제도적 요건을 언급하였음. 즉, 우선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사실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근무역량을 갖고 자활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근로 역량 및 의지가 다소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를 고용한 기업은 일반 시장의 타 기업에 비해 품질경쟁력에서 저하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자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추구할 수 밖에 없게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자활기업이 준수해야하는 제도적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리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언급함. 따라서, 이러한 자활기업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추가적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자활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임

대표 2: 저는 ‘자활기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기업이다.’ 지금 자활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1명치 일을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자활기업이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매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거죠. 저희처럼 이런 경우가 자활기업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역센터나 지역자활센터 등을 포함한 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 한편 대표 4의 경우 자활기업은 ‘극과 극이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그 의미는 지원을 받는다는 점은 초반 시작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지원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자활기업의 자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임. 대표 4의 자활기업에 대한 정의 역시 자활기업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대표 4: 자활 기업은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지원 제도가 끝남과 동시에 많이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활기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극과 극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선 초반에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을 적에는 참 괜찮아요. 일단은 금전하고 어렵지 않으니깐 그런데 지원이 끝나면 일단 첫 번째가 금전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 게 지원이 끝나고 나면 힘들어하는 자활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대표 5의 경우, ‘땅위에 떠서 지어진 느낌’이라는 말로 자활기업을 정의하였는데 그 의미는 자활기업의 목적과 취지, 역할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모순점으로 인해 완전히 자립을 하지 못하는 점을 말하는 것임. 즉, 여러 가지 앞서 언급된 탈수급의 어려움이나 자활기업의 제도적 모순점들, 또한 지원에 의존적인 자활기업의 특성들로 인해 탄탄한 자립의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에 해당함

대표 4: 자활 기업은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지원 제도가 끝남과 동시에 많이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활기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극과 극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선 초반에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을 적에는 참 괜찮아요. 일단은 금전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원이 끝나면 일단 첫 번째가 금전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 게 지원이 끝나고 나면 힘들어하는 자활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자활사업의 특성 3: ‘탈수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급탈락 가능성’

- 대표 3의 경우, 자활기업에서 회계와 인사를 맡고 있는데,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이 수급탈락을 우려하여 종래의 목적인 근로역량의 향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기업’이라고 정의하였음. 동시에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일부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역량 강화보다는 자활기업의 제도적 측면을 역이용하여 근무태만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즉, 자활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라는 패널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근로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활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해고가 자활기업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에 빠지기 쉬운 구조가 된다는 것임

대표 3: 저는 ‘기업은 기업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목적대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능력자들을 모집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은 능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여기는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수급자를 기본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이제 역량 키우기보다는 그 채용 규정을 빌미로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곳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을 키우지 않고 본인들이 요구 사항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요구했을 때는 가차없이 그냥,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단 뭐 이런 일할 곳이 많다보니까 떠날 수 있는, 또 해고가 되더라도 수급자로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 동시에 대표 3은 수급탈락으로 인한 모순점 역시 언급함. 즉,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역량강화에 힘을 쓰게 되는데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경우 역량강화보다는 수급탈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임.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들 중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에 근무하는 경우 수급탈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활사업단 근무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

러한 이유로 인해 조건부수급자를 반드시 모집해야만 하는 인증요건을 충족시키기조차 어려운 인력난에 처한다는 것임

대표 3: 센터에서 근무하시면 수급자가 탈락이 안 되지만 저희 같이 사회형 자활 기업에서 근무하는 거 탈락이 된다고 해서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그만 두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의 사장과 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판단으로 부담이 되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은. 기업이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없으면 저희 기업이 인증이 폐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 FGD에 참여한 대표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러한 수급탈락으로 인한 제도적 모순점을 자활기업의 성장을 막고 자활참여자들의 탈수급을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음. 특히 조건부수급자들의 급여상승으로 인한 수급탈락이 발생하게 되면 생계비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분야까지 모든 개별급여에서 자격 탈락이 일어나는 점이 조건부수급자들이 수급탈락에 대해 더욱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음

대표 2: 이게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가 탈락이되면 모든 것을 정지를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입장인 그 사람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할 거 같아요. 붙들고 앉고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수급 때문에 자활을 좀 뭐랄까 안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수급 때문에 진짜 자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 또 한편으로는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자들이 5년의 기간을 근로역량을 쌓아 자립하는 기회로 여기기보다는 5년의 기간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고자 노력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 역시 수급으로 인한 자활제도의 모순점으로 언급됨. FGD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수급탈락을 우려하여 자립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에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대표 2: 어떤 분은 평생 직장인 거예요. 일하다가 수급 탈락전에 1년 쉬다가 오든, 내일 키움 통장으로 갔다가 다시 오든 어쨌든 이 수급을 안 놓치려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수급을 보장하는. 역으로 그렇게 자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물론 디테일하게 막 층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잘 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모르겠지만 다른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연장을 한다거나 그런.

■ 자활기업 특성 4: 자활사업단에 비해 센 업무강도

-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의 사업을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기업보다는 자활사업단의 사업을 보다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이는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임가공 등 단순 작업위주로, 집수리 등 일반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자활기업에 비해 업무강도가 평이한 점으로 인해 자활사업단의 사업을 선호한다는 것임³²⁾

대표 2: 아니 일단, 기업 쪽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사업단에서, 센터 지금 자활 센터에 그걸 수급 사업단이라는 거는 네네 자활센터 자체에 있는 사업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하고 자활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약에 한 달 치 봉급이 똑같다고 쳐도 급여는 똑같은데 자활기업으로 나오는 거는 자기가 몸소 일을 해야 하는 거 거든요. 일을 힘들게 일을 안 하고도 여기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 뭐하러 나가. 이려고 안 나오죠.

■ 자활기업 특성 5: 정책의 변화로 인한 모순점 존재

- 대표들은 한편, 자활사업 정책 자체가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온 데다가, 이러한 변화가 자활기업이 안정성을 추구하게 만들기보다는 자활기업의 위치를 자활사업 내에서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그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가 개별화 된 지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실업부조제도의 성격을 띤 두가지 제도가 분리가 되고난 이후 자활

32) 다만 이 점은 본 연구 자활 사업단 참여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오히려 그러한 제도의 편차는 모르고 있었으며, 자활기업에 취업하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에는 탈수급 및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언급함³³⁾

- 동시에 대표들은 자활센터의 업무가 참여자들의 탈수급을 주요목표로 두기보다는 자활센터의 실적을 유지하고 참여자들을 이탈하지 않게 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음. 즉, 이와 같이 변화한 제도로 인해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목표가 상이하게 된 점이 제도의 간극 사이에서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대표 4: 그래도 예전에는 자활 기업으로 조금 이제 선호가 있었어요. 자기가 능력이 되거나 조금 기업 쪽으로 취향이 좀 맞는 사람들은 기업으로 취업하려고도 했긴 했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 그런 제도가 생겨 동시에 그 이후로는 기업으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 2: 그래서 예전에 우리 000 대표님이 예전에 사업단에 계실 때는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왜? 그러고서는 안 배워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광역자활하고 교육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때는 바글바글 했어요. 도배기술 배우려고. 그렇게 오신 분들은 지금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일만 배우고 자립을 했어요. 그때는 자립 제도의 취지가 맞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뭔가가 바뀐게 예전에는 자활 기업의 그 주요 목표치 중 하나가 자활 기업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례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거에 치우쳐 가지고 자활 하나가 나가고 이런 것은 둘째문제야. 일단 센터 내에 인원이 많아야 되고, 요건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평가를 맞춰야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대표 4: 그러니까, 진짜 수급자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제도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이 되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수급탈락으로부터 피해서 그냥 보호받는 그런 센터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자활 기업에 가서 일을 8시간씩 하면서 일 안 해도 심지어는 작년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들에 한 번 출근을 해도 한 달치 월급을 주는데 내가 왜 자활기업을 가요? 안가죠. 저 같아도 안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 대표들은 더불어 자활센터에서 ‘좋은 인력’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었음. 즉, 기본적으로 자활기업이 수급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자활센터에서 연계해주는 인력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자활센터 역시 실적 및 매출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은 자활사업단으로 먼저 채

33) 이러한 점은 여타 연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음(지규옥, 김홍주, 2018; 임수경, 2021)

용한다는 것임. 특히 게이트웨이를 거쳐 수급자를 ‘보내주는’ 제도적인 부분을 모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대표 1: 저희 이제 일반 자활 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면, 센터마다 각자 각각의 사업단들이 있잖아요. 센터 팀장님들은 소위 좋은 수급자이 오면 자기 사업단을 중요한 일꾼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은 보내주지 않으세요. 각자 자기 사업단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은 팀장님이 자활센터 사업단에 활용해야 하니까 기업에까지 보내주지 않죠. 채용하는 구조가 사실은 센터에 조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 3: 게이트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수급자분들은 그 게이트웨이 담당자들로부터 얼마만큼 받아야 하고 이런 근로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셨다고 해도 센터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요.

- 정책의 변화가 양산한 모순점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자활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경쟁적인 구도가 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활기금의 활용 측면에서도 나타나게 됨. 대표들은 자활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자활센터와 경쟁을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자활기업보다는 자활센터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우선 배분된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하기도 하였음

대표 4: 지금 법이 자활기업으로 약간 치중하는 것보다는 자활센터 쪽으로 치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활 기업이 우선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냐면 이 자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활사업단 하다가 기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자활기금도 기업이 우선적으로 조금 써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쪽으로는 좀 센터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 1: 저희는 지침에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받았어요. 예산이 있건 없건, 연초에 짤 때 우선 배분을 한다던지, 만약에 올해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 나중이라도 넘겨서라도 지원을 해주던지 하는 것들이 있어야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한쪽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거든요. (중략) 저희는 사실 자활센터랑 관계가 어느정도 원활히 되고 있는 편이고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구조 자체가 어찌면 센터와 굉장히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구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수급자를 연계하는 문제라던가, 실적이나 사업 분야가 겹친다고 할 때 그런 매출과 관련한 부분, 또 기금과 관련한 부분 등 여러 가지로 센터와 영역이 겹쳐요.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크거든요.

■ 결국 자활기업은 앞서 언급한 자활기업의 특성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어려워 지원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둘째,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들로 인해 모순점이 존재하며 이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자활센터와의 유기적 관계가 아닌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 반면에 상기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강점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로는, 일반 시장의 기업과 비교하여 신뢰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임. 즉, 일반 기업들은 서비스 정신보다는 영리를 우선적 목적으로 하지만 자활기업의 경우 사회적 경제의 한 측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임. 더불어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법규를 보다 정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고객들의 신뢰도나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점 역시 언급됨
- 다만 이러한 점은 양면적인 특성도 있었는데, 여타 사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인한 불이익 역시 경험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신뢰고 장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라는 것임

대표 4: 우선 다른 일반 시장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일단 우리 주거복지를 예로해서 하자면 지속적인 AS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안해주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속적인 AS를 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점이죠.

대표 2: 일단 우리는 사기라고는 칠 수가 없고, 오늘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고 전화라도 오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간단한 거는 내일이라도 하는거예요. 일반 업자들은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고 그러기가 부지기수죠. 그래서 자활 기업이 그런 거는 as는 확실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경보수만 했었는데 지금 중보수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 대상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활기업이 만족도가 높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이 만족도는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잘하느냐는 둘째치고 신뢰는 쌓여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을 느껴요.

대표 4: 집수리를 예로 들면 일반 시장들은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일반적인 상태, 수리하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로 하는데 저희들 대상자는 다 주거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일을 해줘요. 일반 업체는 누구도 안 해줘요. 왜냐면 그런 상태라고해서 내가 인건비를 많이 쳐주는가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 살고있는 상태에서 어떨때는 청소도 해줘야하고 설거지도 해가면서 할때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해주냐는 거죠. 어쨌든 일반 시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부분을 자활기업에서는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이 자활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면서도 고객인 LH나 대상자 입장에서는 신뢰고 장점이 되는거죠.

-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언급됨. 이러한 점은 공공영역 사업들이 갖는 강점이면서 한편으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 기업이 있는 점으로 인해 어려운 점으로도 존재함. 다만 대표들은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을 근로자가 느끼게 되면 이에 대한 보람 역시 느끼고 있었음

대표 1: 상여금 제도나 성과금 제도 등 일반 청소기업들이 해주지를 못하는 여러 근로자 우대요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기업도 있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세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기업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보람인 것 같아요.

대표 3: 저희 회사역시 복리후생이 좋아서요. 계속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더 직원들이 이거 또 오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해 주시는 게 자활기업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 세 번째, 한편으로는 수급자인 대상자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점 역시 다른 기업이 갖지 못하는 강점 중 하나라고 하였음. 앞선 두가지의 측면은 여타 기업과는 달리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자체가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 있으며 제도의 발전 과정의 선두에 협동조합 등 빈민 운동이 기반이 되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대표 2: 직원들이 연말되면 자기 급여를 받아가고 나 얼마받아 하면서 자기 연봉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할 때가 그렇고, 그리고 어느순간 보면은 저분이 사회복 지사인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변화할 때를 볼 때가 있어요. 고객이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죠.

대표 5: 저희는 저희 간병을 이용하시는 보호자들로부터 다른 업체하고는 달리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보면 자부심 이 된다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공의 지원과 안정적인 매출처의 존재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만한 매력적 자원이라는 점임. 이는 한편으로는 자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을 매년 인증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라 할 수 있음. 동시에 자활기업은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에 의존하여야만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 강점에 해당함

대표 1: 저희도 일년에 입찰 한 두건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공서에서 나오는 일들이 꽤 있어요.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일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라 경쟁이 좀 안되죠.

대표 2: 공공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렵죠. 왜냐면은 당연히 수급자를 채용한 게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중앙에 수급제도랑 같이 적용을 하는 건데 공공 자기들이 도와줘야지.

- 자활기업의 자립가능성을 고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음
- 첫째, 자활기업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대표 2: 왜냐면은 당연히 수급자를 채용한 게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중앙에 수급제도랑 같이 적용을 하는 건데 공공 자기들이 도와줘야지. 예를 들어서 집수리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집 상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대상자 집을 치워가면서 하는 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하루 걸릴 것이 그거 하느라고 어떨땐 이틀로 연장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해서 하루치 월급이 아닌 이틀치를 더 주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일을 하는게 사실은 옳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대표 2: 그리고 제가 올해 수급자 한분을 채용을 했어요. 1인 가족이라 최저임금을 줬더니 수급자가 탈락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령이시라 어떻게 앞으로는 우리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에다 얘기를 했죠. 인건비 지원 좀 해주라고 센터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50%를 더 지원을 해주면 쓰는 우리도 흔쾌히 쓸 수가 있고, 그분도 내가 여기에 폐를 안 끼치는 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될 텐데.

■ 둘째, 자활기금 사용에 보다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대표 1: 기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자활기업에 어느정도는 있는데 그 비율을 자활기업에 정말로 배분을 안 해줘요.

대표 4: 자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활 기업이 우선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냐면 이 자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활사업단 하다가 기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활 기금이라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든 어디서든 예산을 좀 들여서 혹은 자활기업들이 임대료 걱정이라도 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교육장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1석 몇조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요.

■ 셋째, 자활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활기업과 자활센터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대표 1: 이거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나 지침등을 조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거든요.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간에 유대관계와 협동적인 관계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자활센터 내 사업단이 얼마나 매출을 창출했느냐보다는 얼마나 자활기업을 많이 후원을 하고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센터에 가산점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줘서 자활기업과 센터가 보다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야지만 자활기업들이 수급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어느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좀 되지 않나. 자활기업을 후원하고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산점 좀 많이 줄 수 있게끔해야 한다고 봐요.

■ 넷째, 대상자의 탈수급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몇 년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혹은 자활센터 내 사업단 경유 후 자활기업으로 이어지게끔 단계별 사업 전환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언급됨

대표 2: 예를 들어서 자활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느정도 몇 년을 거치고 나서 인턴 형식으로나 자활 기업으로 바로 연계를 하도록 한다면은, 그게 연한이 5년이다보니 까 그 안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활센터 사업단을 거치면 또 몇 년은 자활기업으로 연계를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한다고 하면은 단계화해서 예전에 그 인턴형식처럼 인큐베이팅처럼 그렇게 자활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연계를 해준다면 우리 자활기업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5년 안에 자활을 하는게 본래는 그게 모범적인 거잖아요? 1년차, 2년차는 사업단, 그리고 3년차 4년차는 자활기업 이렇게 연계가 되고, 그러고도 자활을 하지 못하면은 수급탈락,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하면, 미리 수급 탈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뭐 그런 형식.

대표 1: 가능하지만 하다면야,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급탈락이 정 고민이 된다 그런 것이라면은 자활기업에 마지막으로 연계를 하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기간을 좀 더 준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면은 수급자를 마지막으로 연계한 자활기업에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주는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급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탈 수급을 할 수가 있게끔 해준다면 너무 좋죠.

대표 4: 자활기업에서 정말 탈수급에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을 또 연계 받게 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매출에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우리 인천시에서 최초로 그렇게 하는,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탈수급을 자체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자활기업대표를 통해 인천시의 특성 및 이를 잘 집약한 사업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 지 질문한 결과, 인천시의 특성 보다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됨

- 대표들은 인천시의 특성이라면 항구 도시인 점 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종인 수산물 유통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을 제시하더라도 결국에는 근로강도에 따라 참여자들의 근로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음. 따라서 인천시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아이템의 제시보다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에 맞는 사업분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대표 4: 인천시 특성 하면 뭐 바다, 항구 이렇게 있긴 한데, 그걸 활용해서 자활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기는 어려울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수산물 유통을 뭐 한다고 쳐도, 일 강도가 세잖아요. 생선은 진짜 새벽같이 동트기전에 나가고 이 해야 되는데 누가 어느 누가 자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안 하죠. 일이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 급여는 똑같이 받고 오히려 자활기업같은 경우는 수급탈락이라는 패널티 아닌 패널티도 생기게 되는 건데, 정말로 그게 무슨 사업을 선정하든지 사업 아이템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대표 1: 차라리,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 특성이다 뭐다 그래도 자활기업만 일단 보면, 요즘 대부분의 전국의 자활기업들이 분야들이 비슷비슷해요. 높은 매출을 보장하는 사업아이템이 제시되면 그런 업종은 소위 3D업종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기피할 것이고,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비용이 필요한 사업은 엄두를 못내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능한 업종이 몇 없다는 거죠.

대표 3: 사실상 자활 참여하는 주 연령대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강도가 센 업종은 어렵지 않을까 저희를 청년 이주업도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은 계속 잘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것으로 좀 선진사업을 하고싶어도 그리고 너무나 격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IT나 이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1 | 조사개요

■ 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자활사업 실무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다면적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개선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FGD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자활센터 사례관리 실무자(이하 실무자)의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주요 개선 요구사항 및 향후 지향점을 조사함

■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자활센터에 종사 중인 실무자를 모집하여 다면적 관점에서 자활일자리 개선사항 및 참여자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음
 - 일시: 2021.12.16. 13:30
 - 장소: 인천광역자활센터
- 다음의 지점을 고려하여 표적 집단을 표집함
 - 첫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1그룹 당 8인 이하의 소수 인원 모집
 - 둘째, 종사하고 있는 업무 내용 및 종사 센터, 근로 연한이 중복되지 않도록하여 배분 모집
-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에 대해서는 [표 37]와 같음

[표 37] 자활센터 실무자 FGD그룹 현황

NO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종사기간	세부담당업무
1	여	50대	3인 가구	3년 8개월	자활사려관리 총괄
2	여	30대	2인 가구	5년 11개월	게이트웨이/사려관리
3	여	40대	2인 가구	7년 9개월	카페/외식사업
4	여	20대	4인 가구	1년 9개월	자산형성지원사업
5	남	30대	3인 가구	1년 11개월	회계/행정/총무

■ 진행순서 및 인터뷰 내용

- 총 9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논의함
 - 자기소개(10분)
 - 자활사업 이슈별 삼각화(20분)
 - 자활사업 개선점(30분)
 - 자활실무자 처우 개선 방안(20분)

2 | 조사결과

■ 자활센터 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활정책의 실제 적용에 있어 규정의 해석과 수급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등 센터 조직의 측면에서 체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일치하는 의견을 나타냄

■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자활사업 정의

- 실무자들이 자활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실무자들이 자활사업의 목적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므로 각자가 인식하는 자활사업의 기초와 개선요구에 대해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라 볼 수 있음
-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을 조건부 수급자인 참여자의 관점에서 ‘유예된 시간’,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다만 앞서 살펴본 참여자의 인식과는 달리 자활센터 등 조직적인 측면과 자활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자활사업 정의 과정에서 나타남

실무자 5: 이분들이 일반 시장에 취업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 사업은 자립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무자 4 : 자활사업은 사회를 내딛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자활에 처음 오셔서 사회에 대해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직장을 가지셨다가, 다시 여기 오셔서 또 새롭게 배우시는 것들도 있어서.

- 실무자2는 자활정책이 제도적 변화를 많이 겪었고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갈대’라는 단어로 설명하였는데, 특히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전반적 기초가 변화하게 되는 점을 언급하였음. 동시에 자활실무자들의 전문성이나 참여자들의 욕구보다는 위에서부터 전달되는 정권의 기초와 상부의 지시가 자활의 기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해석할 수 있음

실무자 2 : 저는 자활 사업은 갈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자활의 기초가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자활 사업 목적이나 목표 자체가 수익 창출인지 훈련인지 하는 것들은 실무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권의 그런 기초에 따라서 항상 바뀌기 때문에 좀 저는 '갈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네요.

- 실무자 3은 자활사업을 참여주민의 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조직과 정책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음. 특히 자활사업의 지침을 언급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취업 실적이나 창업실적 보다는 역량과 스스로의 자활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또한 지역사회 조직 역시 주민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실무자 3 : 저는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전에 자활사업의 지침이 거의 이제 취업이나 창업 위주로 이제 평가 되었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역량을 본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점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서 평가 기준도 그래서 함께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조직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실무자 1의 경우, 자활사업을 '터닝포인트'이긴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자활사업 및 조건부 수급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터닝포인트'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였음. 이는 '탈수급'에 대해 두려워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특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실무자 1 : 자활사업은 사실은 저게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자립을 위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자활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저는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은 자립을 위해서 오셨다가도 오셔서 여기서 근무를 하시고 생활하시다 보면 또 주저앉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실무자 FGD의 경우, 앞선 두 그룹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기업대표’ 그룹에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해석하고 이에 대해 개선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 앞선 두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 이슈는 크게 세가지로, 첫 번째는 참여자들의 자립 저해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자활정책의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 및 참여자 특성과 맞는 사업분야에 대한 제안임
-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함
 - 실무자 1의 경우 5년이라는 종결시간이 있음에도 수급자들은 수급을 ‘놓치지 않으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이러한 상황을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더불어, 자활사업에서의 근로가 여타 시장에 진출했을 때보다 업무 강도에 있어서 수월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자립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함. 이는 종합하여 말하면, 제도가 자활참여자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실무자 1: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오면 5년 딱 되면 종결이 되잖아요. 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문이 너무 활짝 열려 있는 거 이분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또 열려 있기 때문 이게 내가 안 하면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이런 식의 아니한 생각이 많이 들어 있어서 또 다른 데 가봐서 일을 하시니까. 여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모든 여건들이 여기가 오히려 안정되기가 더 좋은 사회생활을 막상 가서 보면 그만큼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정도 노력을 안 해도 생계 수급을 받을 수 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안일하게 여기서 근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실무자들이 잘 지원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노력을 이분들한테 했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제도 자체가 좀 더 여기서 딱 나가서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상황을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올 수 있는 사람과 안 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서 받아야 된다. 그 감면도 받고 문제가 일으켜서 종결이 되어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립은 어려운 것 같아요.

- 실무자 2의 경우, 다소 다른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첫째로 자활에 유입되는 참여자들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이미 한번 탈락이 되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재진입이 어려운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이라는 도전을 하기보다는 자활사업의 5년간의 기간을 통해 될 수 있는 한 수급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임

실무자 2 :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자활에 유입되는 분들 자체가 탈수급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건강에 안 좋다거나 탈수급이 가능한 분들도 이제 아이를 보통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수급을 유지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면은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그니까 젊은 나이에 와서 역량이 있어도 아이를 사실 혼자서 일을 하면서 키우기에는 그 혼자서 벌어서 생활하는 것보다 자활에 그냥 수급자로 참여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직업급여를 받으면서 아이를 케어 하는 게 더 어쨌든 낫기 때문에 수급 유지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 나이도 있고 이제 취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담하고 계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취업 의지가 있어도 이제 좀 오히려 여기에서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취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아예 이제 수급이 좀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그런 두 가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 실무자 3과 4의 경우에도 앞선 실무자 2의 언급과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재정 마련처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탈수급 의지가 약화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실무자 4 : 제 생각에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일의 강도가 하향으로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꿈의 직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이쪽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이분들의 이제 목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를 자꾸 악용하고 제도가 바뀌면서 이분들도 계속 바뀌시고 지침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들이 이분들을 안주하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실무자 3 : 우선은 수급자분들이 어쨌든 나가게 되면 돈을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사업단에 있어서 하는 거랑 이게 비슷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내가 탈 수급해서 생계나, 주거나 그런 혜택들을 못 받으니까 그냥 그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도 이 사업단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능력 있는 분들도 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더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모이는 사람들이 또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더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가서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 있는 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으니까 굳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미 취업자 참여자분들이 사업장에 자활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워낙 자활 기업이 이미 나간 것들 주거나 택배나 돌봄이나 청소나 그런 것들 이미 표준화된 자활 기업들이 이미 다 나간 상태고 자활 센터에서 새로운 색다른 그런 사업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이 기업도 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안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전부터 이전부터 수급비를 받아와서 그거에 대한 안정감도 있고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도 탈 수급을 안 하는 게 그 안정 적인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수급이 또 탈락이 되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탈 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큰 것 같아요.

■ 지역센터의 대부분은 자활근로단 사업의 개시과 근로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음

- 우선 실무자2의 경우 참여자가 창업 혹은 일하고 싶은 사업아이템을 구성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작업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혹은 초기 비용의 경우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센터실무자 2 :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자 분께서 실내 골프 연습장이나 씨앗호떡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견학도 가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거는 사행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활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 동시에, 실무자들은 대부분의 자활센터의 사업들이 참여자들의 욕구조사에 기초한 것이기 보다는 센터장의 제안에 의한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경우 시도하는 사업의 분야는 ‘공공의 이익’ 부분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많은 매출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 해당함. 또한 센터장이 제안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 센터에서 성공한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어 인천시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임

실무자 4: 일단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참여자들의 의견보다는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사업이 좀 될 만한 아이템들을 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무자 3: 두 번째는 또 이제 사업단들이 좀 옛날 이 센터장님들 마인드인데요, 너무 좀 ‘자활스러운’ 마인드가 좀 있어요. 자활 마인드가 머냐면 약간 우리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나 택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환경 그런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요새는 근데 요새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해서 매출을 좀 많이 내는 분야 위주가 많이 돼야지만 또 자활 기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자 5 : 다른 센터에 이제 성공하신 분을 갖고 오시는데 저희 우리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너무 넘나들면서 갖고 오시니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이하인 것도 많고요.

- 한편 실무자들은 실무자들 자신의 역량이나 근로여건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역시 언급하였음. 다시말해,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상담 계열 전공으로, 자활사업이 추진하는 업무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임. 더불어 실무자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점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과중한데다, 비상시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자신 조차도 할 수 없는 기술집약적 업무를 도전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임

실무자 3 :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업단을 만들 때 보통 센터실무자분들이 처우 개선이 일단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면 정규직이랑 계약직이든 어쨌든 사업단을 만들면 자기가 일단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면 이제는 하나였던 게 사업이 두 개 되고 그러면 차라리 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직원들이요 왜냐하면 사업단을 만들면 그 사업을 제가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사업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또 있고. 센터 직원들이 이제 사업장을 만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런데 그렇게 대한 처우가 또 부족하니까 또 그걸 일이 더 늘어난 만큼 뭔가 색다른 처우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수당 같은 게 요새는 많이 이제 주어지고 있어서 이런 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자 5 : 진짜 참여자분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더라도 센터실무자가 그거에 대한 전문 기술이나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센터실무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사업단을 여러 개 나누게 되면 그 사업단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물리적인 조건이 없다보니까 운영 자체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 실무자들은 참여자들의 결근 상황 등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투입되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였음. 즉, 참여자들이 근로를 불이행 하는 상황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투입되거나 그로 인한 민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임.

실무자 2 : 예전에는 참여자분들이 결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빠질 때 참여자가 실무자가 하고 일을 대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례에 저희 센터실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서 지금 불이행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실용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시 1년이 되면 초기화 되고 해서 그래서 참여자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패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 더불어 사업단 근로자들의 역량측면에서도 고난이도 혹은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는 아무리 일부 참여자들 스스로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자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없고 참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산출물의 질적인 면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사업의 질적 저하는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여러 가지로 매출을 고려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결국 자활사

업단 혹은 자활근로의 경우 센터 실무자는 물론 참여자, 그리고 매출의 부분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만 하는 과제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실무자 3: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이 너무 고령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막 팔이 불편하신 분들 있고 다리가 불편해요. 뭐 하면 다 불편하대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좀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다 이거 하기 싫다고 더 쉬운 쪽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요새는 또 청년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도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져서 좀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무자 5: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협동조합이랑 사회 서비스를 좀 약간 좀 위협적인 분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돼 있던 센터였는데 뭐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너무 별로인 게 이게 아프신 분들 또 약간 경계성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단순 작업을 하더라도 불량도 엄청 많이 내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인 분들이 많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 그게 이제 센터가 연결이 일반 사업단으로 이게 다른 데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장 진입형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극 소수인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어느 정도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했던 일이 어렵다고 하면 이미 아니까 안 갈려고 그러고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삼박자가 다 이렇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센터실무자도 있어야 하고 사업단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들 다 이렇게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 참여자의 근로여건 조정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가능성

- 참여자들의 담화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센터마다 내부 지침이 달라 근로여건 조정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강화, 즉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센터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인천 시 내 자활센터의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해당 부분은 참여자와 실무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우선 실무자의 경우,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복지부의 자활수급이 분리되어 적용됨으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및 실제로 노동시장에 연계되기 어려운 참여자들이 자활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음. 참여자들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게 되면 근로를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수급비로 자격증만 취득해야하고 이러한 점이 실제 생활비가 모자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함.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조건부 수급기간에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자활사업 참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임

실무자 1 :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소이팜이라고 버섯 재배, 도시농업에서 유기농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버섯 재배에 자격증 그리고 레인바이크 같은 자전거 수리 여기에서는 자격증들을 많이 뒀어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취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취업이 안돼요. 사실상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사회에서 여기서는 직접 해서 또 사회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직업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사회에서도 이제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이분들이 여기 자격증은 사회에 가도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막상 가도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미안하긴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무자 2 :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자격 취득 기술 취득은 다른 쪽으로 빠지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거기에 이제 미달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오시다 보니까 주로 국가 자격증보다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서가지고 이게 취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말 어렵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단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능적인 거는 향상되는 건 맞지만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 다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자활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시장에 취업까지 이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실무자들은 또한 센터 사업단이 매출에 의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속적으로 한 분야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역시 참여자들의 자활참여를 통한 역량강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된다고 하였음. 동시에 센터가 충족시켜야 하는 기관 평가의 부분이나 참고해야하는 지침의 제약이 있고, 거기에 매출에 대한 압력까지 더해져 참여자들의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함

실무자 5 : 평가나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쓰기 보다는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목표가 딱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야하는데,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평가라든지 그런 본래의 업무에도 집중해야하다 보니까. 평가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출도 올려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자꾸 이렇게 집중되는 이게 결국은 참여자에게 집중할 수 없게하고 업무가 많으니까 에너지도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돌고 돌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무자 1 :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업이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지만 이게 진짜 어느 날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업단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도 어쨌든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참여자분들도 이동이 있고 이 사업도 변동이 있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밀고 추진할 수 있는 목표점을 잡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직을 이런걸로 다 이어지고 자꾸 소진되고 뭔가의 목표가 자꾸 계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 안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 매출에 대한 고려

- 참여자와 실무자, 기업대표 모두 자활사업의 목적 자체를 영리성 추구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조건부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혹은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매출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자활사업에서 사업단 매출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실적이나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적 목적 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실무자 2 : 매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시장 진입형은 일단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매출을 발생을 해야 사업 단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진입형 사업단은 매출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고요 참여 주민분들도 임금이 오르면 버는 돈이 그만큼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을 또 신경 안 쓰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0% 정도고 공익형은 그 밀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사업단이 다운그레이드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평가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매출이...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루고 싶은 사업단을 못하고 정말 매출에 전전 궁긍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 다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시장의 기업 혹은 사업들과는 달리 자활사업은 복지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전체 자활제도의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실무자들의 공감을 얻음

실무자 2 : 탈수급과 관련해서는 제발 센터에서는 좀 한 가지만 하셨으면 정말 선생님들의 훈련을 하는 데 정말 집중할 것인지 그냥 이분들이 그냥 일상 그것만 하는 데 할 것인지 아니면 매출을 할 거면 매출은 하나만...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두 개를 다 잡을 수 없는 사업장에서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러시면.

실무자 4 : 지침도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커버리고 좀 애매해서 개발원에 문의하면 본인들도 확답을 안 주고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끝나고. 제가 문의한 게 3월에 문의한 게 저 아직도 답변이 안 달렸어요.

■ 자활기업과 자활센터간의 관계

- 앞서 자활기업 대표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활기업에 참여자를 연계해 주는 경우 실무자들은 대부분 근로역량이 향상된 사람을 중심으로 연계한다는 점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마다 내부 지침이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 각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곳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한가지로 명확히 기준을 정의 내릴 수는 없다고 하였음. 따라서 인천광역시 내에서라도 일관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남

실무자 2 : 저희는 자활 기업에 가시는 참여주민 분들은 현장 학습 다 진행하고 그냥 게이트 단계에서 보내거든요. 좀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해서 저희는 처음에 같이 이제 사업단에서 나가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게이트 단계에 오신 분들 중에 좀 역량이 되는 분들 몇 분을 현장학습식으로 해서 직접 일을 해보고 보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말이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은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이 없는 분들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실무자 4: 일반적으로는 상담을 통해서 그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거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 자활사업 제도적 개선 방안

-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의 제도적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였음. 이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위주의 기조 지양 및 탈수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무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침 및 법규 해석에서의 일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임

■ 실무자들이 제시한 첫 번째 제도적 개선 방안은 자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매출위주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탈수급을 지향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실무자들은 자활사업 자체가 복지제도로서의 목적이 1순위인 만큼, 평가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함. 즉, 매출에 경도된 평가항목은 참여자들의 욕구를 자활사업에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임. 동시에 매출에 따라 사업이 사라지거나 시장진입형에서 탈락하여 급여가 낮아지는 등의 패널티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다는 것임
- 다만 이는 중앙 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인천광역시의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움을 실무자들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인천시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앙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음

실무자 2 : 저희는 자활 기업에 가시는 참여주민 분들은 현장 학습 다 진행하고 그냥 게이트 단계에서 보내거든요. 좀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해서 저희는 처음에 같이 이제 사업단에서 나가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게이트 단계에 오신 분들 중에 좀 역량이 되는 분들 몇 분을 현장학습식으로 해서 직접 일을 해보고 보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말이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은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이 없는 분들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실무자 4: 일반적으로는 상담을 통해서 그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거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무자 1 :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업이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지만 이게 진짜 어느 날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업단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도 어쨌든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참여자분들도 이동이 있고 이 사업도 변동이 있다 보니깐 어느 거 하나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밀고 추진할 수 있는 목표점을 잡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실무자 2 : 그거는 어쨌든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거 100% 받아들여지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자활 협회 차원에서 이제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 곳에서만 하는 거 저희가 지금 전국에 전국 모든 곳에 250개 지역 자활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같이 얘기를 해야지 한 곳에서만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제안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 또한 탈수급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의 재진입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제시되었음. 초반의 참여자들이 열정있는 상태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한계에 의해 근로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안정적인 수급을 받는 데에 만족하고 근로역량 고취에는 의욕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점임. 따라서 실무자 1은 근로의욕이나 역량에 따른 명확한 평가를 하고 이에 기반하여 분리를 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다만 이점 역시 중앙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시 자체 내의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며 중앙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실무자 3 : 우선은 수급자분들이 어쨌든 나가게 되면 돈을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사업단에 있어서 하는 거랑 이게 비슷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내가 탈 수급해서 생계나, 주거나 그런 혜택들을 못 받으니까 그냥 그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도 이 사업단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능력 있는 분들도 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더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좀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안 그러시던 분들도 계속 이제 더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계속해서 그 전부터 이전부터 수급비를 받아와서 그거에 대한 안정감도 있고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도 탈 수급을 안 하는 게 그 안정적인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수급이 또 탈락이 되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탈 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큰 것 같아요.

센터실무자 1 :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오면 5년 딱 되면 종결이 되잖아요. 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문이 너무 활짝 열려 있는 거 이분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또 열려 있기 때문 이게 내가 안 하면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이런 식의 아니한 생각이 많이 들어 있어서 또 다른 데 가봐서 일을 하시니까. 여기서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모든 여건들이 여기서 오히려 안정되기가 더 좋은 사회생활을 막상 가서 보면 그만큼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정도 노력을 안 해도 생계 수급을 받을 수 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 실무자들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 거론된 부분은 실무자들이 동일한 업무 내용을 수행함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가 다르다는 점임.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같은 분야로 이직할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여 중앙부처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활센터 실무자들의 경우 재원이 다른 점으로 인해 호봉제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됨. 다시말해, 자활센터 실무자들은 게이트웨이 실무자, 사례관리자 및 자산형성 사례관리자, 전문가 등 직렬이 타 직종에 비해 지나치게 다양하고 그만큼 재원 역시 다양한 곳에서 지급되는 점 때문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급여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임. 따라서 실무자의 근로여건개선에서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할 부분은 승급제도와 호봉제도의 안정화라 할 수 있겠음
-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다른 급여를 적용받는 근로여건은 종사자로 하여금 근로 의지를 약화시키게 되며,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됨. 더불어 실무자의 잦은 이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금 수준 및 급여체계, 승급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자활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됨

실무자 2 :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데도 이렇게 다 같기 같기 찢어져 있고 임금 체계도 달라서 전문가는 또 전문가인데 같은 계약직인데 계약직에서 전문가는 또 계약직이 아니에요. 지침에서 그냥 전문가 이 사람은 전문가고 지침에서 말하는 계약직은 저희 이제 사례 관리자들도 계약직이고 그래서 성과 평가를 넣을 때도 전문가들은 교육이나 이게 안 들어가고 저희만 계약직 정규직 요렇게만 그래서 이런 체계부터 일단은 하나로 먼저 좀 해야죠.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사실 다른 데랑 인건비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같은 센터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 재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일을 덜하지는 않고 정규직이라 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이제 의욕도 꺾이기도 하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활이 그러니까 업무도 힘든 거 힘든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무자 3 : 일단은 재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나가는 이제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분들은 거의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단 사업비에서 나가요. 그리고 정규직 운영비에서 돈이 나간 사람은 타직종 사회복지사처럼 호봉제로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급수마다 또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1급은 한 명 2급은 한 명 3급도 한명 4급은 제한 수가 없이 되고 그다음에 5급 까지 있는데 거의 5급 없이 거의 4급까지는 무제한으로 가는데 이 급수 인원을 좀 제한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1, 2, 3급에서는 한 명씩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해도 4급만 무제한으로 가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5급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에서 임금 보증 수당으로 97%로 올해 맞춰줘 가지고 그것도 정규직만 해당이 돼요. 비정규직은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법률에 따르면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자활에서는 이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무자 5 : 인건비가 운영비랑 막 섞여 있고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니까 이제 제 호봉을 받는 사람도 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센터마다 특이성이 좀 있더라고요

-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내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센터 내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영역임. 다시 말해 매출이나 업무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지만 그 기준이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센터 내 종사자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약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정한 배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인천시에서는 임의에 의한 업무 지시 및 상여금 지급이 아닌 일관된 기준에 따른 평가 및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실무자5: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형태는 다른데 또 그 고유 업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센터장님이 너 이거 해 하면은 그 직렬이 아니더라도 해야 하고 그러니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 승급이나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센터장님 임의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상실감도 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승급 제도나 호봉 제도나 이런 걸 좀 안정화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자원 역시 또 딱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면서라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게 좀 안 돼 있어요.

실무자 1 : 그리고 지금 얘기한 매출에서 인센티브 이게 나왔는데 이거 역시도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구에서는 차등해서 지급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계신 이제 평가자분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건지 참여자의 이직률 이런 거에 따져갖고 할 건지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냥 본인의 감정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뒤로 빼고 이런 게 만연해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좀 제도화가 기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실무자들은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 사실상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모든 욕구를 맞춰 주는 일은 불가능하며, 실무자들은 센터와 참여자, 그리고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정책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모든 제안을 수락할 수 없음에도,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곤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은 업무상 소진을 야기하는 중대한 어려움으로 언급하였음

실무자 1 : 저는 이제 입사하면서 자활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고 지인이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같이 성장해 가면서 이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도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저도 이분들이 이제 취약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이제 같이 같이 성장하는 걸 꿈꾸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일하면서 이분들이 민원에 치여가지고 나는 내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구요.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는 관계를 생각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약자 누군가는 강자가 되어서 서로의 갈등으로 이제 가는 구도가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 원하는 것과 참여자들이 원하는 욕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욕구를 맞춰가는 게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어쨌든 복지나 여러 가지 협력 구도 서로를 돕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많이 제 이상이었다라는 생각과 많이 낮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실무자들의 업무상 소진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 및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자활분야가 아닌 여타 분야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고저와 상관없이 기준의 일관성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임. 급여가 제공되는 재원이 다를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하고, 기금 등 다른 재원으로 미충족된 부분을 채움으로써 기준을 동일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

■ 무엇보다 지역자활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실무자의 급여체계가 일관되지 않은 점이나, 참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또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실무자들은 중앙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지침의 경우에도 명확히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과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소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실무자들은 자활센터의 업무 자체가 돈과 연관된 것이고 수급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음

실무자 2 : 여기 사실상 자활의 모든 문제가 진짜 기준이 아예 가이드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기준에 이제 저희가 해당이 되면 굉장히 마음 상하고 오래 가는 것 같아. 모든 것들이 좀 제도와 기준화돼서 지침이 좀 명확히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무자 4 : 지침도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커버리고 좀 애매해서 개발원에 문의하면 본인들도 확답을 안 주고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끝나고. 제가 문의한 게 3월에 문의한 게 저 아직도 답변이 안 달렸어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누구하나 제대로 답을 제공해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실무자 5: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받고 싶다고 중앙에 연락을 해도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저희 실무자들 다 돈하고 연결된 건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전전공공 했었어요.

-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기업 대표, 자활센터 실무자 그룹 FGD를 통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활근로 참여자는 자활사업을 ‘역량향상을 위해 주어진 시간 또는 기회’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발전방향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활근로사업단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장기간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근로를 통한 역량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야 함
 - 둘째, 자활사업단의 창설 및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의 자활사업은 사업내용과 조직구성의 측면에서 청년참여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청년 참여가 참여하기 적합한 다양한 사업분야를 창설하고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별도의 학습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실제 창업 혹은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근로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을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 대표는 자활기업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
 - 자활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자활기업은 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완전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님
 - 자활기업을 포함한 자활사업은 ‘수급탈락 가능성’이라는 조건부 수급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참여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의 업무 내용에 비해 업무 강도가 세다는 점 때문에 참여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은 잦은 제도적 변화로 인해 많은 정책적 사각지대 및 모순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기도 함

■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의 구조적·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원의존성으로 인한 어려움
- 조건부수급제도의 제도적 모순점으로 인한 어려움
- 자활센터와의 경쟁구도 형성으로 인한 어려움

■ 자활기업 대표가 인식하는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발전방향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이익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활기업사용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활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활기업과 센터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탈수급 동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탈수급이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혹은 자활사업단-자활기업으로 단계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이 제시됨

■ 자활센터 실무자가 인식하는 자활사업의 특성 및 난점은 다음과 같음

-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연장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탈수급을 지원하지 못하게되고, 이는 곧 근로동기의 약화 및 역량강화 동기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자활사업 실무자의 경우 본래 사회복지사 및 상담계열 전문가로 자활센터에서 개설하는 사업단과 무관한 분야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창업 지원 및 사업단 창설에 있어서 역량 부족을 경험하기도 함
-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근로여건과 처우가 열악하며 다양한 임금 재원으로

인해 실무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실무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잦은 이직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자활사업의 본래의 목적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역량 향상임에도, 실제로는 자활센터의 평가 지표 등에서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향상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임
- 매출에 대한 고려 및 매출 요인으로 인해 사업단이 개시, 폐지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약화 혹은 역량 강화 기회의 상실 등이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거론됨
- 전반적으로 실무자들이 참고할만한 일관된 자활제도의 지침이나 법률적 자문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의 일관성 없는 해석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근로여건 및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센터 내의 지침 및 센터장의 의지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어 실무자간 갈등 발생 소지가 높은 상황임

■ 자활센터 실무자가 인식하는 자활사업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음

- 첫번째 제도적 개선 방안은 자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매출 위주의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것임
- 두 번째로는 실무자의 처우개선, 특히 다양한 임금 재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을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세 번째는 지침 및 법규 해석에서의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제공하여야 함

■ 각 참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지침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결과를 자활지원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자활지침에 상세히 표기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실무자들의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두 번째,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탈수급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자활참여자와 대표, 실무자 모두 자활사업의 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탈수급 기피현상’을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부여 가능한 탈수급 인센티브로는 탈수급 이후 일정 기간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혹은 수급 탈락의 상황에서 생계탈락 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급여까지 모든 부문의 맞춤형급여가 동시 박탈되는 상황을 막아 탈수급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음

- 세 번째, 수급자의 실제 근로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청년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근로역량 향상과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단의 업무내용을 기술 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창설·개선하는 것임. 동시에 이는 매출상승 효과가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할 것임
- 네 번째, 실무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현재 자활센터의 재원이 다양한 점 및 자활사업과 실무자 임금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인해 실무자간 임금 및 근로여건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센터장이나 특정 센터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기준에 의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본 연구의 FGD담화를 통해 발견된 바 있음. 자활센터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감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실무자간 임금재원이 다른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불균등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활센터 실무자의 잦은 이직은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참여자들에게 향상된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소하여야 할 현상일 것임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제2절 세부 사업 제언

제3절 정책 개선 방향 논의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천형 자활 일자리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있음
 - 동시에 인천시 자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과업을 이어, 현재까지 제시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자활사업 및 정책 현황 분석
 - 해외 사례 및 정책 분석(근로 연계형 복지 정책·서비스)
 - 국내 타 지자체 조례 분석 및 자활사업 선행 사례 분석
 -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및 자원 SWOT 분석을 통한 인천 자활 환경 진단
 - 자활사업 FGD 실시, 인천 자활사업 개선방향 논의
 - 인천형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수립을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본 연구의 방법적 특성은 이론적 검토는 물론, 질적·양적 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자료분석을 통해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것임
 - 첫째, 국내 자활사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하는 이론적 검토작업과 함께, 해외 근로연계 사회사업 및 국내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중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을 사례 분석하여, 인천시 자활사업이 추구할 전략 및 방향에 대해 제시함
 - 둘째, FGD를 통해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인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기업대표, 자활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는 점임
 - 그 이유는 우선, 자활사업은 그 특성상 행위자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제도로, 특정 측면에 치우친 견해가 아닌 다각적인 시각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또 다른 이유는 FGD(또는 FGI)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개별 면담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과 토론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참여자담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보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 셋째, 인천시 자활인프라 진단을 위해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

를 토대로 인천시 자활환경의 SWOT 분석을 실시, 인천시 자활일자리선도모델 구축에 필요한 전략을 도출함

- 넷째, 인천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 현황을 비교·종합분석하여 사업의 내용적 다양성, 분류체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도출된 방향을 토대로 결론을 통해 신규사업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이론적 검토를 통한 자활사업 지향점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우리사회의 근로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다양한 모형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산물이나, 탈수급과 관련한 지속적인 비판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본적·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
-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자활일자리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함
 - 첫째,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전략
 -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분야를 초월한 연계전략
 - 셋째, 진정한 탈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 훈련전략을 제시함

■ 양적 자료인 인천광역시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천광역시 자활인프라 진단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인천시의 자활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의 다양성 및 수익성을 확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인천시는 광역시로서 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져 타 광역시 또는 시도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더불어 하나의 단일한 광역시로서 상위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단일화 되어 있다는 것 역시 유리한 이점 중 하나임

■ 지표를 토대로 SWOT 분석 결과 도출된 전략은 다음과 같음

① SO전략(강점강화 기회포착)전략

- 전 연령 의 높은 취업률 증가세에 편승, 자활참여자의 적극적 취업연계를 추진
- 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활용, 보다 많은 자원 연계 및 지원 추진
- 시의 튼튼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충분한 관내 홍보 추진
- 인천시 시민의 높은 구매력을 활용, 매력적인 제조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자활사업의 수익성 향상

② ST전략(강점강화 위협회피)전략

- 풍부한 민·관·학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아이템을 활발히 공모, 공공자원 연계 외 민간의 소비 창출이 가능한 사업분야를 발굴함
- 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활기업 창업 후 탈락 방지 및 사업체 유지를 위해 적극적 홍보 및 지원을 추진함
- 기술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자활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여 청년 참여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함

③ WO전략(약점보완 기회포착)전략

- 타시도에 비해 지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인천시민의 소비 촉진을 시도하기 위해 자활상품의 지역화폐 구매를 가능하게 함
-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 인천시 특색 상품 및 굿즈 등을 개발하여 자활상품으로 활용
-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충분한 발굴을 통해 여성 취업률을 고취함
- 부족한 교통자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 및 예약 플랫폼을 통해 자활상품의 접근성을 증진함

④ WT전략(약점보완 위협회피)전략

- 자활기업 확장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관광산업의 발돋움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
- 지역주민의 다양한 후원경로를 탐색, 후원상품을 개발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함

■ **질적 자료인 FGD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첫 번째,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지침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결과를 자활지원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자활지침에 상세히 표기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탈수급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수급자의 실제 근로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청년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근로역량 향상과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단의 업무내용을 기술 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창설·개선할 필요 있음
- 네 번째, 실무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무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실무역량 향상을 꾀하여야 함

■ **상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요컨대 공공성 확장형 및 수익성 확장형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이에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 첫째, 안정적인 사업단의 유지 및 자립을 위해 수익성 창출 및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둘째, 참여자들의 기능 향상 또는 기술 습득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셋째, 일반 주민의 구매 및 후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경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의 추진전략 및 홍보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직관적인 목적에 집중
 - 지역사회의 참여를 최대화
 - 자활 센터 내·외의 연계를 최대화

■ 결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 법률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조정 필요
-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로의 이점을 강화하고 위협을 기피하여야 함
- 종사자 임금의 일원화 및 근속 인센티브 강화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주민 참여강화 사업의 추진

제2절 세부 사업 제안

- 유사 연구인 『인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및 친환경, 커뮤니티케어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제시함
 - 상기한 사업은 주로 공공재정 및 공공자원 연계에 적합한 모델로, 수익성보다는 복지 및 사회적 기여 측면의 목적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현행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자활사업 역시 공공재원의 연계 혹은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5대 중점사업’중심의 자활사업들임
 - 기존 제시된 사업은 공공재원의 연계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의 협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렵다는 특성 또한 병존
 - 동시에 사업의 수익성이 자립사업에서 복지적 목적만큼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공자원 연계 중심의 사업설계는 시장 침투성이 낮고 이로 인해 수익성을 확장할 수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상기한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역시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익성 모델을 제시함
 - 첫째, 안정적인 사업단의 유지 및 자립을 위해 수익성 창출 및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둘째, 참여자들의 기능 향상 또는 기술 습득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셋째, 일반 주민의 구매 및 후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경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참여자의 복지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자활사업의 본연의 목적 역시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근로역량이 낮으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가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공자원연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근로역량이 높은 참여자 및 청년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능 향상 및 기술 습득이 가능한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 주요 분야

- 신규 사업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세가지 기준(수익성, 기능향상성, 홍보성) 외에도 자활사업의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 사행성 사업은 지양되며,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복지 욕구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기준 역시 충족하여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의 산업 중 고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으며, 성장세가 높거나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임
-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경우 근로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의 기술 습득 및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추진될 만한 가치가 있음
- 자활사업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기여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 사업에서 제시된 제안 사업 중 현재 인천시에서 현실성 있게 추구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 함께 제시하고자 함

1) 주요 사업 제안

■ 신규 사업은 (1) 공공성 확장형, (2) 수익성 확장형의 두가지 모델로 제시됨

- 공공성 확장형은 임대주택관리사업 등과 같이 공공연계에 적합한 기존 사업들과 함께, 인천시복지재단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및 친환경,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같이 사회적 이익 및 기여를 확장할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함
 - 다만 현재 진행중인 자활센터의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단마다의 특성 및 재정상황을 포함한 평가가 불가능하기에 따로 평가 및 진단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 재분석, 진단하여 제시하였음
- 수익성 모델의 경우 앞서 제시한 매출과 직업훈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라는 세가지의 직관적 목적에 집중한 사업이라 볼 수 있음

(1) 공공성 확장형

- 공공성 확장형 사업은 주로 공공재정 및 공공자원 연계에 적합한 모델로, 수익성보다는 복지 및 사회적 기여 측면의 목적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현행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자활사업 역시 공공재원의 연계 혹은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5대 중점사업’ 중심의 자활사업들임
 - 기존 제시된 사업은 공공재원의 연계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의 협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렵다는 특성 또한 병존
 - 따라서 상기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천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매출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단 유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됨
- 『인천 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및 친환경, 커뮤니티케어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아래 각각의 사업에 대해 지역 및 분야·대상 측면에서의 확장 가능성 및 수익성 창출 가능성을 토대로 재평가하고 홍보나 연계성 측면에서의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표 38] 인천복지재단 제시 사업

추진전략	성격		벤치마킹 사례
공공일자리 확대	광역단위 사업 활성화	도시재생	1. 인천부평) 임대사회주택 관리
			2. 인천서구) 마을관리사무소
		친환경	3. 충남) 다화용식기 렌탈 서비스
			4. 서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5. 인천연수)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커뮤니티케어	6. 광주) 사각지대 발굴 사업단 or 전문 인력지원사업(제안)
			7. 인천) 학교밖 아이 도시락 제공사업 & 노인돌봄사업단

사업환경 개선	작업환경 구축	공동작업장 마련	8. 울산) 공동작업장/센터 구축
			9. 제안) 공동작업장 활용
역량강화	자활참여자 리더육성		10. 서울) 자활촉진자 시범사업

자료: 인천시복지재단(2020) 연구 재인용

■ 도시재생사업

- 자활참여자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연계 및 협조 보장이 가능한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임
-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 부평의 임대사회주택 관리 및 마을관리사무소 사업은 각각의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공성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각개 군·구로 확장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마을관리사무소의 경우, 지역사회주민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홍보와 노력봉사 모집 등 후원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 해당 사업만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인천시 내 보완이 필요한 시설, 가령 지하철 내 시설 개보수 및 보도블럭 재건설 등 인천시 전체 규모로 사업 대상 규모를 확장함은 물론 도시재생 분야 추가적인 시민 공모를 추진하여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음

■ 친환경 사업

- 친환경 사업의 경우,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 정당성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나, 매출 유지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 다시 말해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참여자의 다방면의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사업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임
- 해당 사업들에 대해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수익성 확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가령, 다회용 식기 렌탈 서비스의 경우 충남에서는 지역 장례식장이나 의료원, 영화관 등으로 확대전략을 구축하는 바, 인천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분야

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협회 및 SNS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다회용 식기 이용 촉진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확장 추진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의 경우, 주 참여자인 아이스팩 소비자들의 편리한 아이스팩 제출이 관건인 바, 해당 사업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아이스팩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마트, 은행, 공동주택(아파트) 내 아이스팩 수거 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소비자의 수거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겠음

■ 커뮤니티케어

-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경향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동행업무를 추진함은 사업의 사회적 기여 및 현재 보건복지 사업 확장세에 따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며 따라서 인천시 내 전 영역으로 확장할만한 가치가 있겠음
- 학교 밖 아이 도시락 제공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다 수익성 확장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음. 즉, 사업 대상을 확장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학교 밖 아이 뿐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원 및 병원 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당뇨환자 및 신장식을 섭취해야 하는 고령환자들에 대한 도시락 키트 사업으로 확장해 볼 수 있음. 각 병원 시설 내 의료사회복지팀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소개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의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건강 취약자들의 유·무상 도시락 제공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작업장 마련

- 공동작업장 마련사업의 경우 자활사업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광역 자활에 제안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임대료 등의 비용이 소모되는 소비성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활 사업으로 전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임

■ 자활촉진자 지원사업

- 자활촉진자 지원사업의 경우 자활센터 내의 참여자 조직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업임. 따라서 참여자 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조직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익성 확장형

■ 인천광역시 자활일자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역시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익성 확장형 사업을 제시함

- 첫째, 안정적인 사업단의 유지 및 자립을 위해 수익성 창출 및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둘째, 참여자들의 기능 향상 또는 기술 습득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셋째, 일반 주민의 구매 및 후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경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 쇼핑몰 운영 및 청년 마케팅 동아리

- 사업내용
 - 인천시 내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생산품을 손쉬운 경로로 지역주민이 구매가능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네이버 페이 가능한 쇼핑몰)
 - 청년 마케팅 동아리를 운영, 소속 참여자들이 쇼핑몰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게 함
- 목표
 - 청년 참여자가 기능 습득이 가능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생산품의 매출 향상
- 주요 방법
 -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네이버페이 가능한 쇼핑몰)
 - 청년 자활근로자들의 홍보전문가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 주로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여 쇼핑몰 운영 및 외부 쇼핑몰 입점 관리 등 마케팅 전반을 기획, 운영, 관리하도록 채용
- 중점 추진 사항
 - 지역 내 자활센터의 생산물품을 홈페이지 내에서 구매하기 쉽도록 구성하여야 함. 즉, 카탈로그 정도의 홈페이지 구성이 아닌, 실제 네이버페이 쇼핑몰로서 인터넷 구매가 즉시 가능한 정도로 유통경로 개척 필요함
 - 네일아트 등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네이버예약 등을 활용
 - 유사사례는 시흥시의 사례(‘생활썩’, ‘그담’ 등)를 참고

■ 청년 홍보전문가 양성사업

● 사업 내용

- 주로 청년 대상 참여자를 모집,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생산 물품 및 서비스 홍보에 활용
- 영상 제작기술, 그래픽디자인 기술 습득 과정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 지원

● 목표

- 청년 참여자의 근로의욕 및 자신감 고취
-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참여자의 자활근로 종료 후 관련 분야 취직을 용이하게 함
-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쇼핑몰 운영, youtube 운영시 인력을 활용하고 홍보 및 후원 연계에 용이하게 함

● 연차별 계획

- 1차 년도(1년): 청년 사업자의 욕구 파악 및 기술 습득 지원(내일배움카드 등 활용), 이때 자활근로(자활쇼핑몰 운영 사업 근로와 병행 권장)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학습 및 근로계획 수립이 필수적
- 2차 년도(1~3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통합 쇼핑몰 관리 및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자활센터 홍보와 마케팅 사업 분야 근로
- 3차 년도(1년):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후기 마케팅 동아리 참여자 모집시 멘토로 활동

■ 네일 아트점 운영 및 네일아트 전문가 양성

● 사업 내용

- 참여자의 네일아트 기술취득 및 근로역량 향상
- 만족할만한 네일아트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수익성 고취
- 네일아트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 목표

- 질 좋은 네일아트 서비스를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자활근로자의 네일아트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자립의지 고취

● 추진전략

1. 네일아트 자격증 반을 운영함으로써 네일아트 기술자를 양성함
2. 네일아트점을 개소하여 네일아트 자격을 취득한 참여자를 근로할 수 있게 함
3. 일정 요건 이상 목표를 달성한 네일아트 기술자를 대상으로 네일아트점을 창업(자활 기업-협동조합 형태 등)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 계획**

- 1차년도(1년):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동아리 운영·지원
- 2~4차년도(1~2년): 본격적인 자활사업단 운영시기,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네일아트점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함
- 5차년도(2년): 참여자의 취직 및 창업(자활기업 진출 등) 지원

■ 피부관리샵 운영 및 피부관리사 양성 사업

- **사업 내용**

- 자활근로자의 피부관리사 자격 취득 및 기술 습득을 지원
- 피부관리샵을 운영, 지역주민에게 가격과 품질면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

- **목표**

- 자활근로자의 피부관리사 자격 취득 및 기술 습득
- 수익성이 높은 업종인 피부관리샵을 운영, 자활센터의 매출 향상

- **추진 전략**

- 청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근로역량 고취에 중점을 둠
- 피부관리 서비스 비용은 지역 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하여 가격 경쟁력 달성
- 관내 사회복지사 협회와 연계하거나 자활센터 후원 및 물품 구매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여 마케팅 전략의 최적화
- 네이버 예약 등의 접근성 좋은 예약 경로를 개척하여 활용하여야 함

- **훈련 계획**

- 1차 년도(1~2년): 피부관리사 자격취득 과정 운영·지원
- 2차 년도(2~3년): 자활센터 운영·지원하는 피부관리샵에 취직하여 근로 기술 향상
- 3차 년도(1년): 취·창업 지원, 자활기업으로의 개척 권장

■ 목공&라탄 공방

- 사업 내용
 - 소규모 목공 상품 제작 및 유통
 - 목공 기술자 및 라탄 제작 기술자 양성
- 목표
 - 자활근로 참여자의 제작 기술 습득
 - 양질의 물품을 제작, 유통
 - 쇼핑몰 운영 및 외부 쇼핑몰 입점
- 추진 전략
 - ‘그담’ 사례를 참고
 - 네이버쇼핑, 아이디어스 등 구매자 접근성 좋은 경로를 통해 판매
 - 원데이클래스를 운영,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하고 수익성 향상
 -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순환이 가능하게 함
 - 셀프키트 판매를 병행하여 자활참여자의 단순 임가공 참여도 가능하게 함
- 훈련 계획
 - 1차 년도(1년): 제작 기술 습득 과정
 - 2차 년도(2~3년):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참여자가 소가구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 이때 자격증 취득 지원
 - 3차년도(1년): 창업 지원 및 자활기업으로의 진출

■ 힐링팜 주말 농장&어린이 텃밭체험학습 센터

- 사업 내용
 - 친환경 놀이인 텃밭체험을 지역 어린이에게 제공함
 - 주말농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후원을 활성화
- 주요 전략
 - 지역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운영(유료)
 - 유료 주말농장을 개방, 지역주민이 직접 기여하고 생산물을 일정부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및 후원 활성화
 - 지역 방송, SNS 등을 통해 홍보

- 인력 구성

1. 텃밭 체험 인력: 자활근로 참여자
2. 주말 농장 인력: 자활근로 참여자(대체근로자) 혹은 봉사활동 인력 모집
3. 홍보 담당자: 마케팅 동아리 및 청년 홍보전문가와 연계

- 훈련 계획

- 텃밭 체험 인력: 광역자활 혹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모집, 매주 1회, 3개월 교육과정을 진행 후 인력으로 투입. 참여자 역량 및 의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과정을 지원하여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함
- 주말 농장 인력: 자활근로자의 대체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봉사인력을 섭외하여 체계적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혹은 지역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 가능함

■ 자재은행 운영

- 사업 내용

- 건축, 집수리, 청소, 주거복지 분야 필요 자재를 공동구매 및 유통
-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일반주민의 구매 및 후원이 가능하게 함
- 남는 자재의 경우 중고판매 및 나눔 가능한 파트(일반 주민 참여 가능)를 구성

- 주요 목표 및 전략

- 인천시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청소, 주거복지관련 자재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비용 절감 추구
- 남는 자재를 중고 판매 및 나눔 가능하므로 자재 절약 및 환경 보호의 효과 추구
- 공동구매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구매편의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구매 및 후원을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수익성 향상 및 사업의 신뢰성 향상, 홍보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함
- 공동구매 사이트의 운영은 앞서 제시한 청년 홍보 전문가 인력 활용

2) 신규 사업 추진 전략 및 홍보 방안

■ 직관적인 목적에 집중

- 수익성과 참여자의 근로역량 강화라는 단순한 목적 하 사업단을 운영하되, 제시한 사업 외 기존 공공영역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이익부분에 집중
-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부분에 최적화된 근로 인력과 복지부분에 최적화된 근로 인력을 two track으로 구성하여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

■ 지역사회 참여를 최대화

- 홍보와 마케팅 방향을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수립
- 홍보와 마케팅 부분에서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의 이점을 살려, 각종 공공기관 내 영상 홍보 및 지면 홍보를 최대화 하여야 함
- 구매 외에도 별도의 후원경로를 개척하고, 후원 상품을 개발, 손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지역 자활센터 내 후원 파트를 신설·강화하여야 함
 - 세이브더칠드런의 ‘모자뜨기 키트 판매’등은 좋은 예시가 됨
 - 텀블벅, 해피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활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마케팅 동아리 등)

■ 자활 센터 내·외의 연계를 최대화

-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연계를 최대화 하여야 함. 이때 연계 작업 및 연계시 인력 모집과 육성은 광역자활에서 전담하여 수행
- 특히 강사를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광역자활에서 강사 모집을 전담하고 지역 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원하여 센터의 인력 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제3절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 법률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하여 자활정책의 법률 해석 및 지침 해석을 검토할 필요 있음. 이때 법률 분야 별도의 연구를 통해 자활정책 전반의 법률 해석 및 운영관리 지침의 일원화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
- 특히 종사자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과 저촉되지 않게끔 명목상의 지침과 실제 적용 지침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근로기준법 우수 준수 센터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

■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조정 필요

- 현재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은 타 시도 광역자활센터에 비해 축소되어 있으며 행정적 기능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함
- 광역자활센터의 지침상 기본적인 9가지 역할³⁴⁾을 충실히 수행하되, 이 중에서 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홍보사업을 더욱 확장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수익성 보장 및 참여자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홍보 및 연계사업 역시 자체사업으로서 확장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때에 따라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시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광역자활 자체 사업으로서 우선 시범사업화하여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34)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지침(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19)>

- 1) 광역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2) 광역단위의 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및 알선
- 3) 광역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6)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7) 광역단위의 자산형지원사업 위탁 운영
- 8)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Microcredit 집행
- 9)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로의 이점을 강화하고 위협을 기피하여야 함

- 시 직영 광역자활센터라는 점은 명확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 가령, 강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로 지속적인 시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과, 공공자원의 신속한 연계 및 공공자원을 활용한 홍보를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점임.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은 시의 광역센터에 대한 행정적 요청 및 성과 강요 등은 광역센터의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시 직영 센터로서의 광역자활센터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다양한 민·관·학 협력을 연계하기 위해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관련 부처로의 적극적인 홍보와 부처간 연계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사업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또한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 역시 시에서 인천시 내 자활센터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큰 강점일 것임. 다만 광역자활센터의 창의성 및 자발성을 최대로 촉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리 분야에서의 과도한 요청 및 점검을 지양하여야 함

■ 종사자 임금의 일원화 및 근속 인센티브 강화

- 자활정책 자체가 여러 부서 및 민관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종사자 임금의 재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임금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재원에 따른 구분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직렬에 따른 호봉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함. 호봉제 적용을 통해 장기 근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력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준이나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시에서 전담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과 저촉되지 않게끔 명목상의 지침과 실제 적용 지침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근로기준법 우수 준수 센터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주민 참여강화 사업의 추진

-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성 사업으로서 위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음
- 매출에 대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창의적 사업 제시는 좋으나 공공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사업아이템일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단의 폐지 혹은 사회서비스형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패널티를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사회적 이익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역시 함께 고려하는 사업 분야의 창의적 추진이 필요하며 사행성이나 지역주민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질적성장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홍보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활사업 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구매 뿐 아니라 후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경로를 발굴,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창의적인 후원상품의 개발과 함께 지역주민을 통한 공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봉사단체들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참고 문헌

국문 자료

- 인천광역자활센터.(2021). 주요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 인천광역자활센터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0). 인천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백학영, 구인회, 김경휘, 조성은, &안서연. (2011).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3-35.
- 백학영, & 조성은.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에 대한 태도와 탈수급 전략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177-212.
- 백학영 외. (2019). 광역자활센터 공동 운영 매뉴얼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인천광역자활센터.(2021). 2021년 상반기 사업운영평가. 인천광역자활센터
- 장대철 외. (2018).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 청년자립지원센터 브리지 협동조합
- 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정수남. (2019). 탈빈곤 실천의 체계적 모순과 빈민의 하비투스: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0(1), 189-246.
- 노대명. (2010). 자활사업 10 년의 평가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0(9), 14-27.
- 김정원. (2015). 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특징과 개선방안: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1(4), 75-109.
- 최은영. (20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8, 85-103.
- 김승오. (2009). 시범사업단계: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자활사업 15 주년 기념 백서 자활운동의 역사와철학].
- 이진열. (2018). IPA 분석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각하는 자활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8(3), 149-185.
- 문채영. (2016). 거버넌스로서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하승범, & 신원식. (2019). 농촌 자활사업의 방향성: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유형. *사회복지정책*, 46(3), 93-119.
- 김수영. (2012).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03-229.
- 신원식, & 김현주. (2009).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25(2), 171-193.
- 신원식, & 김민주. (2010).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 유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2), 78-97.
- 홍성우. (2011).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413-439.
- 노대명, & 원일.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333-360.
- 구혜경, 이진명, 장은교, & 최아라. (2020).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와 함의.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6, 97-122.
- 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권민숙, 윤영석, & 김근식.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435-454.
- 인천자활사업안내. (2020).
- 김병년. (2020). 2020년 인천형 자활사례관리 성과분석 보고서. 인천광역자활센터.
- 류만희. (2007).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2, 51-72.

영문 자료

- Besley, T., & Coate, S. (1992). Workfare versus welfare: Incentive arguments for work requirements in poverty-alleviation program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1), 249–261.
- Holden, C. (2003). Decommodification and the workfare state. *Political Studies Review*, 1(3), 303–316.
- Torfing, J. (1999). Workfare with welfare: recent reforms of the Danish welfare stat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1), 5–28.
- Peck, J. (2002). Political economies of scale: Fast policy, interscalar relations, and neoliberal workfare. *Economic geography*, 78(3), 331–360.
- Oliker, S. J. (1994). Does workfare work? Evaluation research and workfare policy. *Social Problems*, 41(2), 195–213.
- Mead, L. M. (1989). The logic of workfare: The underclass and work poli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01(1), 156–169.
- Peck, J. (2003). The rise of the workfare state. *Kurswechsel*, 3, 75–87.
- Beaudry, R. (2002). Workfare and welfare: Britain's new deal. CCGES/CCEAE Working papers series, (2).
- Frith, K., McElwee, G., & Somerville, P. (2009). Building a 'community co-operative' at Hill Holt Wood. *The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42(2), 38–47.
- Kuen Kim, T., & Zurlo, K. A. (2007). Factors that influence workfare program participants: Focusing on South Korea's self-sufficiency program. *International Social Work*, 50(6), 796–808.
- Yoo, T. K., & Lee, S. H. (2011). Does mental health affect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workfare program? The South Korean case. *International Social Work*, 54(4), 551–564.

웹페이지

- BAYCAT (<http://www.baycat.org/>)
- Pioneer human services (<https://pioneerhumanservices.org/>)
- Rubicon program 루비콘 프로그램 (<http://www.rubiconprograms.org/>)
- Juma Ventures (<https://www.juma.org/>)
- Room to Read (<https://www.roomtoread.org/>)
- Roca (<https://rocainc.org/>)
- John's Bakery (<https://stjohnrestaurant.com/>)
- Furniture Bank (<https://www.furniturebank.org/>)
- Fifteen (<http://www.fifteen.net/>)
- Hill Holt Wood (<http://www.hillholtwood.co.uk/>)
- La Fageda(<http://www.fageda.com/>)
- 생활속(<https://smartstore.naver.com/myssok>)
- 그담(<https://idus.kr/clD0>)
- 하루숲(<https://harusoop.mysoho.com/>)
- 자유자재은행(<https://ip0153.cafe24.com/>)
- 스물세그루(<http://www.23gru.com/index.html>)
- 핸디아(<https://handia.modoo.at/>)
- 인천광역자활센터(<https://injiwon.or.kr/html/index.html>)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
- 부산광역자활센터(<http://www.busanjh.or.kr/>)
- 경기광역자활센터(<http://www.gpsc.or.kr/main/>)
- 경북광역자활센터(<http://gbssc.or.kr/>)
- 서울광역자활센터(<http://www.sjahwal.or.kr/>)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http://www.jahwal.or.kr/>)
- 인천광역시청(<https://www.incheon.go.kr/index>)
- 인천데이터포털(<https://www.incheon.go.kr/data/index>)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